



국민 삶의 질 2019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 2019



발간사

사회발전 척도로서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단일 경제지표는 이미 오래전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 나라의 종합적인 정책적 관심이 단순한 경제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노력이 21세기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통계청 통계개발원^{SR1}에서는 2011년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측정결과와 관련 데이터들을 대내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소통과 증거기반의 정책을 촉진시켜 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사회변화와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첫 개편을 하였습니다.

『국민 삶의 질 2019』는 2017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측정결과를 체계적인 영역 및 개별 지표별로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에 대한 측정결과와 최근 추세, 시계열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11개 영역은 ‘개인’의 주관적 웰빙, 소득·소비, 건강, 교육, 주거, 고용과 ‘사회적 관계’ 영역인 시민참여, 여가, 가족·공동체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11개 영역은 총 71개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통해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기존에 작성되고 있는 공식통계 중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사용하며 그 자료의 질, 적절성, 중립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지표들은 통계수치와 함께 그 의미에 대한 설명 및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현재 한국사회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추세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Pandemic}이 우리 국민들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 발생 전에 준비된 이번 보고서는 감염병 발생 후에 바뀌어진 삶의 질을 측정하게 될 향후 보고서와 함께 개인과 사회와 환경의 변화를 증거에 기반하여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더 촉발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데이터 기반 삶의 질 정책의 네비게이션으로 가까이 두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 이 『국민 삶의 질 2019』 보고서가 복수의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에 대한 분석보고서의 범례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통계개발원장



차례

PART 1 개요

작성배경	6
목적	7
삶의 질이란	7
프레임워크	8
지표 선정 기준	9
지표 체계	9
지표 관리 절차	11
최근 추세 판정 기준	12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13

PART 2 측정결과

01. 가족·공동체

독거노인 비율	21
가족관계 만족도	22
지역사회 소속감	23
사회단체 참여율	24
사회적 고립도	25



02. 건강

기대수명	29
건강수명	30
스트레스 인지율	31
주관적 건강상태	32
비만을	33
신체활동 실천율	34
자살률	35



03. 교육

유아교육 취원율	39
교육비부담도	40
학교교육의 효과	41
학교생활 만족도	42
대학졸업자 취업률	43
고등교육 이수율	44



04. 고용·임금

실업률	49
고용률	50
월평균 임금	52
저임금근로자 비율	53
근로시간	54
일자리 만족도	55



05. 소득·소비·자산

1인당 국민총소득	59
가구 중위소득	60
소득만족도	61
소비생활 만족도	62
가구순자산	63
가계부채비율	64
상대적 빈곤율	65



06. 여가

문화여가 지출률	69
여가시간	70
여가시간 충분도	7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72
1인당 여행일수	73
여가생활 만족도	74



07. 주거

자가점유가구 비율	77
주택임대료 비율	78
1인당 주거면적	7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80
통근시간	81
주거환경 만족도	82



08. 환경

1인당 도시공원 면적	85
미세먼지 농도(PM _{2.5})	86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88
대기질 만족도	89
수질 만족도	90
토양환경 만족도	91
소음 만족도	92
녹지환경 만족도	93
기후변화 불안도	94



09. 안전

가해에 의한 사망률	97
범죄피해율	98
야간보행 안전도	99
산재사망률	100
화재 사망자수	10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102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103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04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105



10. 시민참여

선거투표율	109
정치적 역량감	110
기관신뢰도	111
부패인식지수	112
시민의식	114
자원봉사 참여율	115
대인신뢰도	116



11. 주관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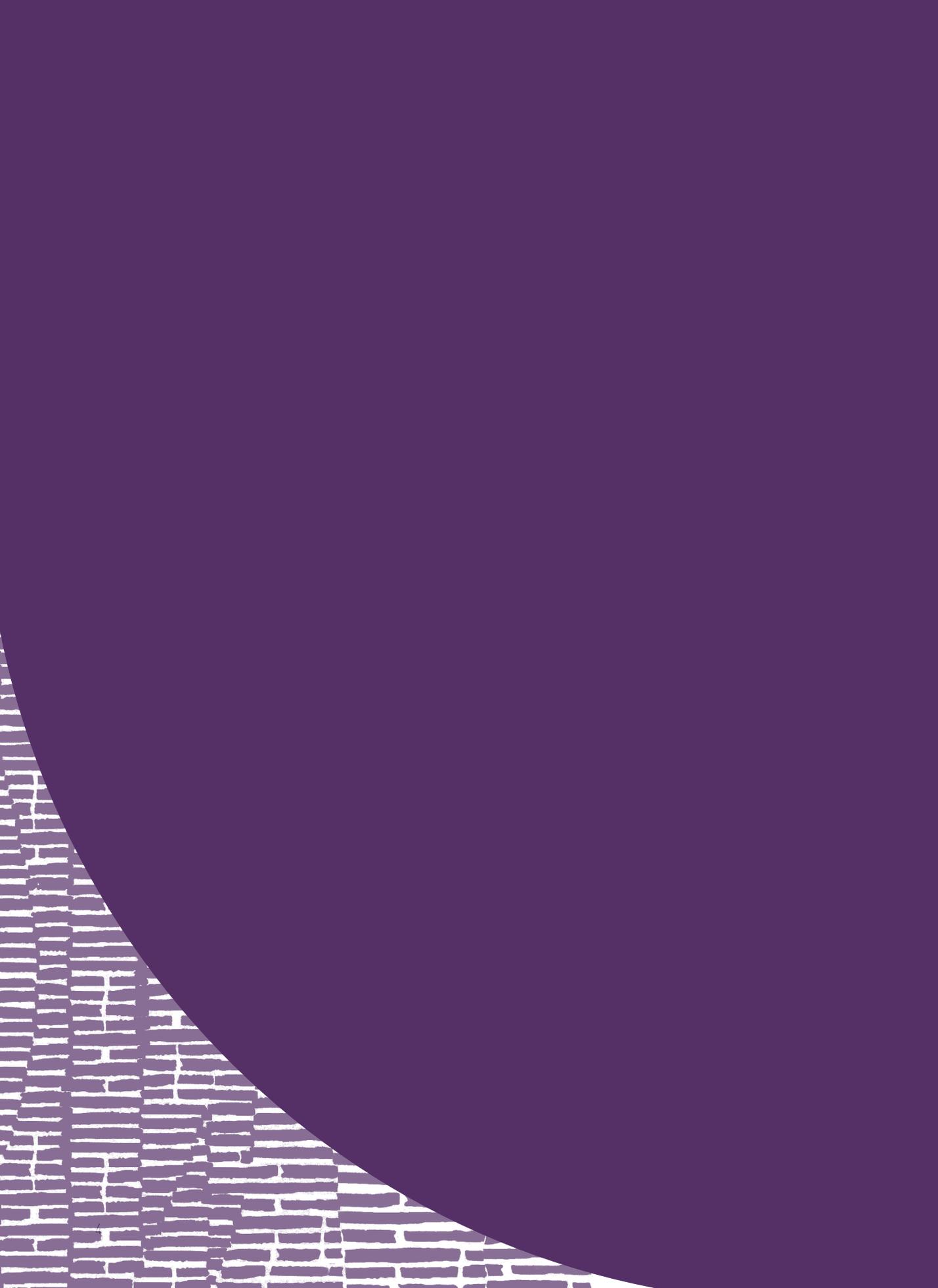
삶의 만족도	119
긍정정서	121
부정정서	122



Appendix

부록

지표 자료 출처	126
----------	-----



PART I.

개요

01 작성배경

02 목적

03 '삶의 질'이란?

04 프레임워크

05 지표선정 기준

06 지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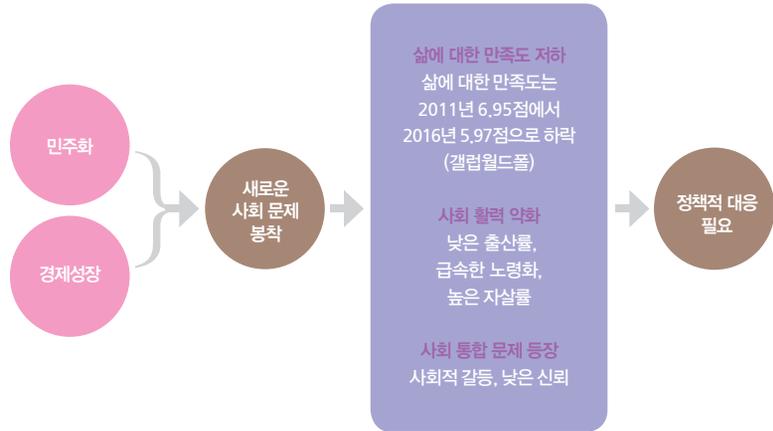
07 지표관리절차

08 최근 추세 판정 기준

09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01 작성 배경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 웰빙 측정 동향을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먼저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념적 갈등, 상대적 빈곤, 노사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 관심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1960~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경제중심의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국제적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프랑스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성취 및 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회발전의 측정에 있어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OECD는 2004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성과로 “How’s Life?”를 2011년에 발간하여 웰빙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비교 통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 and Beyond”에 대한 논의를 2009년에 출발하여 EU 2020년 정책전략에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단위 차원에서도 다양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02 목적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사회의 장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영역별 해결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연혁

2011년	외부 공동연구를 통한 삶의 질 기본틀 및 지표체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연구 • 9개 영역, 84개 지표
2012년 ~2013년	미생산 신규지표 개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지표체계 타당성 검토를 지표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영역, 83개 지표(삭제 9개, 신규 8개, 변경 6개) • 기존의 소득소비 영역을 4개(소득소비자산, 고용노동, 사회복지, 주거)로 분류
2014년	홈페이지 구축(qol.kostat.go.kr) 및 서비스 실시 내외부 전문가의 지표체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영역, 81개 지표(삭제 2개, 변경 13개) 지표검토위원회 구성
2015년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한 지표검토(환경영역 중분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영역, 81개 지표(삭제 1개, 신규 1개, 변경 7개)
2016년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한 지표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영역, 80개 지표(삭제 1개, 변경 3개)
2017년	「국민 삶의 질 2017」 보고서 작성 국민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VER 지식iN과 국민생각함 활용
2018년	지표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영역, 71개 지표(사회복지 영역 삭제, 삭제 17개, 신규 8개, 변경 8개)
2019년	아동청소년 및 고령자 지표구축 기반 마련

03 ‘삶의 질’이란

‘삶의 질’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삶의 질’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측정내용에 따라 삶의 질, 복지, 웰빙, 행복, 주관적 웰빙, 주관적 만족감 등 다양한 유사개념이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삶의 질, 복지, 웰빙 개념은 객관적 조건을 강조하는 반면, 주관적 웰빙, 만족도,

04 프레임워크

행복 개념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어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과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한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societal quality)’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11개 영역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로 구성된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주관적 웰빙을 중심으로 동심원 안에는 ‘개인’, 중간에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환경적 조건’이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차원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차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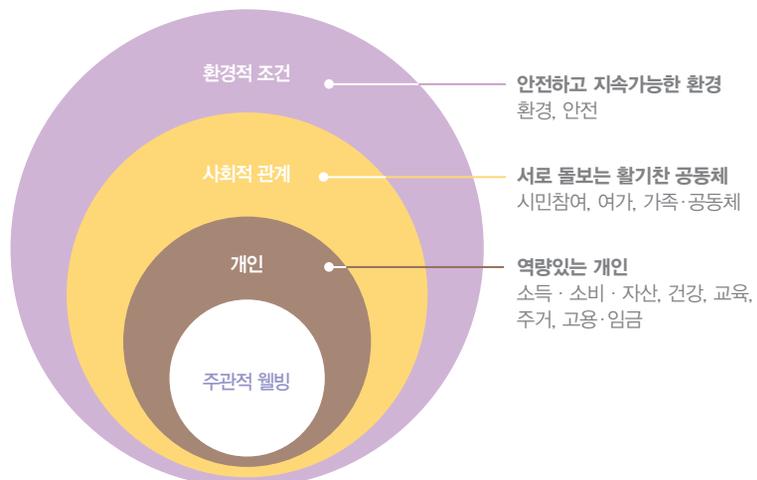
‘역량있는 개인’으로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경제적 여유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

사회적 관계 차원의 목표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로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

환경적 조건 차원의 목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05 지표 선정 기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각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된다. 지표는 크게 적절성, 자료의 질, 독립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지표 선정 기준

적절성

- 액면타당도: 본래 의도한 바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 산출에 초점: 투입/과정보다는 산출에 초점이 맞춰진 지표
- 이해용이성: 모호함 없이 쉽게 이해가능한 지표
- 정책반응성: 정책개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표
- 국내 상황 적합성: 우리 사회의 맥락에 부합되는 지표

자료의 질

- 공식통계: 삶의 질 측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식통계
- 포괄범위: 가능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지표
- 시계열 확보: 동일적으로 반복적인 측정자료가 누적

독립성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는 지표

06 지표 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는 2019년 12월 말 기준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42개(59.2%), 주관적 지표는 29개(40.8%)이다. 각 지표는 지표값의 증가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긍정방향 지표(+)와 부정방향 지표(-)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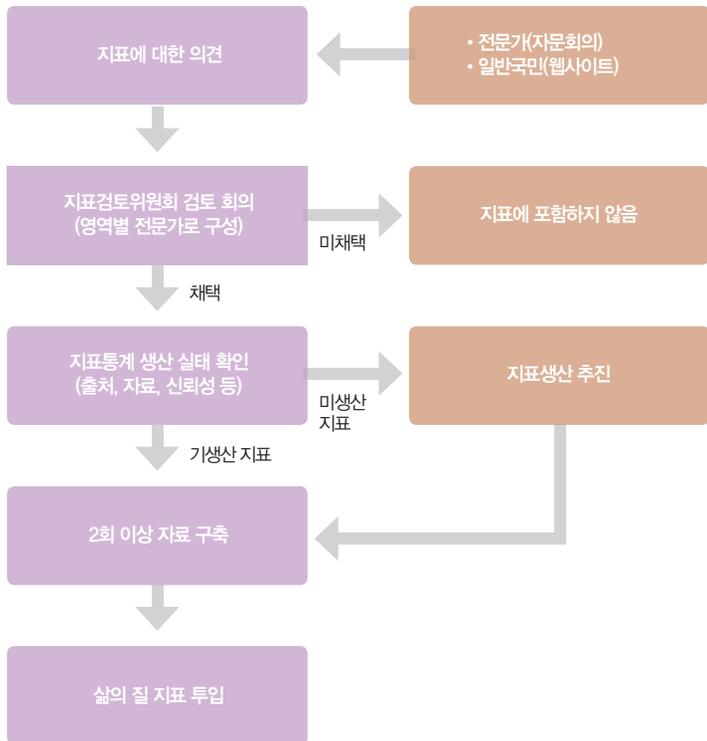
영역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가족·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비율 ⊖ 사회적 고립도 ⊕ 사회단체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만족도 ⊕ 지역사회 소속감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신체활동 실천율 ⊖ 비만율 ⊖ 자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 스트레스 인지율

영역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취업률 ⊕ 고등교육 이수율 ⊕ 대학졸업자 취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의 효과 ⊕ 학교생활 만족도 ⊖ 교육비 부담도
고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 ⊖ 실업률 ⊕ 월평균 임금 ⊖ 근로시간 ⊖ 저임금근로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GNI ⊕ 가구중위소득 ⊕ 가구순자산 ⊖ 상대적 빈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시간 ⊕ 1인당 여행일수 ⊕ 문화여가 지출률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생활 만족도 ⊕ 여가시간 충분도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주거면적 ⊖ 통근시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주택임대료 비율 ⊕ 자가점유가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만족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농도(PM_{2.5})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불안도 ⊕ 대기질 만족도 ⊕ 수질 만족도 ⊕ 토양환경 만족도 ⊕ 소음 만족도 ⊕ 녹지환경 만족도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에 의한 사망률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범죄피해율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산재사망률 ⊖ 화재사망자수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보행 안전도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시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투표율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역량감 ⊕ 시민의식 ⊕ 부패인식지수 ⊕ 대인신뢰도 ⊕ 기관신뢰도
주관적 웰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 긍정정서 ⊖ 부정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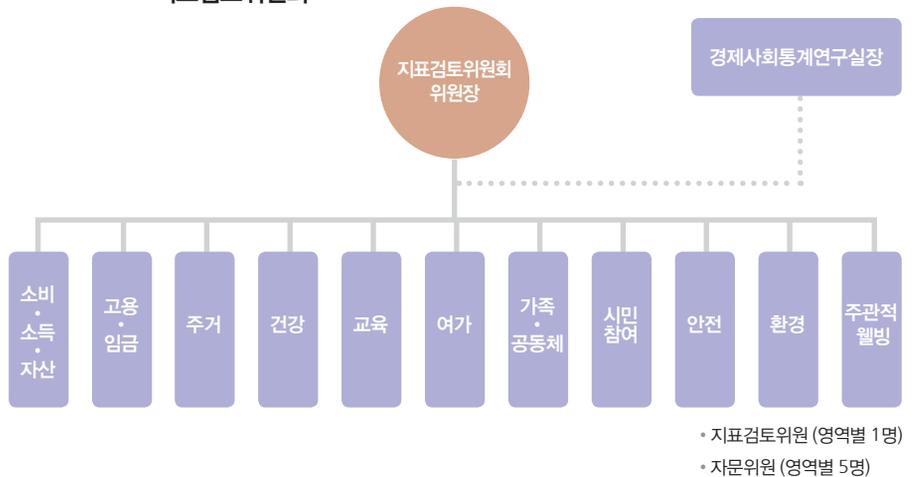
07 지표 관리 절차

개별 지표들은 최종 확정된 결과물이 아니며, 사회변화에 따라 통계자료의 생산현황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지표에 대한 검토 및 평가과정을 통해 지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11개 영역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표 관리 절차



지표검토위원회



08

최근 추세 판정 기준

71개의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최근 자료의 추세를 기준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지표별로 생산주기와 지표방향이 다르므로, 최근 측정값을 전기대비 측정값과 비교하여 각 지표가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방향에 따라서 '개선', '악화', '동일' 세 개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고용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개선됨으로 측정값이 전년대비 증가이면 '개선'으로 판정된다. 반면, '실업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의 증가가 삶의 질의 개선이 아니므로, 측정값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악화'로 표시된다. 즉 지표 측정값의 변화가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로 판정된다.

- 1년주기 자료의 경우는 전년도 자료와 비교, 2년 주기 이상인 경우는 최근 측정값 이전의 자료와 비교

추세표시



개선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
 $X_t - X_{t-1} > 0$



동일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 동일
 $X_t - X_{t-1} = 0$



악화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 개선과 반대 방향으로 변화
 $X_t - X_{t-1} < 0$

- 작성연도별 지표(2019년 12월 말 기준)
2019년 8개
2018년 54개
2017년 6개
2016년 2개
2015년 1개

지표업데이트 상황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 업데이트 시기가 서로 상이하다. 작성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바로 공표되는 지표가 있는 반면(예, 사회조사), 2~3년 이후에 공표되는 지표도 있다. 이에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분기별로 지표를 업데이트 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12월 말 업데이트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09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전체 11개 영역에 71개 지표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표별 최초 생산년도와 생산주기(연간 42개, 2년 주기 26개, 3~5년 주기 3개), 최근 생산년도의 차이로 인해 전체 기간에 걸친 동향trends 분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기와의 변화 추세만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71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는 49개(69.0%), 악화된 지표 18개(25.4%), 전기와 동일한 지표 4개(5.6%)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삶의 질 지표의 개선 비율을 비교해보면, 주관적 웰빙 영역의 개선지표 비율이 가장 높다. 주관적 웰빙 영역에 포함되는 3개 지표 모두 전기 대비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소비·자산 영역과 가족·공동체 영역에서 개선지표의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소비·자산 영역은 7개 지표 중 ‘가계부채비율’ 지표만 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공동체 영역은 5개 지표 중 ‘독거노인비율’ 지표만 악화된 것을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개선지표의 비율이 적은 영역은 안전과 주거 영역이다. 안전 영역은 개선지표의 비율이 55.6%로 9개 지표 중 5개 지표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영역은 개선지표 비율이 50.0%로 6개 지표 중 3개만 개선되고, 2개는 악화, 1개는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 대비 악화지표의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33.3%를 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화비율이 33.3%인 영역은 교육, 고용·임금, 여가, 안전, 주거 영역이다. 이들 영역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취약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개별 영역별로 주요 특징을 보면 주거 영역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이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물리적인 환경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안전 영역의 경우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이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와 산재사망률이나 화재사망자수 등 다른 분야에서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 영역의 경우 악화 지표는 9개 지표 중 2개에 불과하나, 악화지표가

-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연간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전기대비 비교한 결과로 2019년 12월 이후 업데이트 된 지표와는 통계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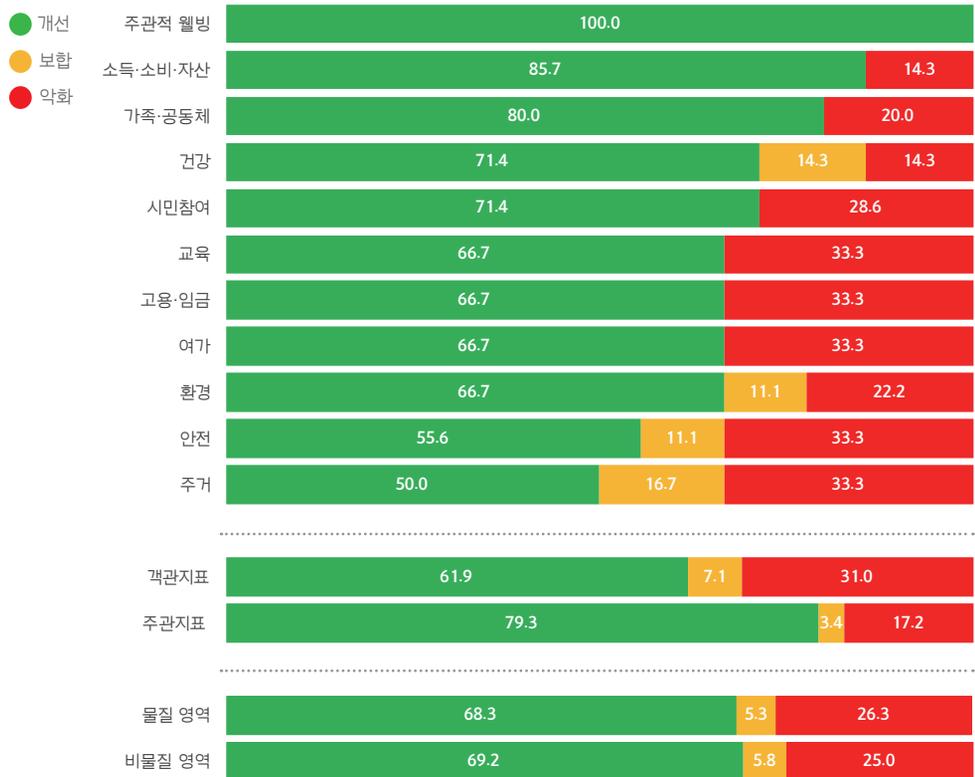
‘대기질 만족도’와 ‘수질 만족도’로 다른 환경 영역(소음, 녹지환경)에 비해 사람들의 체감도가 높은 환경 분야이다. 따라서 실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환경 영역의 삶의 질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고용·임금 영역의 경우 근로시간, 임금, 만족도 등 근로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전체 고용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는 모두 악화되었다.

여가 영역에서 여가시간 지표는 개선된 반면, 여가시간 충분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인 시간의 증가에도 개인들이 생각하는 여가시간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주관적 웰빙 영역의 모든 지표가 개선된 것과 함께 각 영역별로 포함된 주관적 지표들은 일부 지표(여가시간 충분도, 주거환경 만족도,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정치적 역량감)를 제외하고는 개선된 지표가 많음을 보여준다. 즉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기대비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상황보다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영역별 최근 추세(2019년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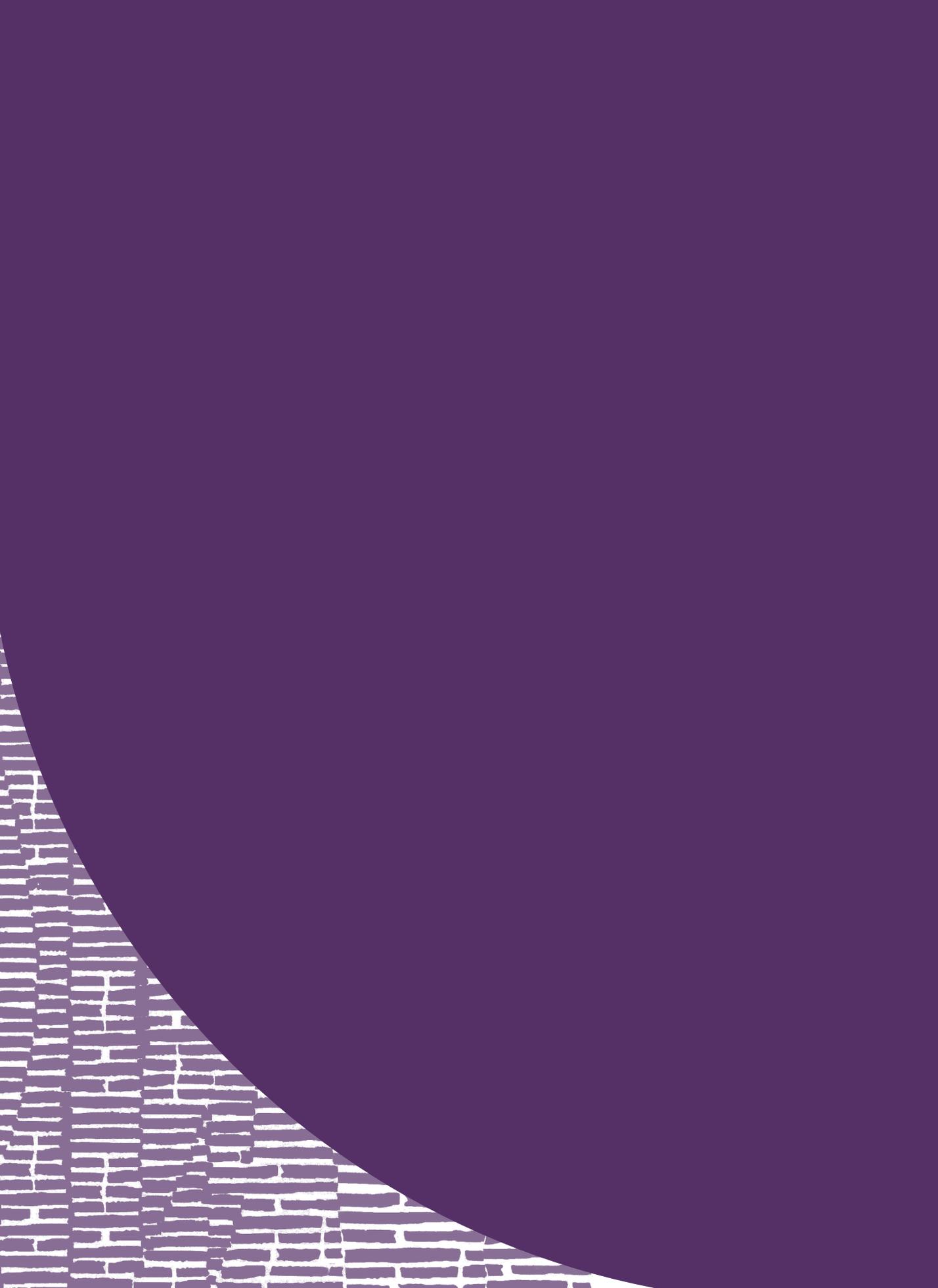


물질 영역에는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영역이 포함되고, 나머지 영역은 비물질 영역임.

● 전체지표 최근 추세(2019년 12월 말 기준)



개별지표별 지표값 및 관련지표는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index.go.kr/kind)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ART 2.

지표 측정 결과

01 가족·공동체

02 건강

03 교육

04 고용·임금

05 소득·소비·자산

06 여가

07 주거

08 환경

09 안전

10 시민참여

11 주관적 웰빙

01

가족·공동체

Family / Community



가족 · 공동체란?

가족과 공동체는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가족과 공동체는 공통적으로 구성원들 간 관계에 기초하여 돌봄 서비스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하여 보살핌, 지원, 안전을 제공받으며, 교육, 의료, 여가, 교제 등의 기회들을 누린다. 또한 정체감, 소속감,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은 가족과 공동체들을 통해 재생산된다.

최근 추세

가족·공동체 영역의 5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지표는 4개, 악화지표는 1개로 악화지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 고립도는 전기 대비 개선되어 사람들간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관계 측면은 개선된 반면, 가족 구성 형태를 보여주는 독거노인 비율은 악화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상 독거노인 비율의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측정지표

- ☹ 독거노인 비율
- 😊 가족관계 만족도
- 😊 지역사회 소속감
- 😊 사회단체 참여율
- 😊 사회적 고립도

독거노인 비율



Live-alone elderly rate

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독거노인 비율 = (65세 이상 1인가구수 ÷ 65세 이상 인구) × 100

2018년 19.4%, 전년대비 0.3%p 증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노후에 자녀들이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 또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대한 노인인구 집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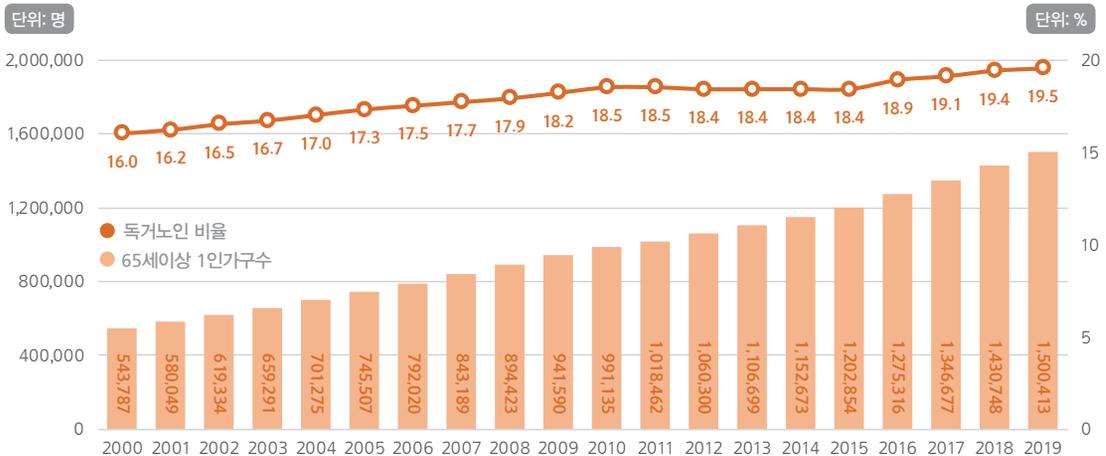
노인인구 중 특히 취약한 집단은 혼자 사는 노인이다. 한국은 일찍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만큼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국 노인에게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자일 수밖에 없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럴 수 없다. 특히 노인은 다양한 만성질환에 자주 시달리기 때문에 때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독거노인은 사회복지의 주요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다.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이나 신체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이 높은 국가이다. 한국 노인 중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더 높다. 이들은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때문에 이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의 수는 2019년 150만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19.5%이다.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05년 17.3%, 2010년 18.5%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8.4%에서 정체되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339만 4천명에서 2019년 768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비해 독거노인 수는 2000년 54만 3천명에서 2019년 150만 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0~2019년 독거노인 비율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7」, 「장래인구추계 2017」, 2019

가족관계 만족도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정의 자신의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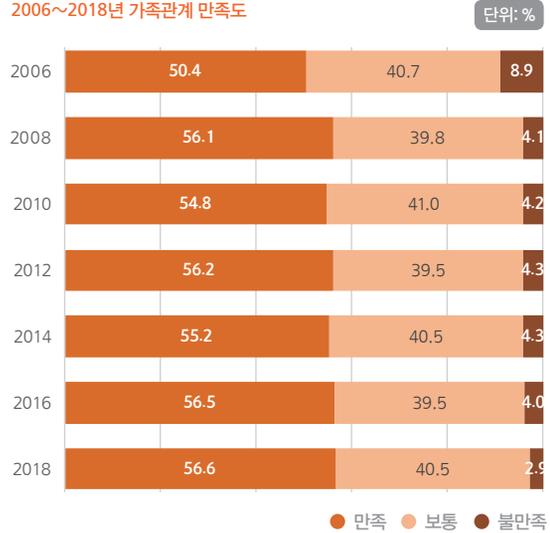
2018년 56.6%, 지난 10년간 비슷한 수준

원만한 가족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개인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귀속감과 유대, 친밀감의 원천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소망한다.

가족은 성별 및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집단이라는 특성상 잠재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최근 들어 한국의 가족은 규범에 의해 유지되는 제도에서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가족생활의 질적 수준을 나타낸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50.4%에서 2008년 56.1%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56.6%로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높다. 2018년 기준 남녀의 만족도는 각각 59.0%와 54.4%로 남자가 4.6%p 더 높으며, 2006년 이후 비슷한 추세이다. 연령대별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13~19세의 74.2%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47.8%만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준다. 13~19세의 만족도는 2012년 68.0%에서 매년 2%p 가량 증가하였으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2006~2018년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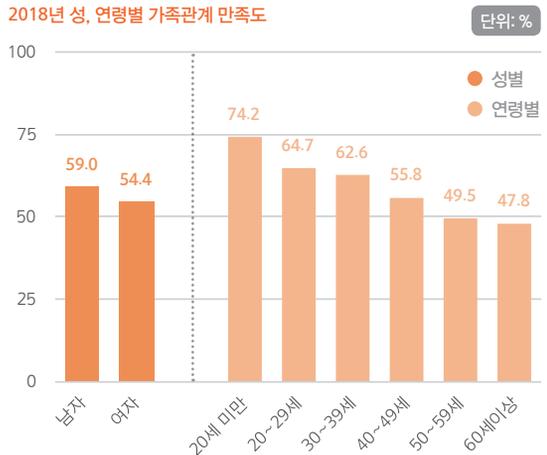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①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응답비율 합산,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의 응답비율 합산

②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8년 성, 연령별 가족관계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지역사회 소속감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정의 살고 있는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도)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018년 69.2%, 전년대비 7.0%p 증가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들 중 일부는 공동체나 지역사회로 대체되고 있다.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통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결속과 연대가 유지되면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을 것이고, 반대로 결속과 유대가 약하면 소속감도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의 결속과 유대는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최근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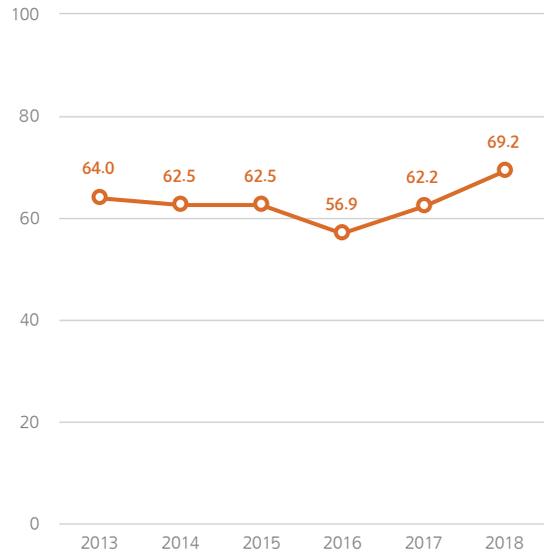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의 비율은 2018년 69.2%로 2017년 62.2%보다 7.0%p 증가하였다. 지역사회 소속감은 2013년 64.0%에서 2014년 62.5%, 2016년 56.9%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68.4%)보다 농촌지역(73.7%)에서 지역사회 소속감이 약간 더 높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59.9%로 낮게 나타난 반면 40대 69.1%, 50대 75.5%, 60대 75.4%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2013~2018년 지역사회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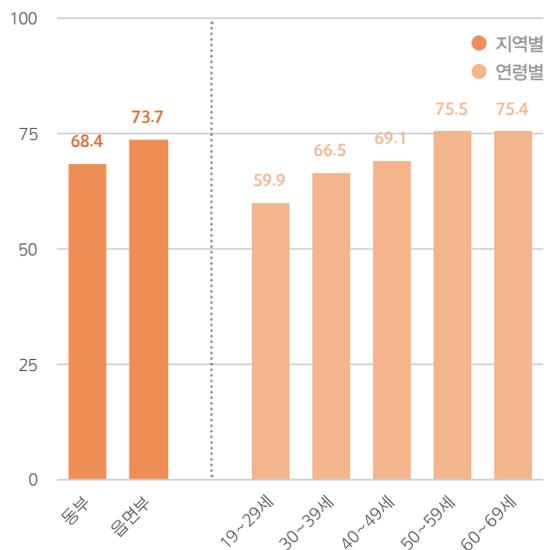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년 지역, 연령별 지역사회 소속감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단체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in social institutions

정의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지난 1년 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2017년 49.7%, 2015년과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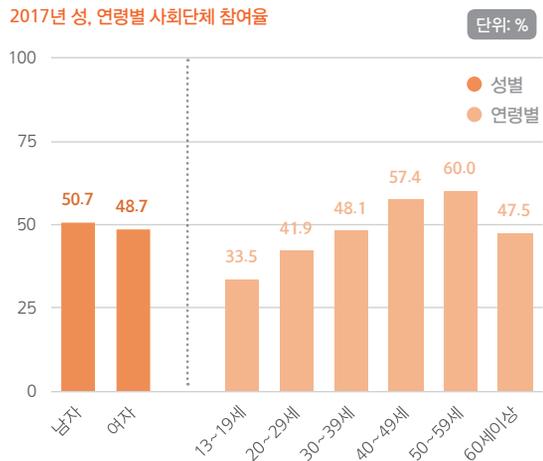
사회단체 참여는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최근 공동체적 삶의 기초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공동체 발전의 기초로 보고 있다. 다양한 관심과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들에 참여하는 정도와 참여하는 단체의 유형은 전반적인 참여의 수준과 특성을 보여준다.

사회단체에는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등을 모두 포괄하며, 사회단체 참여율은 지난 1년동안 이러한 사회단체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2006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13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이후 2017년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남자가 50.7%로 여자(48.7%)보다 높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가장 활발하다. 사회단체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인이 주로 참여하는 단체는 친목사교단체(78.2%)나 취미단체(43.6%), 종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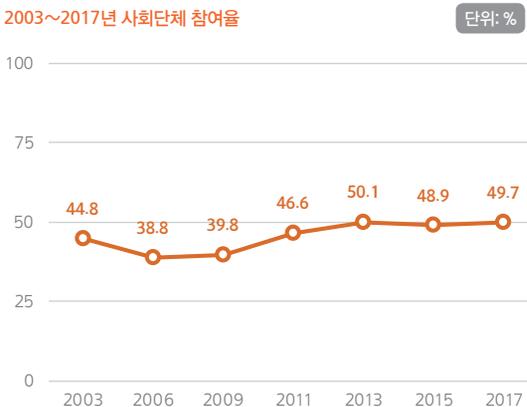
체(28.2%)와 같은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사적인 영역에 사람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현상은 한국인의 사회활동이 사회적 자본으로 잘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 성, 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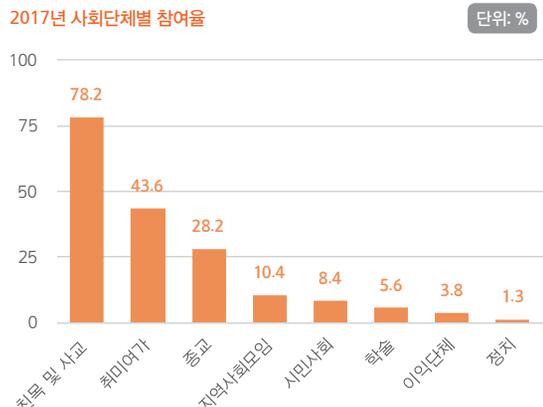
2003~2017년 사회단체 참여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7년 사회단체별 참여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① 지난 1년간 참여한 단체의 3순위 응답을 합산한 비율임
② 기타 제외

사회적 고립도



Social relation network

정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각 상황(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 돈을 빌릴 경우, 이야기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산술평균

2019년 28.6%, 2017년과 비슷한 수준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자원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적, 경제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과 관련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질과도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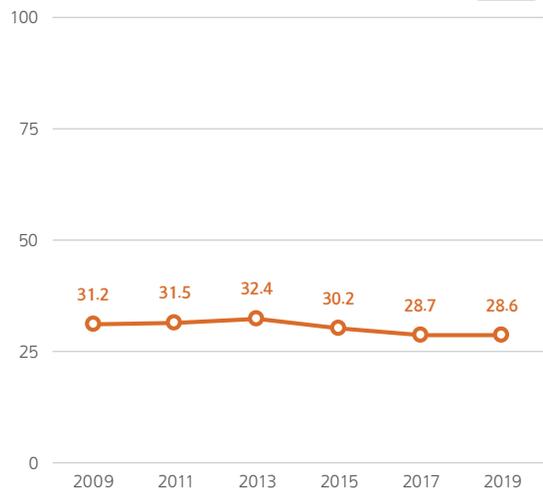
위기상황에서 인적, 경제적,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사회적 고립도는 2019년 28.6%로 2017년(28.7%)과 거의 유사하다. 2009년 31.2% 이후 최근 감소추세이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20.4%, ‘급히 돈을 빌릴 곳’은 48.6%,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는 16.7%가 없다고 응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29.5%)가 여자(27.7%)보다 사회적 고립도가 약간 더 높은 편이다. 인적, 경제적 도움은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이야기 상대’는 남자는 18.8%가 없다고 응답하여 여자(14.6%)보다 4.2%p 높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도는 증가하여 60세 이상은 38.3%로 20대(20.7%)에 비해 17.6%p 높다. 60세 이상의 경우 ‘집안일 부탁’은 24.9%, ‘경제적 도움’은 64.5%, ‘이야기 상대’는 25.5%가 없다고 응답하여 특히 경제적이거나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데 취약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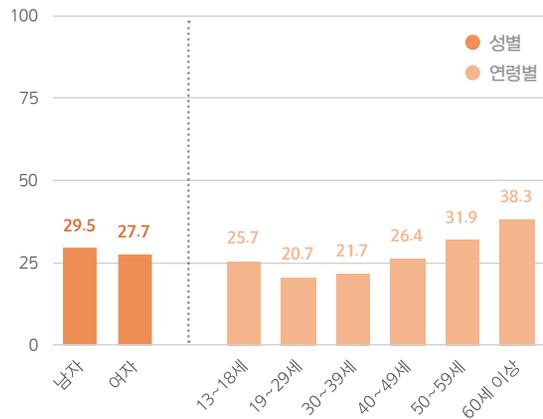
2009~2019년 사회적 고립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1년 이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9년 성,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02

건강

Health



건강이란?

건강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삶의 양 혹은 길이)와 더불어 얼마나 잘 사는가(삶의 질)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좋은 건강 상태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높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도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건강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강 영역은 개인들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로 구성된다.

최근 추세

건강 영역에 포함되는 7개 지표 중 개선지표는 5개, 악화지표 1개, 동일한 지표1개로 나타났다.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던 기대수명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수명, 신체활동 실천율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의 건강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비만율은 악화추세에서 최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인지율과 주관적 건강상태도 전년대비 개선되었다. 다만 정신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자살율은 2011년 이후 감소하여 개선추세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였다.

측정지표

- ☺ 기대수명
- ☺ 건강수명
- ☺ 스트레스 인지율
- ☺ 주관적 건강상태
- ☺ 비만율
- ☺ 신체활동 실천율
- ☹ 자살률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정의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측정 방법 0세의 기대여명

2018년 82.7세로 전년과 동일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사망과 질병 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고, 사망수준은 인구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 사망수준이 낮아지면 인구의 수명이 늘어난다. 기대수명이나 영아사망률은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한다. 정확하게는 '0세의 기대여명'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8년 82.7세로 약 20년 늘어났다. 2000년 76.0세에서 2005년 78.2세, 2010년 80.2세로 증가하여 2000년 이후로는 매년 약 0.3~0.5세 정도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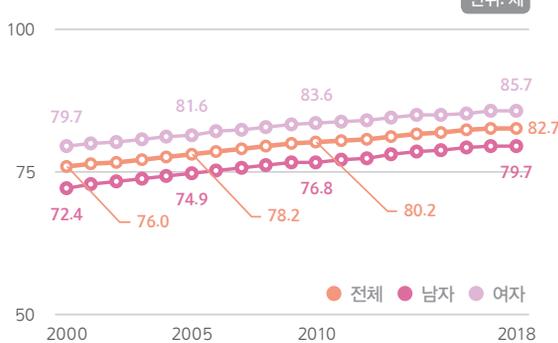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2018년 현재 여자의 기대수명은 85.7세로 남자의 79.7세에 비해 6년이나 길다. 이러한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2000년 남녀 간 차이가 7.3년이었던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대수명은 국가간 건강수준을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0년을 전후로 80세까지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2017년 OECD 36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0.7세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이다. 일본이 84.2세

로 가장 높으며, 스위스(83.6세), 스페인(83.4세), 이탈리아(83.0세)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미국은 78.6세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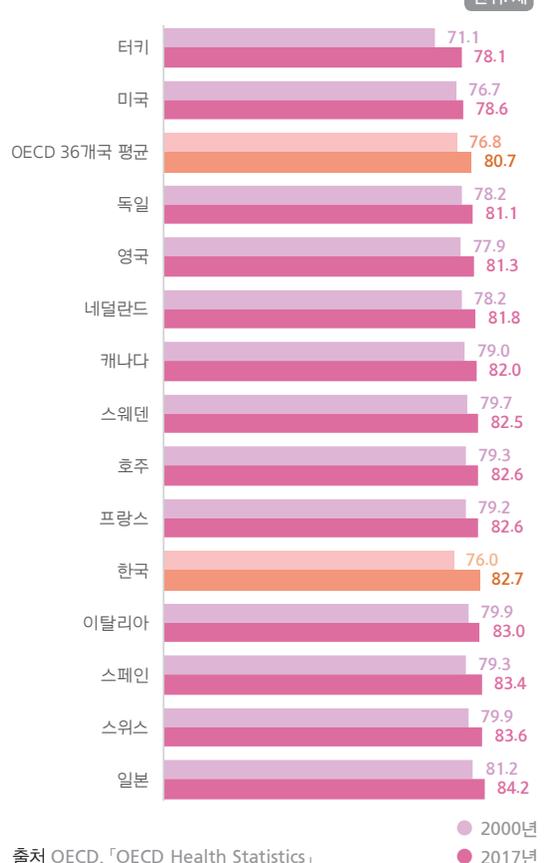
2000년 OECD 국가 평균 기대수명은 76.8세로 지난 17년간 약 4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2000년 기대수명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같은 기간 6.7세 증가하여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큰 증가폭을 보인다. 기대수명이 높은 나라인 일본이나 스위스, 스페인 등의 나라 모두 같은 기간 약 3세 정도 증가하였다.

2000~2018년 기대수명



출처 통계청, 「생명표」, 2019

2000년, 2017년 OECD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정의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측정 방법 기대수명에서 전체 인구의 평균 질병 및 장애 기간을 제외

2016년 73.0세, 2010년 보다 1.6세 증가

기대수명이 양적인 측면에서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라면, 건강수명은 건강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오래 살고 있지만, 고통에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다. 단순히 기대수명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사회의 건강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순 없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나머지 수명을 말하는 것으로 건강한 상태로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보여준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건강수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8.1세에서 2016년 73.0세로 5년 정도 늘어났다. 건강수명의 연장은 한국인의 건강수준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기대수명이 같은 기간 6.4세 늘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정도가 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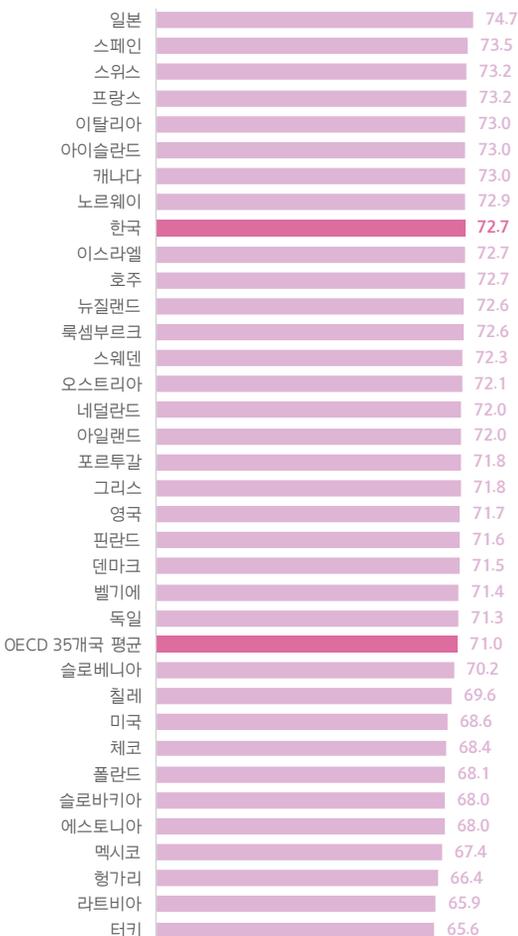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건강수명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2016년 남자는 70.7세, 여자는 75.1세로 여자가

4.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성별 격차는 2010년(5.1년)보다 감소하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2015년 OECD 35개국 평균 건강수명은 71.0세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높다.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건강수명도 일본이 74.7년으로 길고,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 73년 이상으로 길다.

2015년 OECD 국가의 건강수명

단위: 세



2000~2016년 건강수명

단위: 세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스트레스 인지율



Stress self-recognition

정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느낀 스트레스에 대해 '매우 많이 느꼈다' 또는 '느낀 편이다'의 응답비율을 합산

2018년 54.4%, 2016년보다 0.4%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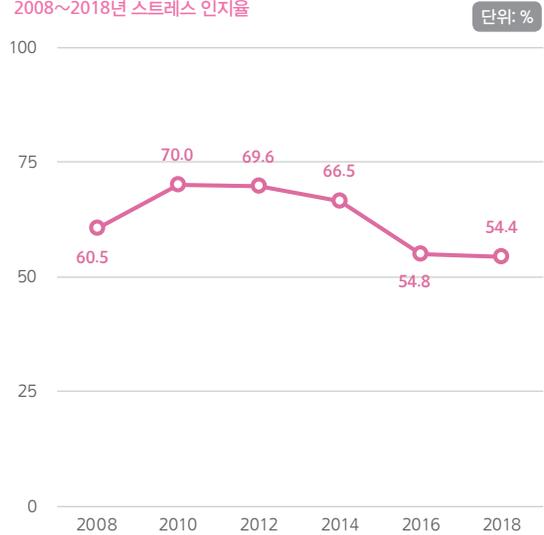
개인의 건강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측정되며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잦은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건강과도 연관될 수 있어 개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는 비율로 측정되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8년 54.4%로 2016년 54.8%보다 0.4%p 감소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08년 60.5%에서 2010년 70.0%로 증가한 이후 2010년부터 감소 추세이다. 특히 2014년 66.5%에서 2016년 54.8%로 크게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53.1%, 여자 55.6%로 여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 성별차이는 2016년보다는 줄었지만, 이러한 경향이 일관되지는 않는다. 2010년에는 남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았고, 2014년에는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낮아지거나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신건강이 신체적 건강과는 달리 경제활동이나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대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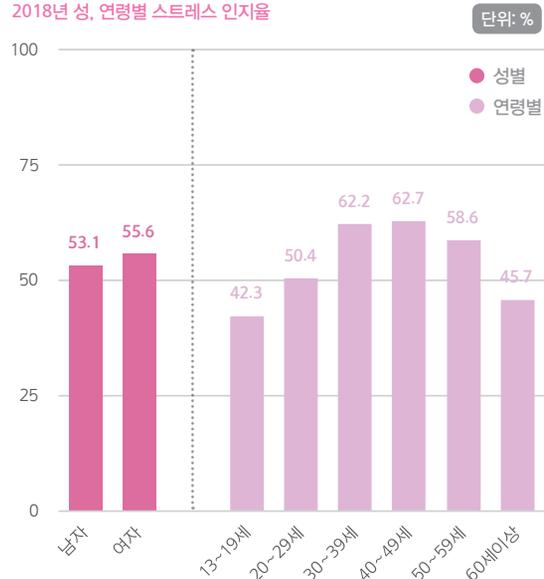
2008~2018년 스트레스 인지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8년 성, 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관적 건강상태



Self-reported health

정의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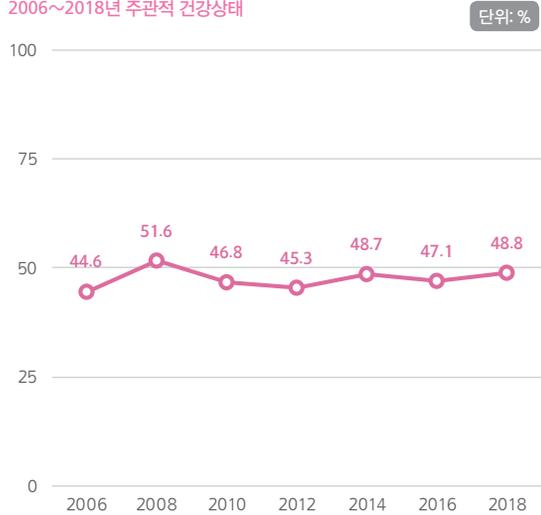
2018년 48.8%, 2016년보다 1.7%p 증가

건강상태는 전통적으로 기대수명이나 유병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의학적 진단 여부와 별개로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도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수준을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게 된 것이다. 본인이 고혈압으로 투약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면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인의 건강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로 파악한 주관적 건강상태, 즉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 현재 48.8%로 2016년 47.1%에 비해 1.7%p 증가하였다. 2006년 44.6%에서 2008년 51.6%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46.8%로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이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자는 52.0%가 여자는 45.7%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건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 10대의 경우 75.7%인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7.2%만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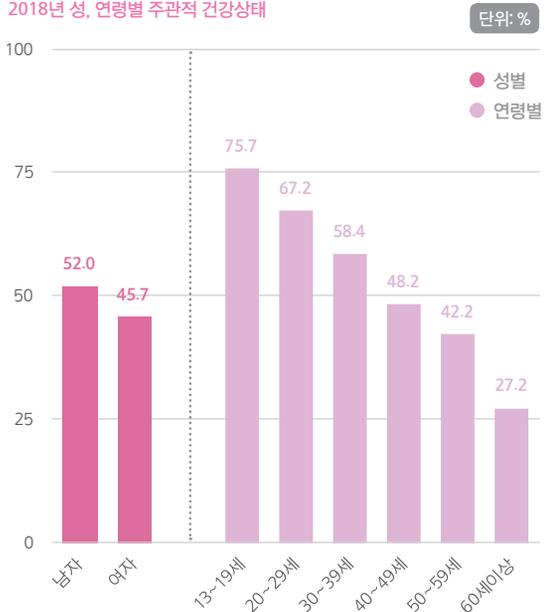
2006~2018년 주관적 건강상태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8년 성, 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비만율



Obesity rate

정의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조사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²' 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2017년 34.1%, 전년대비 0.7%p 감소

비만은 비교적 새롭게 부각된 건강 위험요인으로 만성 질환 발생의 중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비만은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영양의 과잉 섭취, 신체활동의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비만은 생활습관인 흡연이나 음주와 달리 경제발전과 생활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다. 한국의 비만율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지는 않지만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비만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의 관계가 높아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비만율은 2017년 34.1%로 2016년 34.8%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비만율은 2001년 29.2%에서 2005년 31.3%로 증가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6년 34.8%로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41.6%, 여자가 25.6%로 남자의 비만율이 16.0%p 높다. 남자의 비만율은 2001년 31.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반면, 여성의 비만율은 2001년 27.4%에서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24~28%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비만율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높아져서 50~60대가 가장 높고, 70대에 들어 다시 낮아진다. 2017년 50대와 60대의 비만율은 38%이고, 20대의 비만율은 29.4%로 약 10%p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2001~2017년 비만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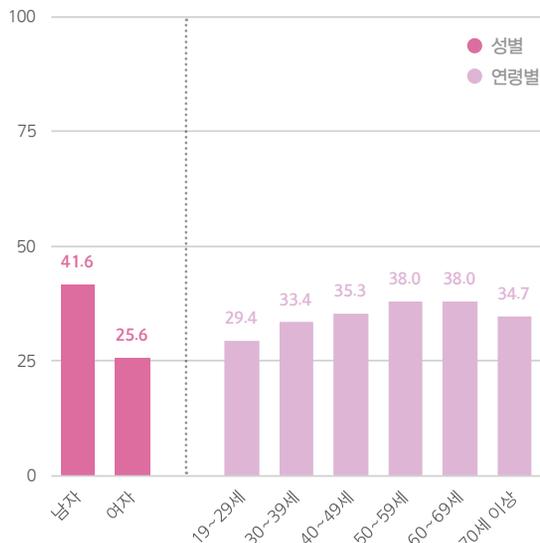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석 2005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2017년 성, 연령별 비만율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석 성별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신체활동 실천율



Physical activity rate

정의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평소 규칙적 운동(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타기 등)을 '실천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18년 38.3%, 2016년보다 0.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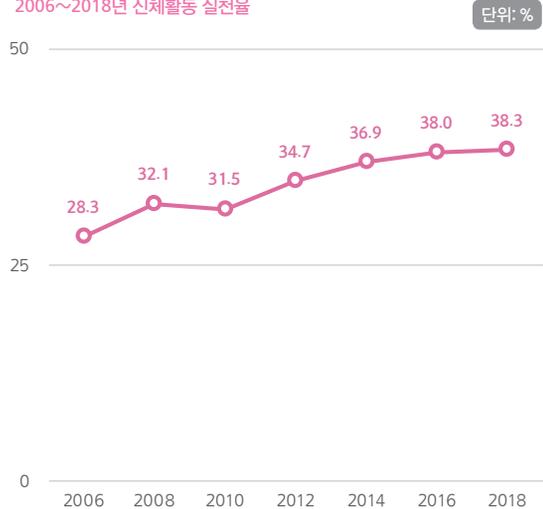
신체활동은 건강증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신체활동은 대중적이란 측면에서 전문적인 운동(스포츠)과 차이가 있고, 신체 전반의 근육을 단련하고 심폐기능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동작만 반복하는 노동과도 다르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 스트레칭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체활동은 비만의 예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타기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 조사로 파악한 한국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6년 28.3%에서 2018년 38.3%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40.7%, 여자 35.9%로 남자가 더 높고,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39.2%로 농촌지역(33.9%)보다 높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이 40.8%와 43.3%로 4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30대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33.2%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낮다. 이러한 성별, 지역별, 연령별 차이는 2006년 이후 계속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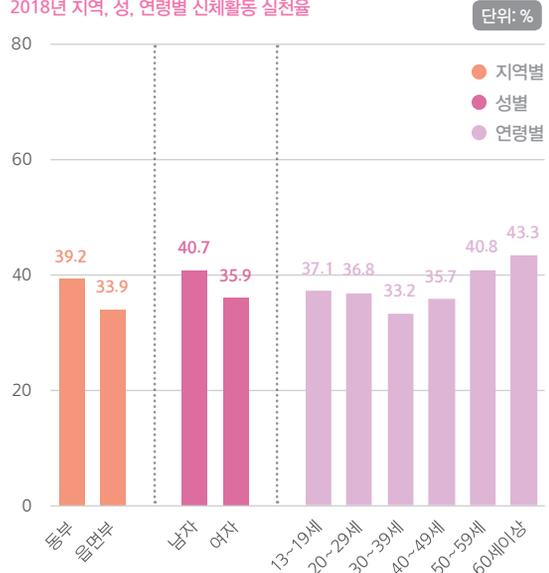
2006~2018년 신체활동 실천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8년 지역, 성, 연령별 신체활동 실천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자살률



Suicide rate

정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측정 방법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2018년 26.6명, 전년대비 2.3명 증가

모든 자살이 삶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은 서로 관계가 있다. 자살은 우울증과 연관되어 개인의 정신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높다. 또한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며, 특히 사회적인 급격한 변동이나 불안정성의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 자살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8년 전체 자살자수는 13,670명으로 인구 십만 명당 26.6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인구 십만 명당 2.3명이 증가하였다. 자살률은 2000년 인구 십만 명당 13.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24.8명으로 5년 간 인구 십만 명당 1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31.7명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38.5명으로 여자(14.8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자살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나 특히 70세 이상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40~60대의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32명 내외이나 70대는 48.9명, 80대에서는 69.8명으로 증가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 한국의 자살률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2016년 OECD 평균 자살률은 11.5명이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국가인 헝가리와 일본의 자살률도 각각 16.2명, 15.2명으로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01년 이후 OECD 평균 자살률은 감소추세이며, 2001년에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인 헝가리, 핀란드, 일본 등의 국가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6명 미만의 자살률을 보인다.

2001~2018년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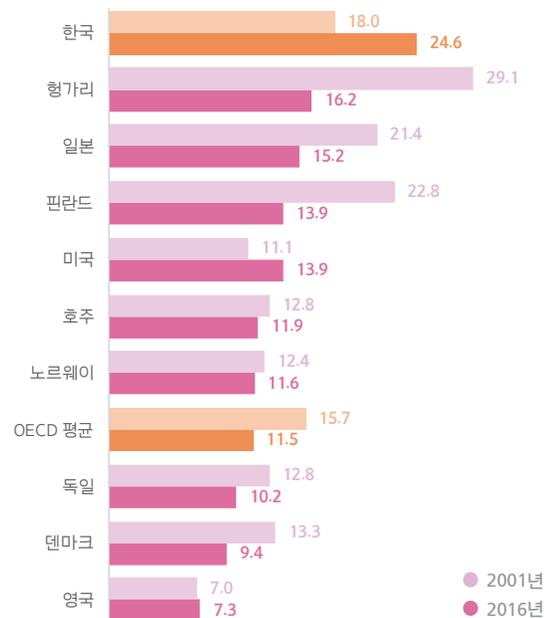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석 연령표준화 자살률임.

2001년, 2016년 OECD 주요국의 자살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주석 ① 연령표준화 자살률임.
② 덴마크는 2015년 자료임.

03

교육

Education



교육이란?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물질적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발전을 통한 사회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다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구성원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수단으로 평가되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게 해준다. 교육 영역은 삶의 질과 연관되어 교육기회가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는가(교육 기회), 교육의 삶의 질 제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가(교육자원) 그리고 기회의 확충과 자원투입의 확충을 통해 실시된 교육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가(교육성과)로 분류된다.

최근 추세

교육 영역에 포함되는 6개 지표 중 개선 지표는 4개, 악화지표는 2개로 개선지표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이수율과 함께 교육성과를 보여주는 주관지표인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개선되었으며, 교육비부담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육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개선추세를 보이는 지표였으나 최근 추세는 악화로 나타났다.

측정지표

- ⊖ 유아교육 취업률
- ⊕ 교육비부담도
- ⊕ 학교교육의 효과
- ⊕ 학교생활 만족도
- ⊖ 대학졸업자 취업률
- ⊕ 고등교육 이수율

유아교육 취원율



Preschool enrollment rate

정의 만 3~5세 인구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비율

측정 방법 유아교육 취원율 = ((만 3세 이상 어린이집 보육아수 + 유치원 재적원생수) ÷ 취학적령(만 3~5세)인구) × 100

2018년 93.5%, 전년대비 0.4%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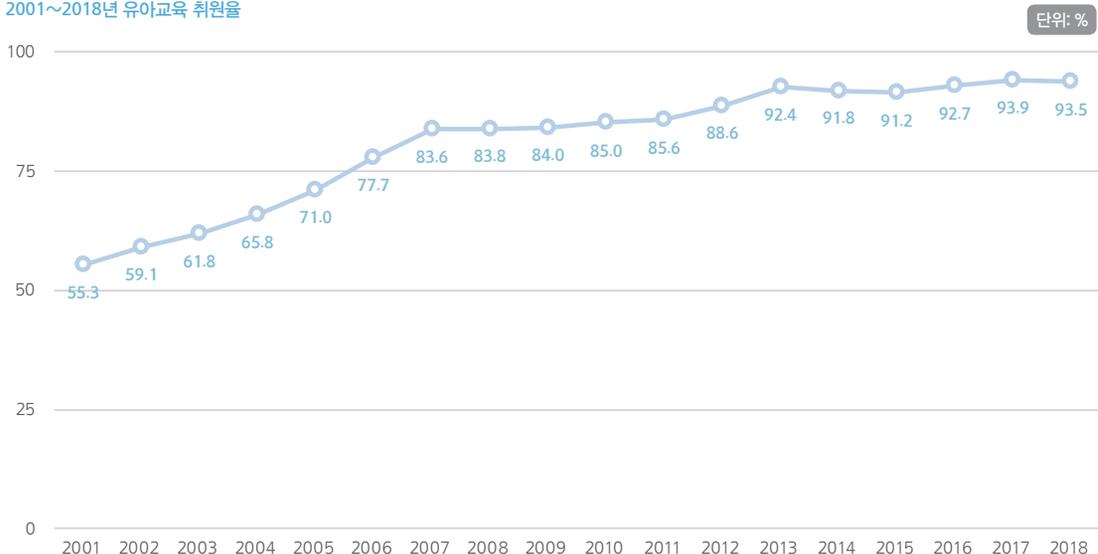
유아교육 취원율은 교육기회가 해당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공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초등교육 이전의 교육기회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한국사회에서 초중등단계의 교육기회는 거의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아교육 취원율 지표는 초등교육 이전의 교육기회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2013년부터 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함께 만3~5세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이 도입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시설과 보육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기관 모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기존의 유치원 취원율 대신 두 기관 중 하나라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비율로 지표를 작성하였다. 유치

원 대상연령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해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아동 중 만 3세 미만이나 만 6세 이상 아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매우 적은 비율로 실제 지표값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2018년 유아교육 취원율은 93.5%로 만 3~5세 아동의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유아교육 취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지표로 2001년 55.3%에서 거의 17년 만에 93.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4~2007년까지 매년 4~6%p 가량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 이후 2008년부터 1%p 미만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88.6%로 전년대비 3.0%p, 2013년에는 92.4%로 3.8%p 증가하였고, 90%를 넘어선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2018년 유아교육 취원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석 취학적령인구(만3~5세)는 추계인구를 사용함.

교육비부담도



Degree of education cost burden

정의 학부모 중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학생 자녀를 둔 가구주 중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되는지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 또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

2018년 64.4%, 2016년보다 0.9%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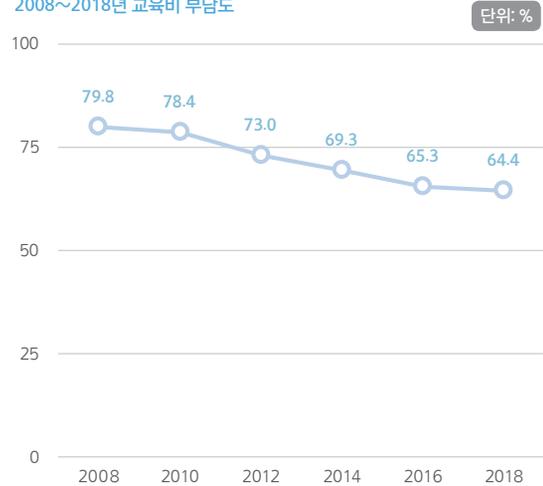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 가구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교육비 부담도는 가구소득에 비교했을 때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수준을 보여준다.

가구의 교육비 부담도는 2018년 64.4%로 2016년보다 0.9%p 감소하였으며, 2008년 79.8%에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교육비 부담도는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구주의 연령대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연령대별로는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시기인 30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40대 이상이 되면 높아진다. 2018년 30대 가구주의 경우 55.9%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40대는 66.5%로 가장 높고, 50대가 64.1%, 60대가 65.1%로 30대 보다 약 10%p 정도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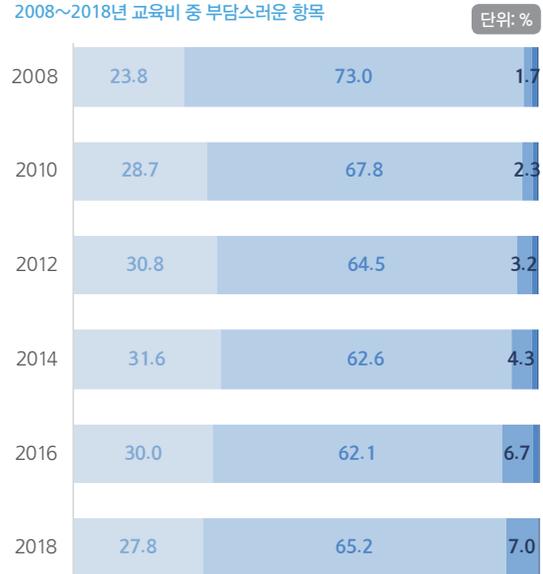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보충교육비(65.2%)로 나타났으며, 학교납입금(27.8%), 하숙 및 기숙사비(7.0%)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보충수업비에 대한 부담 비율은 약간 증가하고 학교납입금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하숙 및 기숙사비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2008~2018년 교육비 부담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008~2018년 교육비 중 부담스러운 항목



● 학교납입금 ● 보충교육비 ● 하숙·자취·기숙사비 ● 교재비 ● 기타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학교교육의 효과



Efficiency of school education

정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학교교육의 '생활, 취업 및 직업 활용' 효과에 대해 '매우 효과 있다' 또는 '약간 효과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

2018년 35.6%, 2016년보다 0.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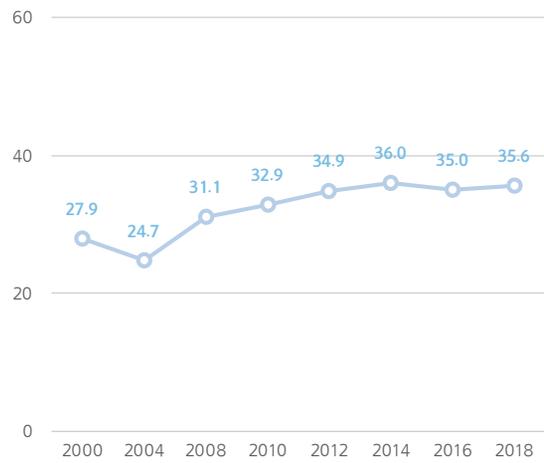
객관적인 수준의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개인들이 학교교육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이다.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관적인 지표로 학교교육이 생활, 취업, 직업 등에서 활용하는데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통해 학교교육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준다.

학교교육이 생활과 취업, 직업 면에서 활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 35.6%로 2016년 35.0%에 비해 0.6%p 증가하였다. 2000년 27.9%에서 2008년 31.1%, 2014년 36.0%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최근 약간 감소하였다.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비교적 높고, 30~40대가 상대적으로 낮다. 30~40대는 30% 미만으로 가장 낮은 반면 13~19세 연령층의 경우는 43.6%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도 43.2%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이 대부분인 초등학교 이하에서 학교교육의 효과는 45.3%로 높은 반면,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각각 32.7%, 33.7%로 대졸 이상이 약간 높긴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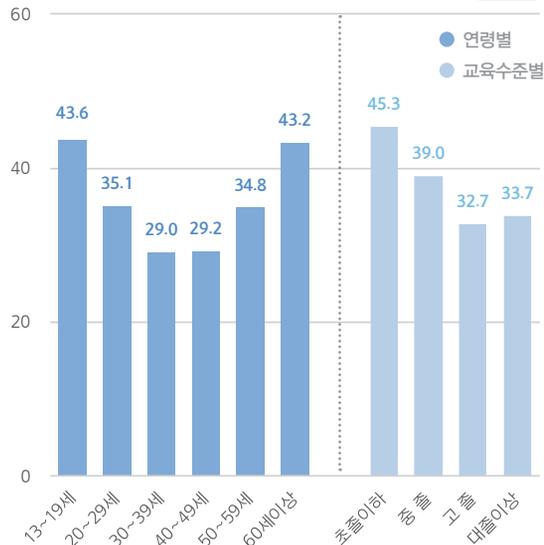
2000~2018년 학교교육의 효과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8년 연령, 교육수준별 학교교육의 효과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학교생활 만족도

School life satisfaction



정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

측정 방법 중·고등학생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018년 58.0%, 2016년보다 4.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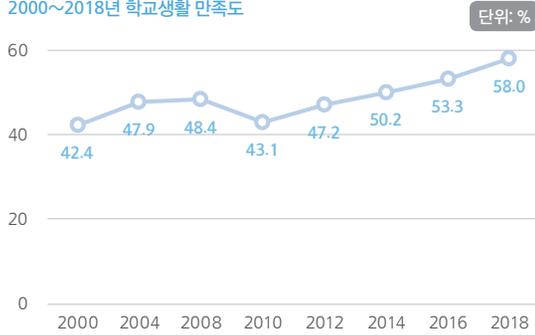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 및 시설 수준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조건과 과정을 측정하기 어렵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생활만족도와 같은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습자들의 학교생활 참여와 활동을 살펴보는 지표로 학습과정과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학습자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삶의 질이나 웰빙을 진단하는데 의미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58.0%로 2016년 53.3%보다 4.7%p 증가하였다. 2000년 42.4%에서 2008년 48.4%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만족도가 59.2%로 여학생(56.8%)보다 약간 높고,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58.4%로 농촌지역(55.8%)보다 높다.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는 다른 관점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OECD가 교사전문성, 학생성취수준, 교육방법, 면학분위기, 학생관리, 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활동 등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92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 그러나 OECD 평균보다 0.1점 이상 낮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 역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한국의 학교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needs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존의 교육내용과 교육활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00~2018년 학교생활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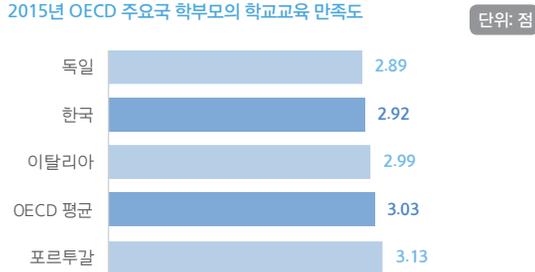
주석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8년 지역, 성별 학교생활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5년 OECD 주요국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출처 OECD, PISA 2015 Database

주석 학부모 학교교육만족도는 학부모들이 교사전문성, 학생들의 성취수준, 교육방법, 면학분위기, 학생관리, 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활동 등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4점 척도)의 평균점수임.

대학졸업자 취업률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정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 중 취업자의 비율

측정 방법 대학졸업자 취업률 = (취업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 × 100

2017년 66.2%, 전년대비 1.5%p 감소

앞서 학교교육의 효과 지표가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관적인 측면의 지표라면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효과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대학졸업자의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체제의 인적자원개발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조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정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2017년 66.2%로 집계되었다. 지난 7년간(2011~2017년) 최고 68.1%에서 최저 67.0% 사이에서 미미하게 등락하다 2017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2017년 남자의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67.8%, 여자는 64.8%로 남자가 여자보다 3.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의 취업률은 2011년 64.5% 이후 2016년 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남녀 간 대학졸업자 취업률의 차이는 2011년 6.2%p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취업대상자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취업자

조사기준일(12월31일) 당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2011~2017년 대학졸업자 취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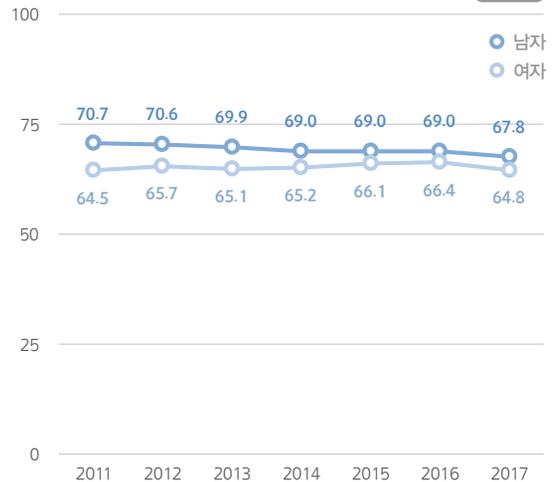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주석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이 포함됨.
②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하여 산출함.

2011~2017년 성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주석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이 포함됨.
②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하여 산출함.

고등교육 이수율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정의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기관 이수자 ÷ 25~64세 인구) × 100

2017년 49.0%, 전년대비 1.3%p 증가

고등교육 이수율은 사회의 교육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기회가 충족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학졸업자가 많다는 것은 국가발전의 기반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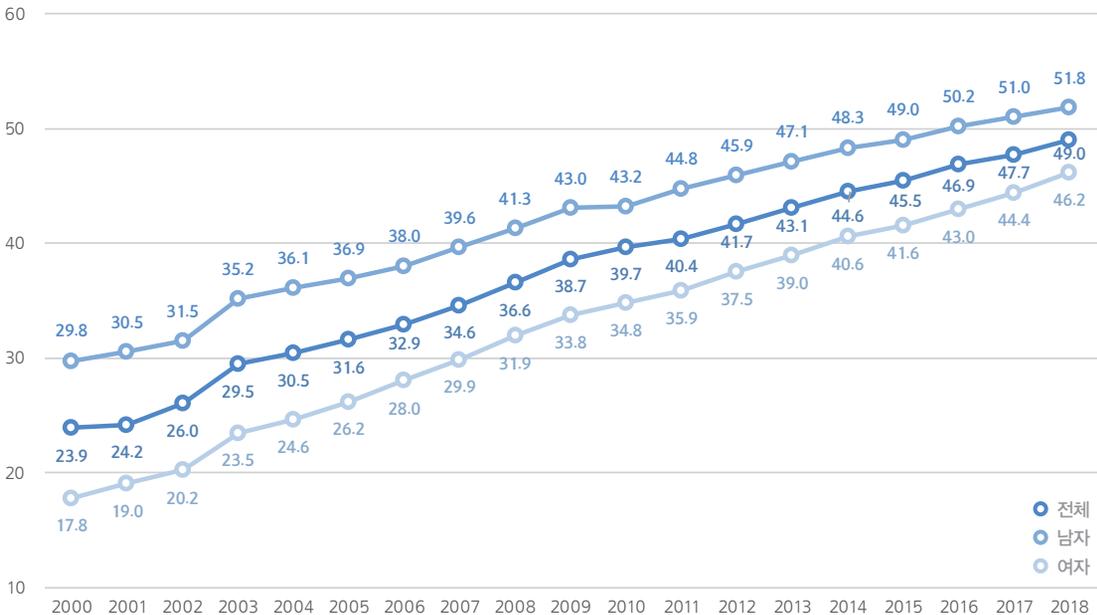
한국은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열도 높다. 국민의 교육기회를 보여주는 취학을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한국인은 이미 세계에서 학교교육

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기회가 충족되자 국민은 대학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소수에게만 대학을 허락하던 정부는 1981년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여 대학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나, 그럼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그러자 정부는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정원을 자율화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대학교육을 받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성인(25~64세) 인구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즉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0년에 23.9%였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이다. 이후 고등교육 이

2000~2018년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주석 고등교육이수율은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자(tertiary)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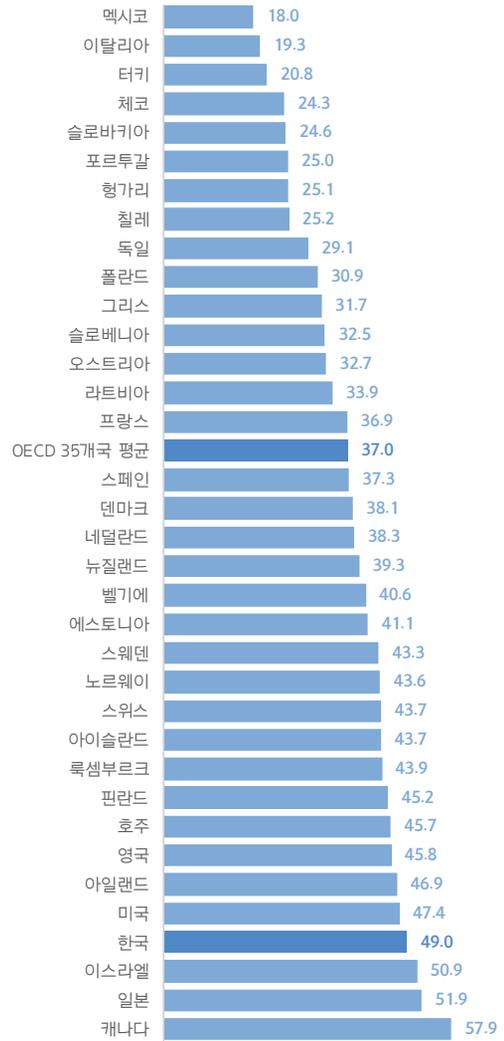
수율은 두 배 이상 늘어나 2018년에는 49.0%에 달하게 되었다.

성별로 보면, 2018년 남자는 51.8%, 여자는 46.2%로 남자가 5.6%p 더 높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면 남자 29.8%, 여자 17.8%로 12.0%p의 차이를 보였으나 2007년 이러한 성별 격차는 10%p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6.6%p의 차이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별차이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로, 2018년 OECD 평균(37.0%)에 비해 12%p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나라로는 캐나다(57.9%), 일본(51.9%), 이스라엘(50.9%)이 있다.

2018년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주석 고등교육이수율은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자(tertiary)의 비율임.

고용·임금

Employment / Wage



고용 · 임금이란?

경제활동의 기회유무, 경제활동에서의 정당한 보수 수급여부 그리고 경제활동의 질 등이 궁극적으로 소득이라는 최종 산출물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제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또한 고용의 질이 높은 경우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추세

고용·임금 영역에 포함되는 6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는 4개, 악화지표는 2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근로현황을 보여주는 고용률과 실업률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취업환경이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 저임금 근로자 비율, 근로시간, 일자리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근로의 질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지표

- ⚠ 실업률
- ⚠ 고용률
- 😊 월평균 임금
- 😊 저임금근로자 비율
- 😊 근로시간
- 😊 일자리 만족도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정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실업률 = (만 15세 이상 실업자수 ÷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2018년 3.8%, 전년대비 0.1%p 증가

고용률은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실업률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취업을 하지 않은 모든 인구의 비율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사는 있지만 취업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즉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실업률이 실업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긴 하나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이다.

2018년 실업률은 3.8%로 2017년보다 0.1%p 증가하였다. 2000년 4.4%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인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3년 3.1%에서 증가추세에 있다. 고용률이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실업률은 2018년 남자 3.9%, 여자 3.7%로 남자가 약간 높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20~29세)의 실업률은 2018년 9.5%로 가장 높으며, 특히 최근 2012년 이후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0대와 50대의 실업률은 2.5%로 가장 낮고, 30대는 3.4%, 60세 이상이 3.1%이다. 2000년과 비교해보면 20대와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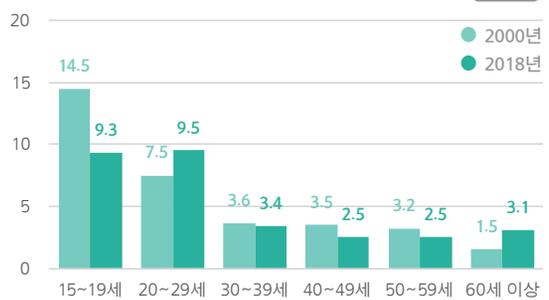
가하였고, 15~19세의 실업률은 14.5%에서 9.3%로 감소추세이다.

실업률 조사대상주간(지난 4주 기준)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하고 있거나, 실업자로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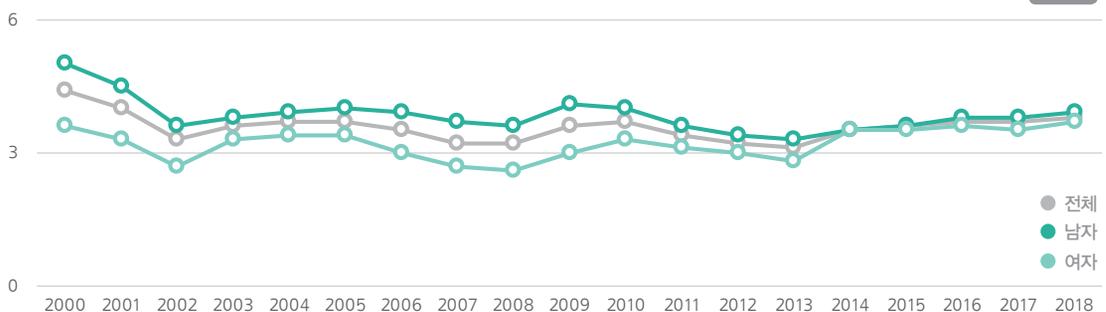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로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

2000년, 2018년 연령별 실업률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석 실업자수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000~2018년 실업률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석 실업자수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고용률



Employment rate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취업자수 ÷ 만 15세 이상 인구) × 100

2018년 60.7%, 전년대비 0.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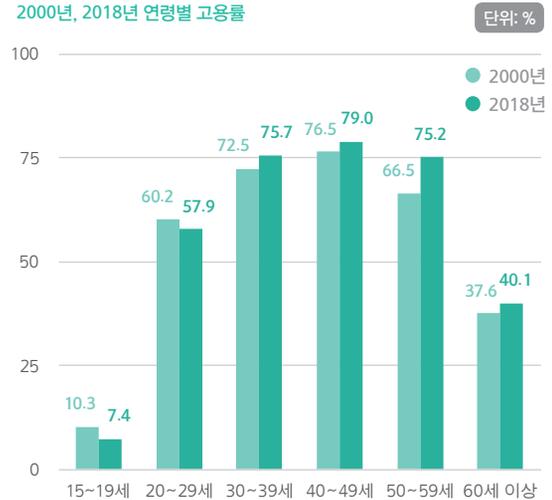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이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지표로 주목하였으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최근에는 고용률을 노동시장의 현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지표로도 고용률이 주로 사용된다. 2018년 고용률은 60.7%로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2014년 60.5%로 증가한 이후 비슷한 추세이다. 남자는 70.8%로 여자(50.9%)보다 19.9%p 높으나, 여자 고용률은 2000년 4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별차이는 2000년 23.8%p에서 이후 감소추세이다.

연령별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40대가 79.0%로 가장 높고, 30대와 50대가 75% 정도로 비슷하다. 그 다음으로 20대가 57.9%, 60세 이상이 40.1%로 나타난다. 2018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감소했다.

2000년과 비교해보면 10대의 고용률은 2000년 10.3%에서 2018년 7.4%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20대도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60.2%에서 57.9%로 감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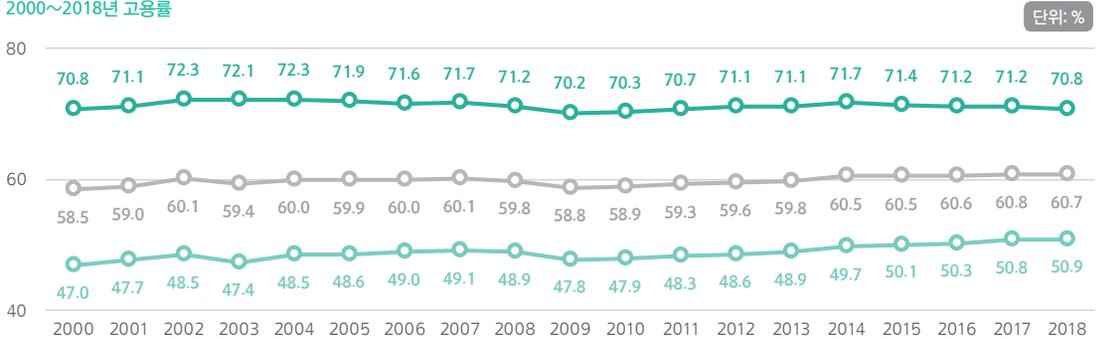
였다. 반면 30대 이상에서 고용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30대는 2000년보다 3.2%p, 4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2.5%p가 증가한 반면, 50대의 고용률은 2000년 66.5%에서 2018년 75.2%로 10%p에 가까운 증가를 보여준다. 50대의 고용률 증가는 우리사회의 은퇴연령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2018년 연령별 고용률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8년 고용률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 ● 남자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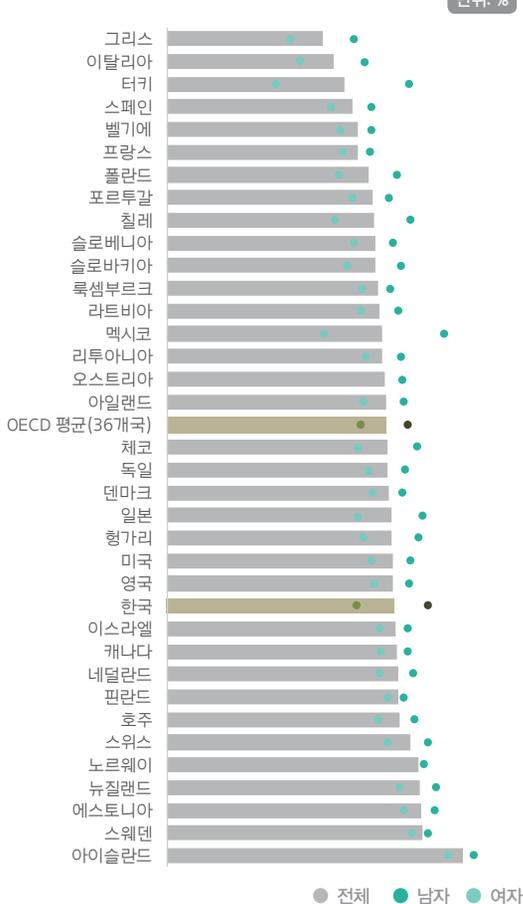
주요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용률(15세 이상)은 2018년 60.7%로 OECD 평균(58.7%)보다 높은 수준이다. 나라별로 보면 아이슬란드가 79.4%로 고용률이 가장 높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45% 미만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프랑스(51.0%)보다는 높지만, 스웨덴, 스위스 보다는 낮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OECD 국가 평균(남자, 65.1%)보다 남자는 고용률이 더 높은 반면, 여자는 OECD 평균(52.6%)보다 낮다. 한국의 성별 고용률 차이가 19.9%p인데 비해, OECD 국가의 성별 고용률 차이는 평균 12.5%p이다. 일본도 성별 고용률 차이가 17.9%p로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보

다는 낮고,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성별 고용률 차이가 10%p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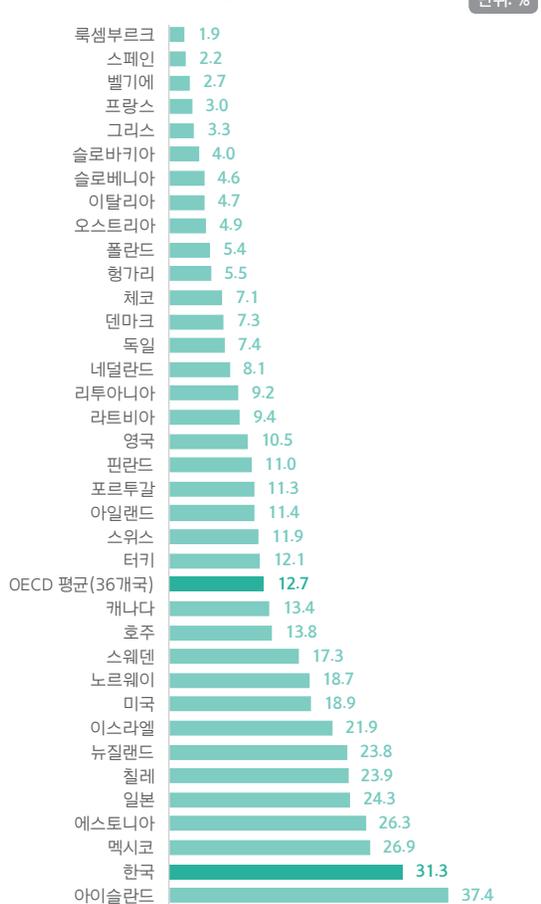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8년 31.3%로 OECD 국가 평균(12.7%)보다 18.6%p 높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높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높음을 보여준다.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고용률이 30% 이상인 나라는 아이슬란드(37.4%)가 유일하다. 평균수명이 긴 일본도 65세 이상 고용률은 24.3%로 한국보다 낮고, 호주,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은 10% 초반대이고, 프랑스, 독일 등은 10% 미만이다. 65세 이상의 높은 고용률은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OECD 주요 국가 고용률(15세 이상)



출처 OECD, Stat

2018년 OECD 국가 65세 이상 고용률



출처 OECD, Stat

월평균 임금

Average earned income of workers



정의 임금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실질금액으로 환산한 값

측정 방법 월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직전 연도 연간특별급여 ÷ 12개월,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2018년 289만 9천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급여액은 45.2%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핵심기준이다. 월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임금의 총액으로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은 근로시간을 고려한 임금수준의 정확한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월평균임금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금액으로 비교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실질금액)은 2009~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월평균임금은 289만 9천원(실질금액)으로 2017년 281만 4천원보다 8만 5천원 증가하였다. 2006년 258만원에서 2009~2010년의 소폭 감소한 이후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성별로는 2018년 남자가 356만 9천원, 여자는 225만 9천원으로 여자 근로자의 임금은 남자의 63.3% 정도이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보면 2018년 정규직은 351만원, 비정규직은 158만 8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약 45.2% 정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로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추세이다. 다만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반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상승폭에 비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상승폭이 적고 때로는 월평균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2014년)도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월급여액의 차이가 오히려 소폭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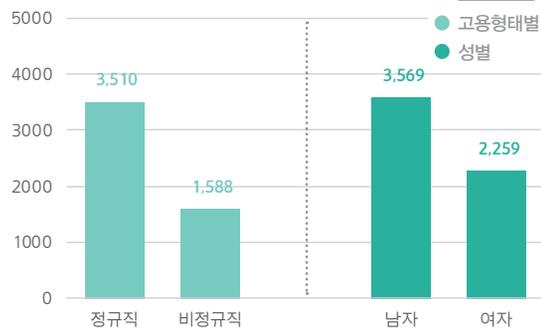
2006~2018년 월평균임금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주석 ① 소비자물가지수(2015년 기준)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임.
 ② 연간특별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전 연도 기준으로 조사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당해 연도 6월 임금총액에 합산함.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2018년 고용형태, 성별 월평균임금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주석 ① 소비자물가지수(2015년 기준)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임.
 ② 연간특별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전 연도 기준으로 조사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당해 연도 6월 임금총액에 합산함.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저임금근로자 비율



Proportion of low-paid workers

정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측정 방법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수 ÷ 전체 임금근로자수) × 100

2018년 19.0%, 전년대비 3.3%p 감소

저임금근로자비율은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으로 본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개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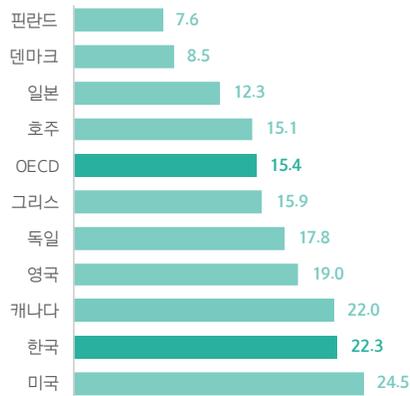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0년 24.6%에서 2015년 23.5%로 지난 15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8년에는 19.0%로 전년대비 3.3%p가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남자 근로자보다 여자 근로자가 더 높다. 2018년 남자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2.1%인데 여자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30.0%에 달한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17.9%p 높으나, 여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000년 45.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남녀 간 차이는 2000년 30.7%p에서 감소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은 저임금근로자

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비율(22.3%)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24.5%) 다음으로 높다. 덴마크나 핀란드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한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2017년 OECD 주요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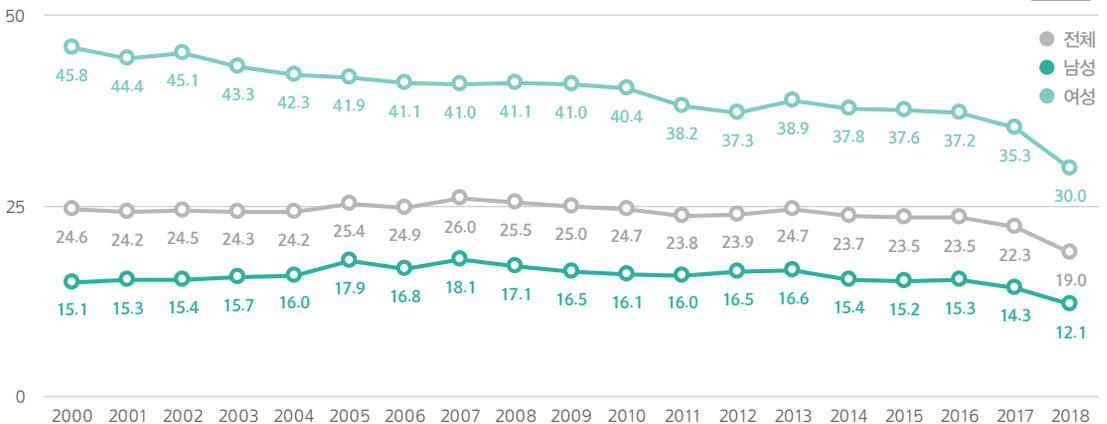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 Earnings.

2000~2018년 저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출처 OECD, Earnings.

근로시간

Working time



정의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

측정 방법 총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2018년 156.4시간, 전년대비 12.1시간 감소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 짧은 노동시간을 통해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여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으로, 장시간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므로 이를 얼마나 줄여나가는가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간 총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1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일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장시간근로자가 증가하면 늘어나고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하면 줄어들게 된다.

한국 임금근로자의 2018년 월간 총근로시간은 156.4시간으로 2017년 168.5시간에 비해 12.1시간 감소하였다. 2006년 193.4시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 2014년보다 8시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valance)의 강조와 함께 최근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어 근로시간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아직까지도 매우 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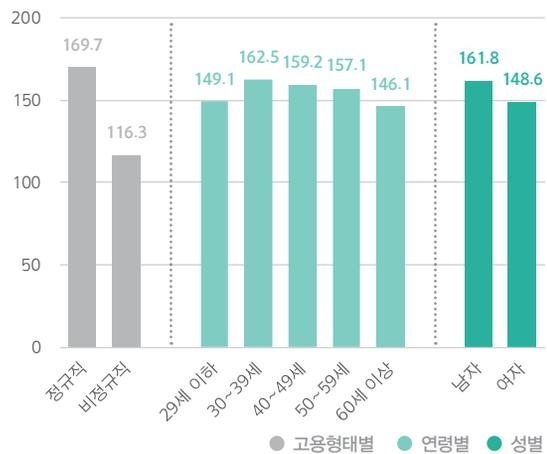
성별로는 남자는 161.8시간, 여자는 148.6시간으로 남자의 근로시간이 13.2시간 길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

로 길다. 2018년 3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62.5시간, 40대는 159.2시간인 반면,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각 149.1시간 146.1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2018년 169.7시간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16.3시간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2018년 고용형태, 연령, 성별 근로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석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시간이 포함됨.

2006~2018년 근로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석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시간이 포함됨.

일자리 만족도



Job satisfaction

정의 임금근로자 중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일자리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

2019년 32.3%, 2017년보다 4.6%p 증가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등이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보여준다면, 일자리 만족도는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지표는 이러한 하위 지표들을 측정하고 나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시 질문한 것으로 근로생활 영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핵심지표이다.

통계청 「사회조사」로 파악한 일자리 만족도는 2019년 32.3%로 2017년보다 4.6%p 증가하였다. 2009년 26.6%에서 2017년 27.7%로 큰 변화없이 유지해오다 최근 만족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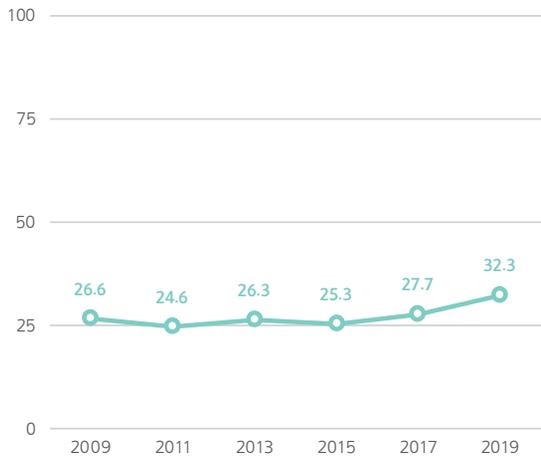
성별로는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30대 근로자의 만족도가 2018년 34.3%로 다른 연령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

일자리 만족도는 직업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전문관리직에서는 47.2%로 가장 높고, 사무직도 38.0%로 상대적으로

으로 높다. 반면, 서비스 판매직과 기능노무직에서의 만족도는 각각 27.3%, 20.7%로 낮게 나타나 직종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2019년 일자리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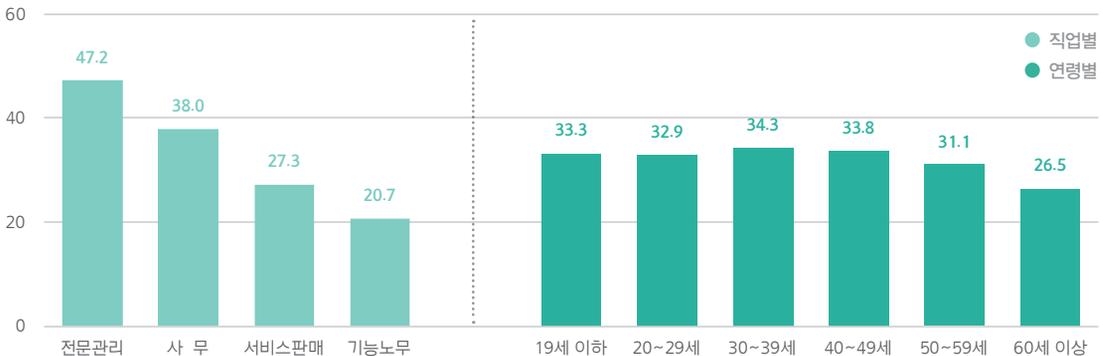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①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②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 대상

2019년 직업, 연령별 일자리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 대상

소득·소비·자산

Income / Consumption / Wealth



소득·소비·자산이란?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량은 물질적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기 보다는 소비라는 과정을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은 물질적 자원의 보유량에 대한 핵심지표로서 소비행위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자산축적의 원천이 된다.

소득분배는 소득이 어떻게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체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추세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 지표는 6개, 악화인 지표는 1개로 나타났다. 개선지표의 비율이 85.7%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다. 객관적인 소득수준 뿐 아니라 주관적 소득과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최근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다만 가계부채비율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계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증가폭이 더 크다.

측정지표

- ① 1인당 국민총소득
- ① 가구 중위소득
- ① 소득만족도
- ① 소비생활 만족도
- ① 가구순자산
- ② 가계부채비율
- ① 상대적 빈곤율

1인당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l

정의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인구수로 나눈 것

측정 방법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 국민총소득 ÷ 총인구,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2018년 3,518만원, 전년대비 0.7% 증가

국민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국민총소득GNI은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으로서 한 국가 국민의 소비와 후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웰빙의 경제적 기초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되는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국민의 소득수준을 시계열로 비교하는데 유용하고 이러한 비교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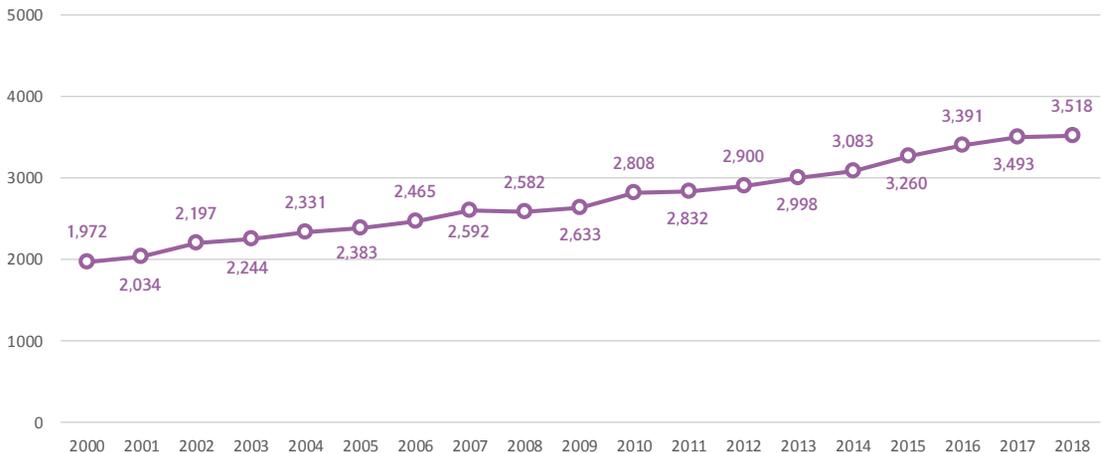
물가상승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실질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3,518만원으로 2017년 3,493만원에 비해 약 25만원 정도 증가하여 0.7%의 증가율을 보인다.

2000년 이후 증가율은 매년 차이를 보이는데 2002년

은 전년대비 8.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8년에는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2008년의 전체 국민총소득(명목금액)은 전년보다 약간 증가했지만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으로 계산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00~2018년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단위: 만원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주석 ① 실질 국민총소득은 연평균 물가지수(2015년=100)를 이용하여 산출함.

② 2018년은 잠정치임.

③ 국민계정이 기준년 개편으로 인해 과거 시계열 변동이 있음(2015년으로 기준년 개편, 2019.6월)

가구 중위소득



Equivalised median income

정의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균등화한 금액의 중위소득

측정 방법 표본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하여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금액의 중위소득,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2018년 2,639만원, 전년대비 65만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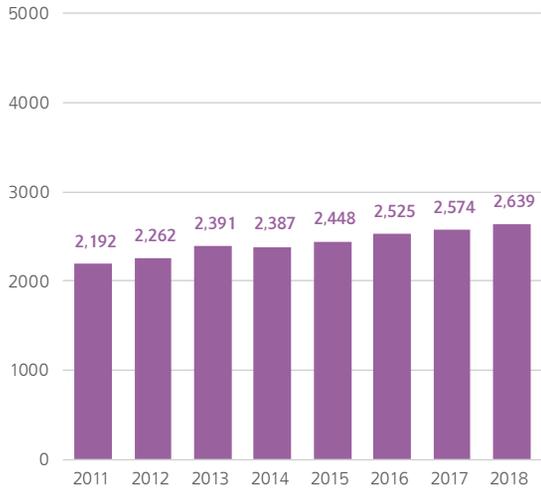
가구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위가구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의 중앙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 빈곤층 비율, 중위소득계층 비율 등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가장 기본이 된다. 가구마다 가구원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 간 소득수준을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된 값을 가구 균등화 소득이라고 한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전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2018년 2,639만원으로 2017년의 2,574만원보다 65만원 증가했다. 2011년 2,192만 원에서 2018년 2,639만 원으로 20.4% 증가하였다. 가구중위소득은 2014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이다.

가구중위소득을 근로연령(18~65세)과 은퇴연령(66세 이상)으로 구분해 보면, 근로연령의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은 2,870만원이고, 은퇴연령의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은 1,529만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근로연령의 가구중위소득은 2011년 2,383만원에서 2018년 2,870만원으로 20.5%가 증가하였으나, 은퇴연령의 가구중위소득은 같은 기간 1,153만원에서 2018년 1,529만원으로 32.6%가 증가하였다. 아직도 근로연령가구와 은퇴연령가구의 가구중위소득은 두 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는 조금씩 감소추세이다.

2011~2018년 가구중위소득

단위: 만원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석 ① 균등화 연소득임.

② 처분가능소득 기준, 실질금액임.

2011~2018년 연령계층별 가구중위소득

단위: 만원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석 ① 균등화 연소득임.

② 처분가능소득 기준, 실질금액임.

③ 근로연령(18~65세), 은퇴연령(66세 이상)

소득만족도

Income satisfaction



정의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19세 이상) 중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

2019년 14.1%, 2017년보다 0.8%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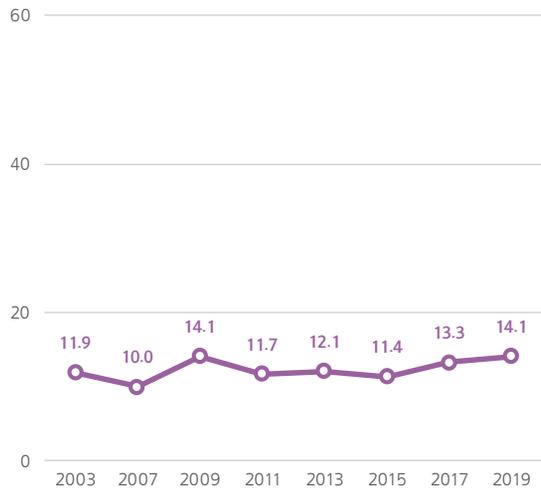
객관적인 소득수준과 별도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인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소득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만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만족도가 소득수준과는 별개로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소득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로 측정한 소득만족도, 즉 자신의 소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기준 14.1%에 불과하다. 국민 10명 중 1명 정도만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셈이다. 소득만족도는 2003년 11.9%에서 2009년 14.1%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11~14%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남자는 14.7%, 여자는 13.3%로 여자보다 남자의 만족도가 약간 높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소득만족도가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 40대의 만족도가 17.8%로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에서 10.5%로 가장 낮다. 2003년과 비교해 보면, 30대와 40대의 소득만족도는 2003년에 비해 각각 4.0%p, 6.4%p 증가한 반면, 19~29세와 60세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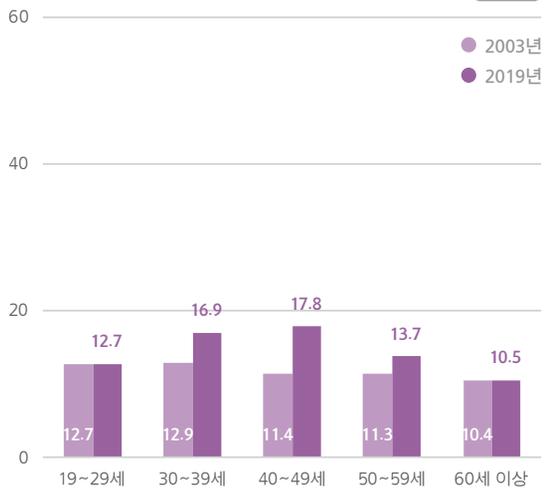
2003~2019년 소득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03년, 2019년 연령별 소득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소비생활 만족도



Consumption satisfaction

정의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

2019년 16.8%, 2017년보다 1.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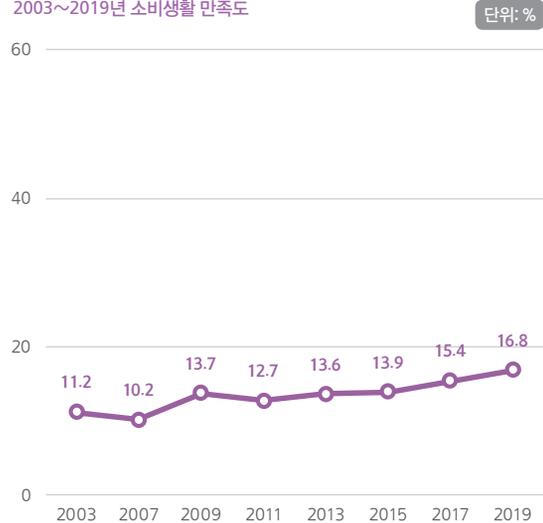
소비생활 만족도는 소비지출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태도를 보여준다. 객관적인 소비수준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지된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이다.

통계청 「사회조사」로 측정한 소비생활 만족도, 즉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16.8%에 불과하나 2017년 15.4%보다 1.4%p 증가하였다. 소득만족도가 14.1%인 것과 비교하면 약간 높긴 하나 소비생활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다. 2003년 10.2%에서 2015년 13.9%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최근 소폭 증가추세이다.

소득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남자의 소비생활만족도가 17.0%로 여자(16.6%)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소비생활 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소득만족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40대 이하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중 29세 이하의 만족도가 20.2%로 가장 높다. 반면 50대는 15.5%, 60세 이상에서는 11.9%로 낮아진다. 2003년에도 29세 이하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12.4%로 가장 높았으나, 40대 이상의 만족도는 약 9% 정도로 연령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이후 50대 이상에서 소비생활 만족도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연령대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60세 이상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2003년 9.7%에서 2019년 11.9%로 지난 16년간 큰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3~2019년 소비생활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03년, 2019년 연령별 소비생활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가구순자산

Household net wealth



정의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차감한 금액

측정 방법 전체 가구평균 순자산(실질) =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2018년 32,904만원, 전년대비 2,231만원 증가

가구순자산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것으로 웰빙의 지속에 직접적인 기반이 되는 축적된 재산의 규모를 보여준다. 가구 재산의 증감과 그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국민의 재정상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가구의 재정상태는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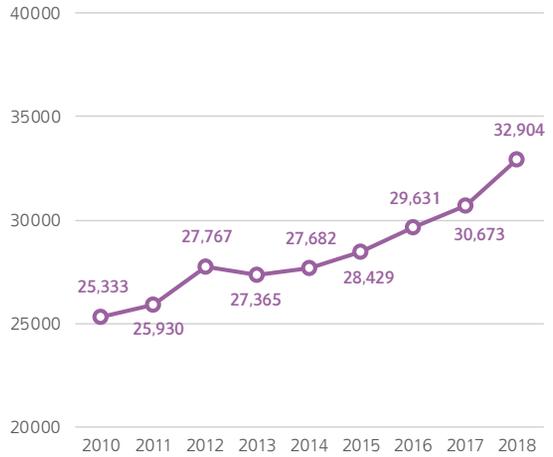
2018년 가구의 순자산(실질금액)은 3억 2,904만원으로 2017년 3억 673만원에 비해 2,231만원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의 실질 순자산은 2010년 2억 5,333만 원에서 2018년 3억 2,904만원으로 29.9%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19년 순자산액(명목금액)은 50대가 4억 24만원으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40대와 60대 이상이 약 3억 6천만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부채는 40대와 50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자산이 50대가 더 많고, 60세 이상의 경우 부채는 5,222만원으로 30대보다 적은 수준이나 자산이 30대보다 약 1억원 정도 더 많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19년 가구순자산액(명목)이 4억 2,694만원이고, 비수도권은 2억 8,413만원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2010~2018년 가구순자산(실질순자산액)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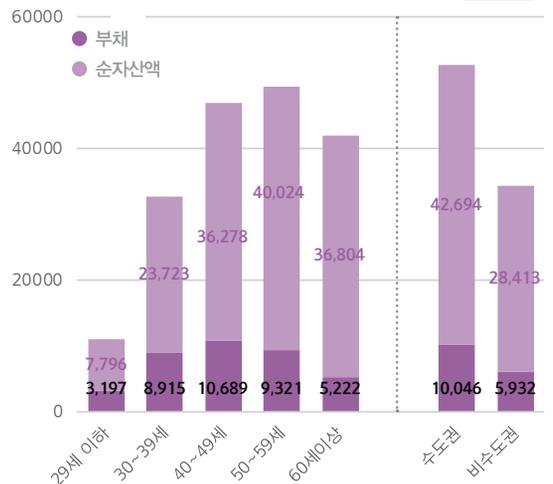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주석 ① 실질 가구순자산은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함.

② 2017년부터 개인 및 직장에서 받은 모든 대출은 신용대출에 포함.

2018년 연령, 지역별 가구순자산

단위: 만원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주석 ① 실질 가구순자산은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함.

② 2017년부터 개인 및 직장에서 받은 모든 대출은 신용대출에 포함.

가계부채비율



Household debt rate

정의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총액의 비율

측정 방법 가계부채 비율 = (가계부채총액 ÷ 가구순가처분소득) × 100

2017년 185.9%, 전년대비 5.5%p 증가

가계부채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해당 가구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게 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소비지출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3.3%에서 2017년 185.9%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이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부채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지출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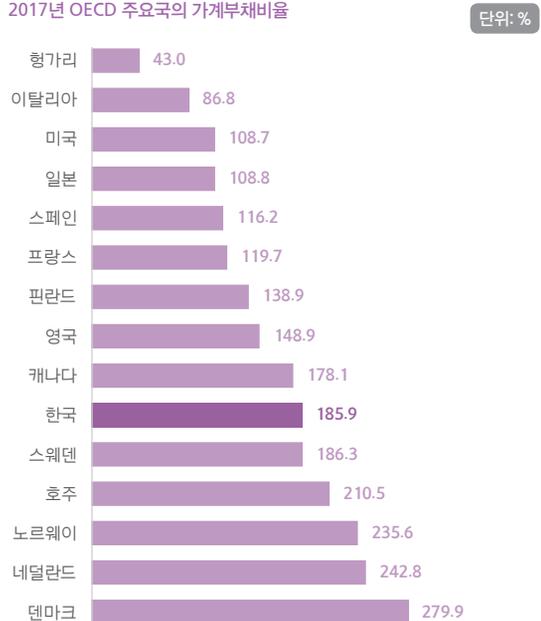
2017년 기준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중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미국(108.7%), 일본(108.8%), 프랑스(119.7%), 영국(148.9%) 등은 150%를 넘지 않는다. 반면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가계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다.

2008~2017년 가계부채 비율



출처 OECD,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7년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비율



출처 OECD,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정의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가처분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 전체 가구) × 100

2018년 16.7%, 전년대비 0.6%p 감소

소득불평등 지표로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소득5분위배율이나 상대적 빈곤율도 자주 사용된다. 소득불평등에 속한 지표들은 사회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중요하다. 지니계수가 전체 가구의 소득계층간 격차, 즉 사회의 소득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로 빈곤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며, 이는 곧 빈곤가구의 규모를 나타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계산한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16.7%로 지난 2011년의 18.6%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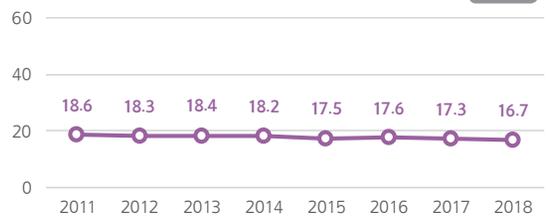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26~40세 상대적 빈곤율이 9.6%로 가장 낮고 이를 제외한 65세 이하 연령대가 11~13%대로 비슷한 반면, 66~75세는 34.6%, 76세 이상은 55.1%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OECD 자료로 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17.6%)은 미국(17.8%)에 비해 낮지만 영국(11.1%), 독일(10.4%), 프랑스(8.3%) 등에 비해서는 높다.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5.0%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인 미국(22.9%), 멕시코(24.7%), 호주(23.2%) 보다는 월등히 높다.

2011~2018년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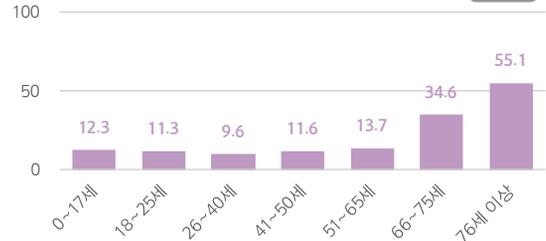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석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2018년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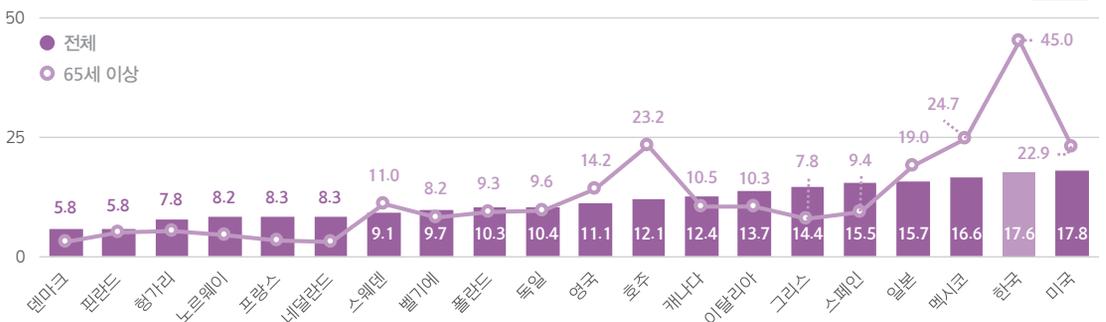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석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2016년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

단위: %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주석 ① 가처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의 비율

② 일본은 2015년, 나머지 국가는 2016년 자료임.

07

여가

Leisure



여가란?

노동시간과 대비해서 여가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스포츠와 같은 신체적 활동이나 문화예술과 같은 정신적 활동으로 잘 활용하면 일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과의 결속을 다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는 작용을 하며,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최근 추세

여가 영역의 6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는 4개, 악화지표는 2개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문화여가 지출률 등 실제 여가활동 참여는 개선되었으며, 여가생활 만족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는 소폭 감소하였고, 여가시간 충분도 또한 최근 악화된 것을 보여준다.

측정지표

- 🟢 문화여가 지출률
- 🟢 여가시간
- 🔴 여가시간 충분도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 🟢 1인당 여행일수
- 🟢 여가생활 만족도

문화여가 지출률



Ratio of consumption expenditure on cultural or leisure activities

정의 가계소비지출 중 문화여가지출의 비율

측정 방법 문화여가지출률 = (가구 월평균 오락문화비 ÷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 × 100

2018년 5.76%, 전년대비 0.49%p 증가

가구의 문화여가지출은 여가자원의 투입 수준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문화여가지출의 총량은 문화여가시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출을 가계지출에 대비하여 파악함으로써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을 제시한다. 또한 문화여가비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사용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자원의 성격을 가지는 지표이다.

2018년 가구 문화여가지출 월평균 금액은 19만 1천원으로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문화여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5.76%이다. 2017년(17만 4천원) 대비 금액은 1만 7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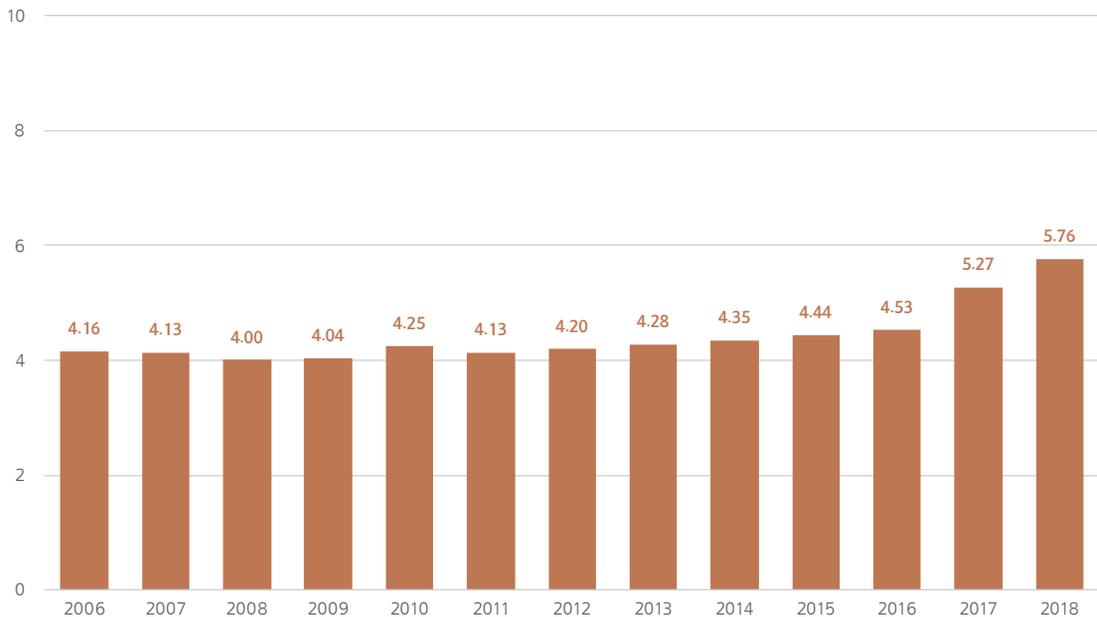
원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계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은 0.49%p 증가하였다.

문화여가 지출비율은 2000년 4.16%에서 2010년 4.25%, 2015년 4.4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여가활동은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는 탄력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문화여가지출률은 4.00%, 4.04%로 감소하였다.

2006~2018년 문화여가 지출률

단위: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석 ① 1인 이상 전국 가구(농가 제외) 기준임.

② 명목 금액임.

여가시간

Leisure time



정의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평균 여가시간

측정 방법 일평균 여가시간 = ((평일여가시간 × 5일) + (휴일여가시간 × 2일)) ÷ 7일

2018년 3.9시간, 2016년보다 0.3시간 증가

여가시간이란 일, 가사, 수업 등 의무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가시간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기초 지표이자 여가활동의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적절한 수준의 여가시간은 일 중심의 사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여가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여가시간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생활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을 집계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18년 평일 여가시간은 3.3시간이고 휴일 여가시간은 5.3시간이다. 이 둘을 합한 요일 평균 여가시간은 3.9시간이다. 여가시간은 2006년 3.8시간에서 2010년 4.9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4시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여가시간은 남자가 3.7시간, 여자가 3.9시간으로 여자가 약간 더 길다. 요일별로 보면 평일에는 여자가 더 길고 휴일에는 남자가 더 길어 요일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평일의 여가시간에는 남자와 여자의 고용률 차이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60대는 4.1시간, 70대 이상은 5.1시간이다. 50대 이하의 여가시간은 3.5시간 전후이나 20대만 3.9시간으로 여가시간이 긴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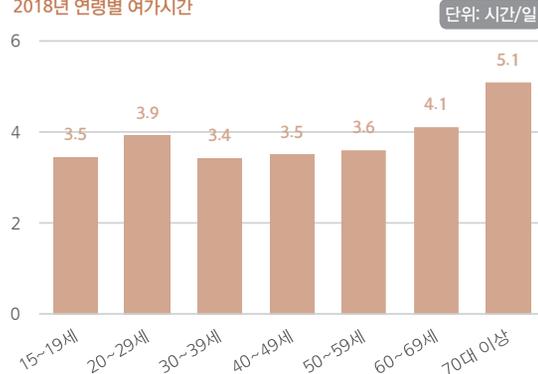
2006~2018년 여가시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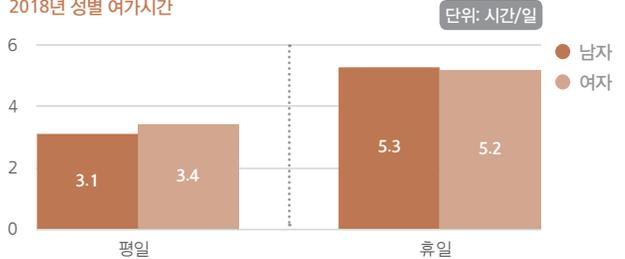
주석 2008년까지 10세 이상, 2010년부터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8년 연령별 여가시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8년 성별 여가시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시간 충분도



Leisure time satisfaction

정의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여가시간 충분도 =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 휴일 여가시간 충분도) ÷ 2

2018년 52.4%, 2016년보다 7.7%p 감소

여가시간은 사람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여가시간이 많아지면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가시간의 양과는 별개로 각자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이 충분한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여가시간의 충분 정도는 개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적 자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일상에서 생활시간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가시간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 52.4%로 2014년 66.2%, 2016년 60.1%에 이어 감소 추세이다. 여가시간은 평일보다는 휴일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50.7%, 여자가 54.1%로 여자가 남자보다 3.4%p 높게 나타났다. 휴일 여가시간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남자와 여자 모두 58%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나, 평일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남자는 43.2%, 여자는 49.3%로 여자가 6.1%p 높다.

연령별로 여가시간의 충분정도가 다른데 30~40대와 10대에서 낮고 60대 이상의 고령인구에서는 높다. 여가시간 충분정도가 가장 낮은 30대는 43.5%인데 비해 60대는 60.7%, 70대 이상에서는 72.6%로 나타나 연령별로 차이가 크다. 이러한 주관적인 여가시간 충족정도에 따른 연령별 차이는 객관적인 여가시간에서의 연령별 차이와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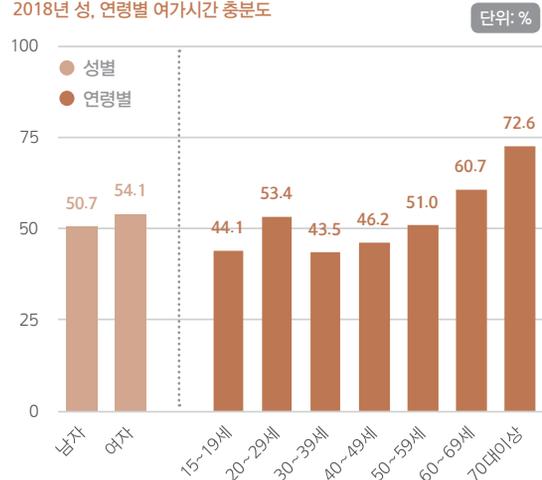
2014~2018년 여가시간 충분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석 여가시간충분도는 지난 1년 동안 평일과 휴일(휴가, 연휴 포함)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충분했다'의 7점까지 중 5~7점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018년 성, 연령별 여가시간 충분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석 여가시간충분도는 지난 1년 동안 평일과 휴일(휴가, 연휴 포함)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충분했다'의 7점까지 중 5~7점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Participation in culture, art and sport event

정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

측정 방법 지난 1년 동안 음악회·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등을 관람한 사람들의 평균 관람횟수

2019년 8.4회, 2017년보다 0.6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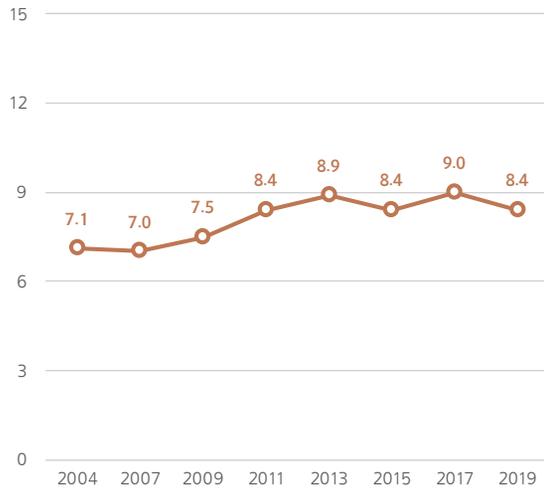
여가활동 중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의 참여는 다양한 경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웰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한다.

지난 1년간 예술공연, 영화, 박물관과 미술관, 스포츠 등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9년 66.2%이고, 이들의 관람횟수는 1인 평균 8.4회로 나타났다. 2019년 관람률은 2017년(66.5%)보다 약간 감소하였고, 관람횟수는 같은 기간 0.6회 감소하였다. 2004년(관람률 51.0%, 평균 관람횟수 7.1회) 이후 2013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관람률과 관람횟수 모두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되어 있다.

성별로는 남자(8.0회)보다 여자(8.7회)의 관람횟수가 높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관람횟수가 각각 9.0회, 11.2회로 높고,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60세 이상에서는 5.8회이다. 관람횟수는 20대가 가장 높은 반면, 관람률은 10대의 관람률이 86.7%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60대 관람률은 33.2%로 직전 연령대인 50대(62.1%)와의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관람횟수의 경우, 30대 이후 관람횟수의 차이는 각 연령대별로 약 1회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2004~2019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단위: 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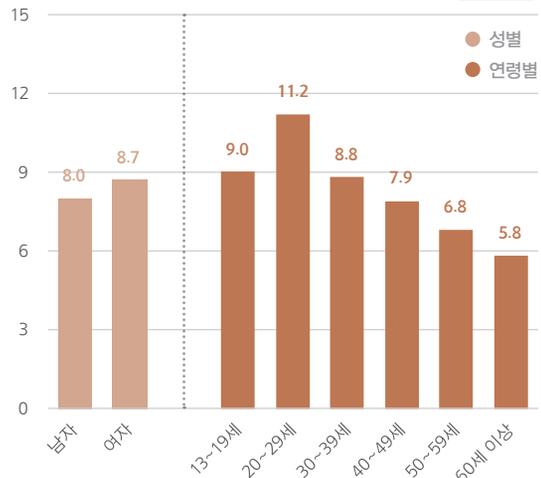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① 관람횟수는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임.

②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9년 성, 연령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단위: 회/연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관람횟수는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임.

1인당 여행일수



Travel days per person

정의 1인당 연간 국내여행(당일여행 포함) 및 해외여행 일수

측정 방법 만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 국내여행 참가일수 + 해외여행 참가일수

2017년 12.5일, 전년대비 1.5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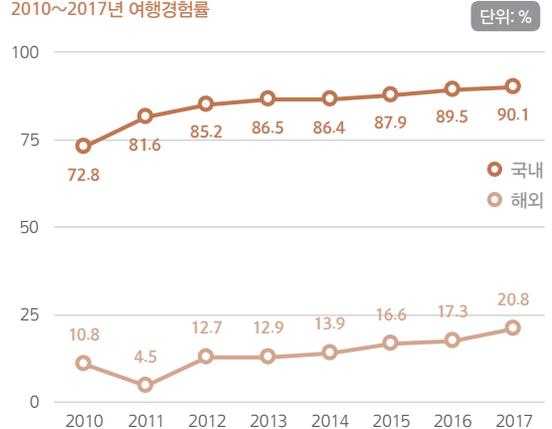
여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행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이며,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이다. 1인당 여행일수를 통해 국민의 여가향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017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는 12.5일로 2016년의 11일에서 1.5일 증가하였다. 국내외 여행일수는 2010년 9.1일에서 2013년 10.2일, 2016년 11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내여행일수는 10.67일, 해외여행일수는 1.87일로, 국내여행일수는 2010년의 7.99일에서 2.68일 증가하였고, 해외여행일수는 같은 기간 1.11일에서 0.76일 증가했다.

여행경험률로 보면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0년 72.8%에서 2017년 90.1%로 17.3%p 증가하였으며, 해외여행은 같은 기간 10.8%에서 20.8%로 10.0%p 증가하여 두배가량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10~2017년 여행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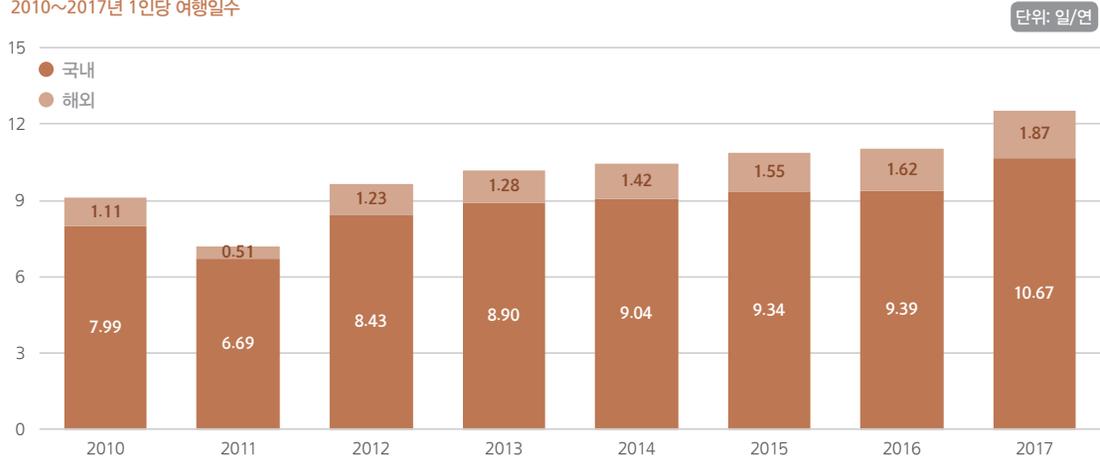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주석 ① 국내여행에는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 목적인 경우가 해당되고, 해외여행에는 여가·위락·휴가, 종교·성지순례, 가족·친척·친구방문, 교육·훈련·연수, 쇼핑, 사업·전문활동·업무 목적인 경우가 해당됨.

② 각 연도 12월 현재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2010~2017년 1인당 여행일수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주석 ① 국내여행에는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 목적인 경우가 해당되고, 해외여행에는 여가·위락·휴가, 종교·성지순례, 가족·친척·친구방문, 교육·훈련·연수, 쇼핑, 사업·전문활동·업무 목적인 경우가 해당됨.

② 각 연도 12월 현재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여가생활 만족도

Leisure satisfaction



정의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여가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019년 28.8%, 2017년보다 1.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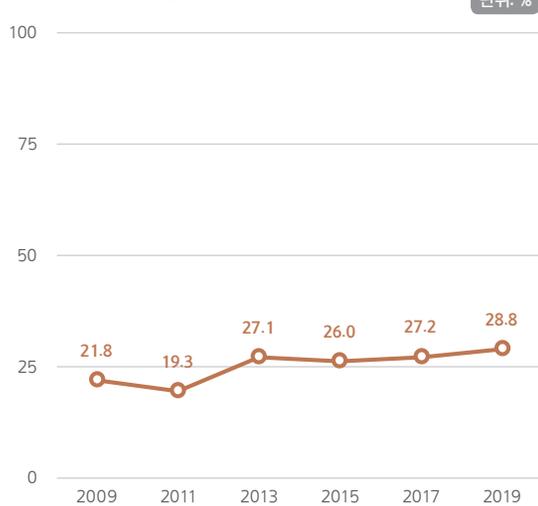
여가생활 만족도는 여가활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수준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들이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여가생활이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가생활은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다양한 영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종합 지표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9년 21.8%에서 2013년 27.1%로 높아진 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여가생활 만족도는 28.8%로 2017년보다 1.6%p 증가하였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남자(29.4%)가 여자(28.2%)보다 조금 더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10대는 43.3%가 여가생활에 만족하는데 비해 60대 이상에서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1.0%에 불과하다.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의 지표추세와도 일치한다. 고령층의 경우 여가시간은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긴 편이지만, 실제로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람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는 매우 적고, 여가활동 만족도 또한 매우 낮다. 이는 고령층이 여가 영역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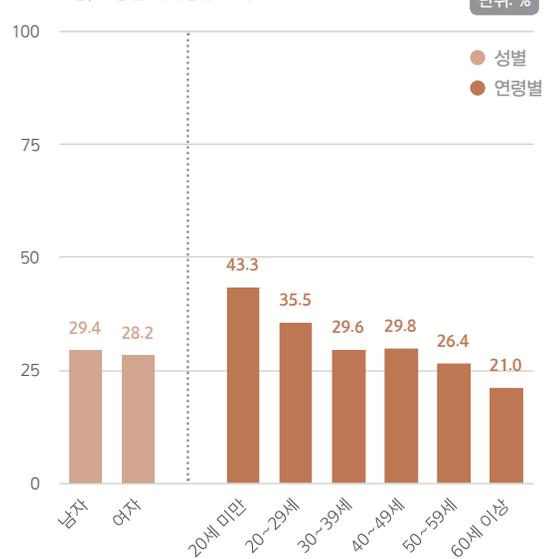
2009~2019년 여가생활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9년 성, 연령별 여가생활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07

주거

Housing



주거란?

거주하는 공간에서 향유하는 주거서비스를 의미하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득·소비·자산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주거서비스의 확보여부와 안정성 그리고 크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추세

주거 영역에 포함되는 6개 지표 중 개선지표는 3개, 악화지표는 2개, 전기와 동일한 지표 1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50%로 나타났다. 주택임대료 비율,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개선된 반면, 통근시간, 주거환경 만족도 등 외부 주거환경과 관련된 지표는 악화되었다.

측정지표

- ☹️ 자가점유가구 비율
- 😊 주택임대료 비율
- 😊 1인당 주거면적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통근시간
- ☹️ 주거환경 만족도

자가점유가구 비율



Home-ownership rate

정의 전체 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자가점유가구 비율 = (자가소유주택 거주 가구 비율 ÷ 전체 일반가구) × 100

2018년 57.7%, 전년과 동일

주택공급의 꾸준한 확대로 주택보급률은 크게 늘어났지만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사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주택마련이 거주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즉 자가점유가구의 비율은 2006년 55.6%에서 2014년 53.6%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56.8%와 57.7%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57.7%로 2017년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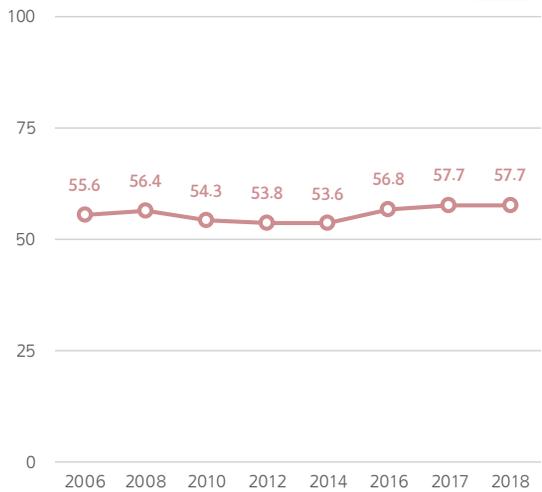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2018년 서울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세종, 경기, 대전도 각각 52.7%, 53.0%, 53.4%로 낮은 편에 속한다. 서울은 낮은 편에 속하는 세종, 경기, 대전 등과도 9~10%p 가량의 차이를 보여 매우 낮은 것을 보여준다. 반면 전남이 74.2%로 가장 높고, 경북이 70.8%로 그 뒤를 이었다.

2006년과 비교해보면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다른 지역들은 모두 자가점유가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광주는 2006년 53.6%에서 2018년(62.4%)에 8.8%p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며, 강원과 충북지역도 2006년과 비교했을 때 6%p 이상 증가하였다.

2006~2018년 자가점유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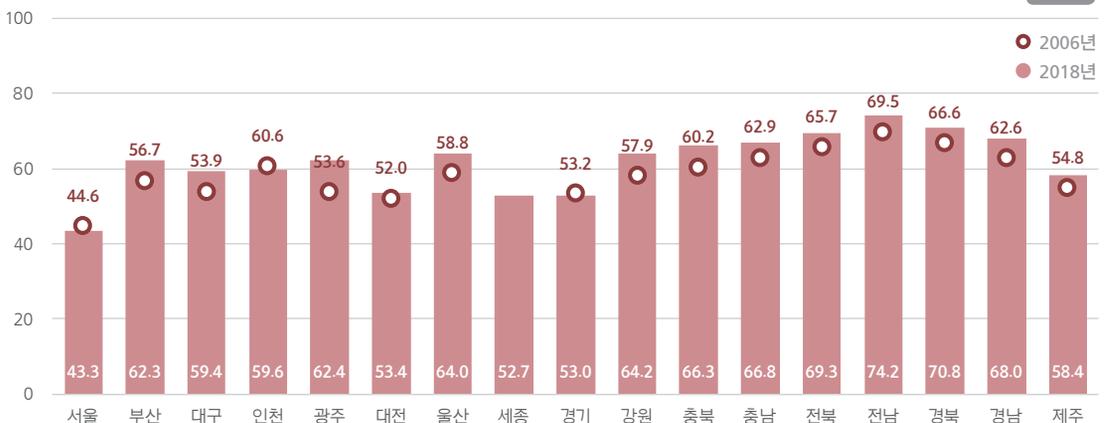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년, 2018년 시도별 자가점유가구 비율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택임대료 비율



Rent to income ratio

정의 주택임대료의 월소득 대비 비율

측정 방법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중위 월임대료 ÷ 중위 월가구소득) × 100

2018년 15.5%, 전년대비 1.5%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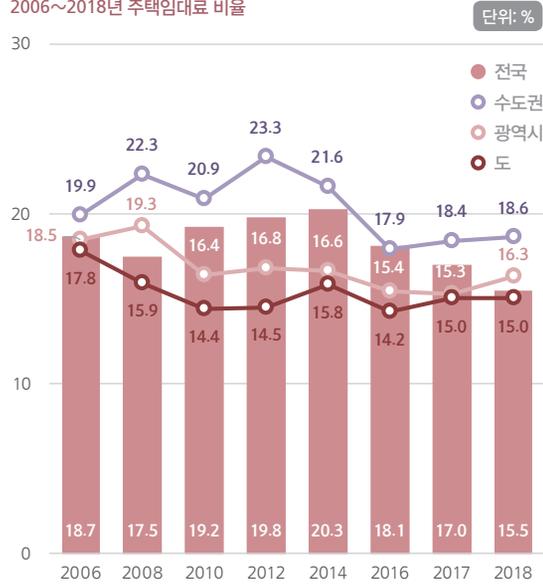
주택임대료는 가구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가 거주가 아닌 가구에서 부담이 큰 가구소비 지출 항목 중 하나이다.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료 비율이 2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주택임대료 비율은 2018년 15.5%로 2017년보다 1.5%p 감소하였다. 2006년 18.7%에서 2014년 20.3%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15.5%로 최저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8.6%, 광역시는 16.3%, 도 지역은 15.0%로 주택임대료 비율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높다.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0%를 넘었다가 최근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수도권 제외 지방 광역시도의 경우 2010년에 하락한 후 최근까지 15%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수도권과 광역시, 수도권과 도지역 차이가 각각 6.5%p, 8.8%p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이 감소하며 지역간 차이는 감소하였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하위소득집단의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고, 중위소득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위소득집단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2014년 29.0% 이후 감소하여 2018년 20.3%이며, 중위소득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위소득집단의 경우 2012년 22.6% 이후 감소추세이다.

2006~2018년 주택임대료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석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2006~2018년 소득수준별 주택임대료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석 소득수준은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1~4분위), 중위(5~8분위), 상위(9~10분위)로 구분됨

1인당 주거면적



Living space per capita

정의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

측정 방법 1인당 주거면적 =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면적 ÷ 개별 가구원수)의 평균

2018년 31.7㎡, 2017년보다 0.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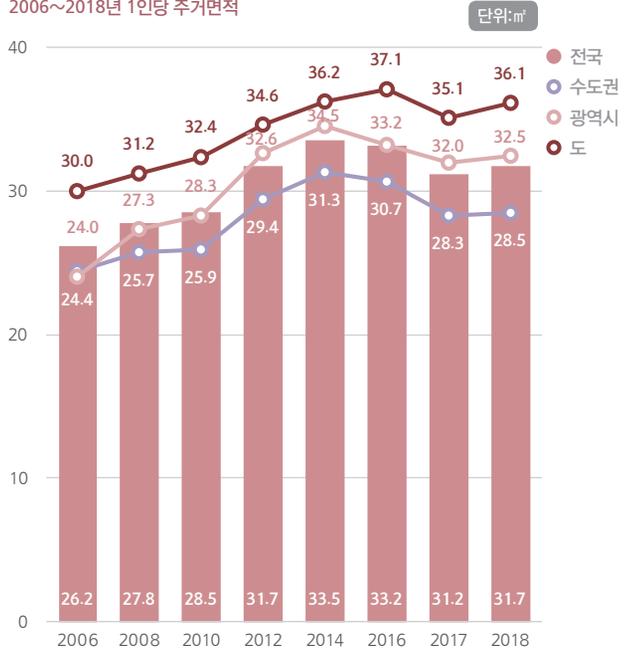
1인당 주거면적은 적절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거 질 측정의 핵심 지표이다. 이 지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산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주거면적은 가구당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최근 가구원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주거의 질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가구원수가 감소하여 1인당 주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 증가 등 가구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주거면적보다는 1인당 주거면적이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을 정확하게 나타낸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1인당 주거면적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 국제비교에서도 활용성이 높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14년 33.5㎡로 늘어난 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최근까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1.7㎡로 2017년 31.2㎡에 비해 0.5㎡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8.5㎡, 광역시는 32.5㎡, 도지역은 36.1㎡로 도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7.6㎡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 비해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 모두 증가했고 그 중 도지역의 증가 면적이 1.0㎡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2006년과 비교했을 때 12년간 수도권은 24.4㎡에서 28.5㎡로 4.1㎡가 증가하였으나 광역시와 도지역은 같은 기간 각각 8.5㎡, 6.1㎡ 증가하여 수도권이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주거면적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1인당 주거면적이 작은 편이다. 한국(31.7㎡, 2018년 기준)의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65.0㎡, 2017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40.2㎡, 2018년 기준)이나 영국(40.9㎡, 2017년 기준)보다도 작다.

2006~2018년 1인당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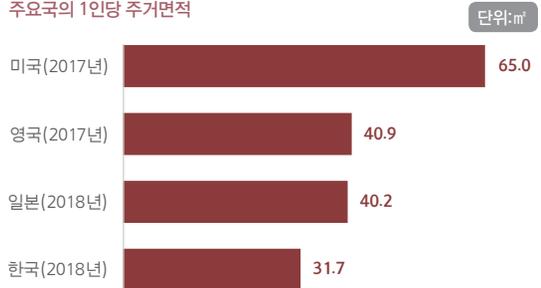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석 ①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② 2017년부터는 공동주택의 면적을 행정자료와 연계함.

주요국의 1인당 주거면적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Statistics Bureau of Japan,

Housing and Land Survey;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English Housing Survey; The U.S. Census

주석 일본과 영국 자료는 전체 주택의 연면적을 전체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값이며, 미국 자료는 개별 주택의 면적을 거주자수로 나눈 값의 중위수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Dwelling without basic facilities

정의 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 총가구수) × 100

2018년 5.7%, 전년대비 0.2%p 감소

주거는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1인당 주거면적이 양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양적인 크기 뿐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주거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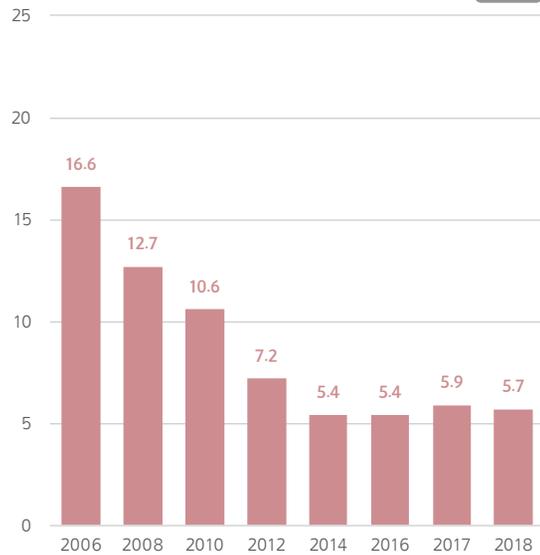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8년 5.7%(111만 1천 가구)로 2017년 5.9%(114만 1천 가구)보다 0.2%p 감소하였다. 2006년 16.6%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광역시가 4.4%로 가장 낮다. 수도권 지역은 2006년 12.8%에서 2018년 6.8%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광역시는 17.7%에서 4.4%, 도지역은 21.6%에서 4.7%로 감소하여 도지역의 주거시설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수도권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2014년 5.4%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광역시와 도지역은 꾸준히 개선 추세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2011.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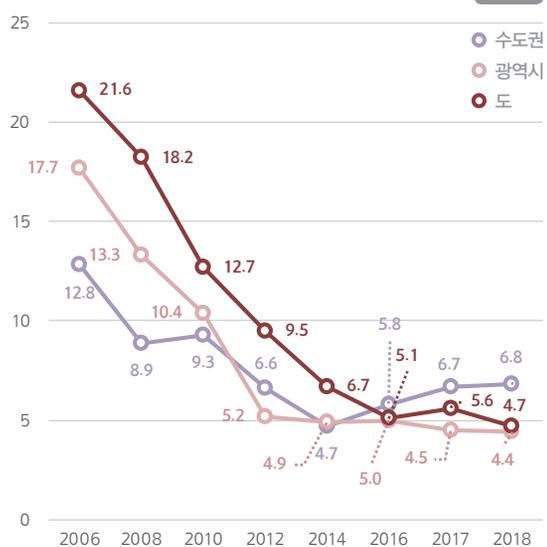
- 시설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침실 및 면적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방 수와 면적
 - 1인가구(방1개, 14㎡)
 - 2인가구(방1개, 26㎡)
 - 3인가구(방2개, 36㎡)
 - 4인가구(방3개, 43㎡)
 - 5인가구(방3개, 46㎡)
 - 6인가구(방4개, 55㎡)

2006~2018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2018년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통근시간



Commuting time to office

정의 통근인구가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집과 직장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

측정 방법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집과 직장을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

2015년 35.4분, 2010년보다 1.7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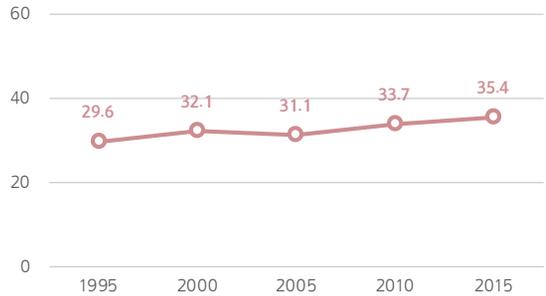
통근시간은 근로자의 직장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근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근시간은 일상생활의 편리성과 삶의 질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통근시간의 추이를 통해 직장과 주거지 간의 거리 변화,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의 변화, 토지이용과 지가의 변화, 통근 시간대 교통서비스 수준의 변화 등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통근시간은 도시의 성장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외 거주자의 증가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1995년 29.6분에서 2015년 35.4분으로 지난 20년간 6분가량 증가하였으며, 2010년보다도 1.7분 증가하였다.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인구의 비율은 1995년 9.5%에서 2015년 17.9%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통근시간이 90분 이상인 인구의 비율도 같은 기간 2.8%에서 4.5%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통근시간을 비교해보면 동지역의 통근시간이 길고 면지역이 가장 짧다. 동지역의 경우 2015년 통근시간이 60분 이상인 비율이 20.8%인 반면, 읍지역은 8.8%, 면지역은 4.7%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15분 미만인 비율 또한 동지역이 19.2%에 불과한 반면 읍지역은 39.8%, 면지역은 52.9%이다.

1995~2015년 평균 통근시간

단위: 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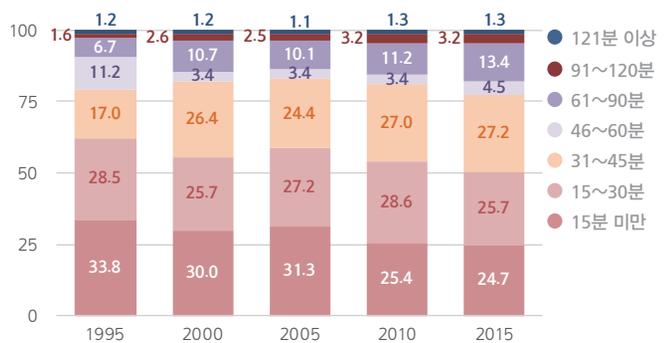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석 평균 통근시간은 도수분포표의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단, 통근시간 120분 이상은 120~150분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그 값을 135분으로 가정함.

1995~2015년 통근시간별 비율

단위: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지역별 통근시간 비율

단위: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거환경 만족도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정의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자신의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

2018년 85.9%, 전년대비 0.3%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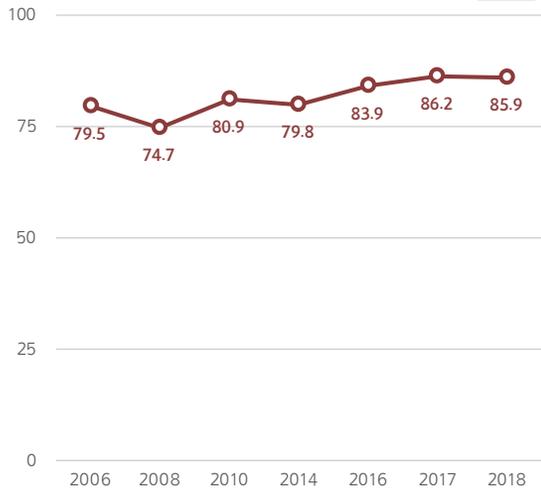
주거의 질은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되는 주거의 질 지표로 주거환경의 적절성을 나타낸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 주변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며, 거주 계층과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또는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주택정책이나 계획에 활용 가능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주택에서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면서 주거환경 만족도는 국민 삶의 질에 중요한 지표이다.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은 2018년 85.9%로 2017년 86.2%에 비해 0.3%p 감소하였지만, 2008년 74.7%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유형별로 주거환경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91.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아파트 다음으로는 연립주택이 83.5%로 높고,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이 75.6%로 가장 낮으며, 나머지 주택 유형들은 80% 전후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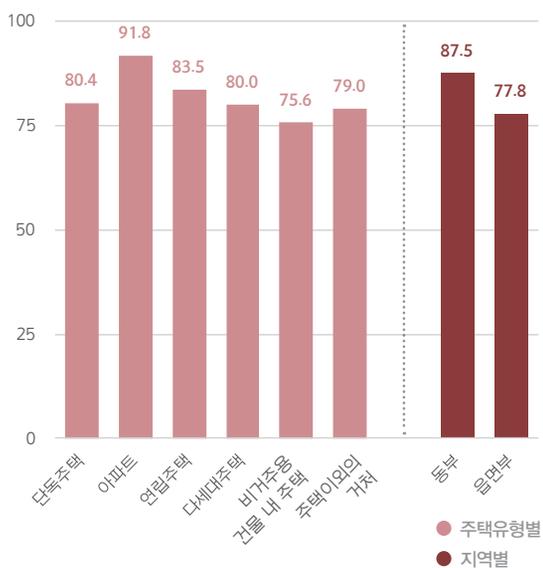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87.5%로 농촌 지역(77.8%)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2006~2018년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석 2012년은 5점 척도로 조사되어 제외.

2018년 주택유형,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08

환경

Environment



환경이란?

환경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매우 즉각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환경은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대기 및 수질오염), 간접적(기후변화)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람들은 물, 자연과 같은 환경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점점 더 인정되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환경적인 쾌적함과 불편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람들의 실제 선택(예,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환경 조건은 기후변화와 가뭄 또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재산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추세

환경 영역에 포함되는 9개 지표의 전기대비 최근 추세를 보면 개선지표는 6개, 악화지표는 2개, 전기와 동일한 지표 1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환경 영역에 포함되는 객관적 지표인 미세먼지 농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모두 개선되었으나 주관적 지표는 차이를 보인다. 주관적 지표 중 사람들의 체감도가 높은 환경분야인 대기질과 수질 만족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음과 녹지환경 만족도,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도는 개선되었다.

측정지표

-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 미세먼지 농도(PM_{2.5})
-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 대기질 만족도
- 🔴 수질 만족도
- 🟡 토양환경 만족도
- 🟢 소음 만족도
- 🟢 녹지환경 만족도
- 🟢 기후변화 불안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Public park size per person in a city

정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

측정 방법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도시공원 조성면적(결정면적-미집행면적) ÷ 도시지역 총인구

2018년 10.1km², 전년대비 0.5km²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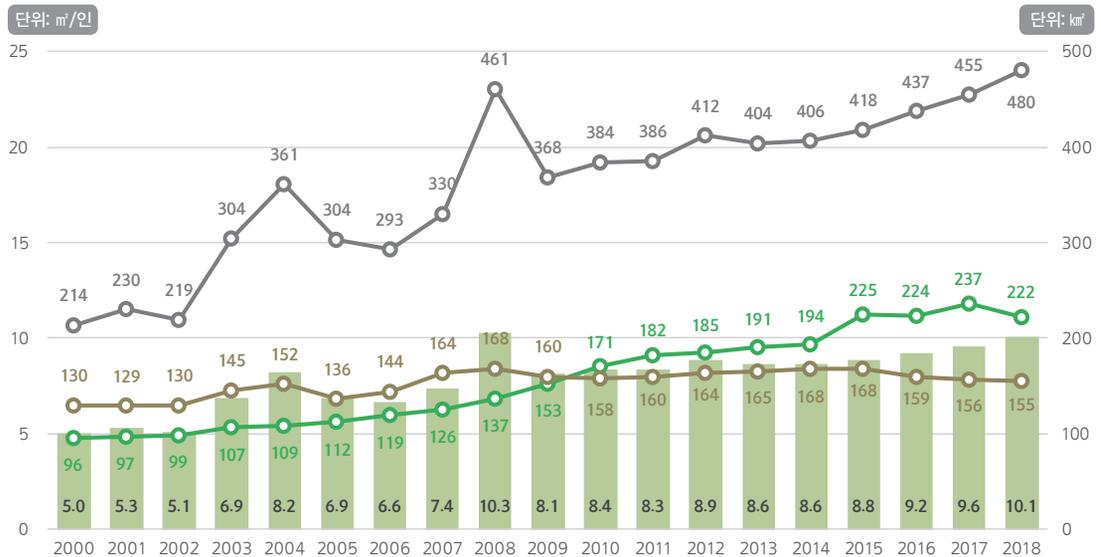
도시공원이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이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의 양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거주지 내에 접근이 용이한 도시공원의 유무는 개인 삶의 질과 여가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018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0.1km²로 2017년 9.6km²에 비해 0.5km² 증가하였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00년 5.0km²에서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 10.3km²까지 증가하였다. 2009년 8.1km²로 감소한 이후 2015년까지 8km² 후반의 비슷한 면적을 유지하다 2016년부터 9km²대에 진입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시공원 조성면적의 실면적은 2000년 214km²에서 2018년 480km²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녹지' 면적은 같은 기간 96km²에서 222km²로 증가하여 도시공원과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휴양시설인 '유원지' 면적은 같은 기간 130km²에서 155km²로 증가하여 큰 변화없이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녹지 등의 면적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공원의 경우 결정면적(947km²) 대비 조성면적(480km²)이 50.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0~2018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 주석 ① 도시공원 :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
 ② 녹지 :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③ 유원지 :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휴양시설
 ④ 조성면적=결정면적-미집행면적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도시공원 조성면적
- 녹지
- 유원지

미세먼지 농도(PM_{2.5})



Fine dust concentration level

정의 대기 중 미세먼지(PM_{2.5}, 지름 2.5 μ m 이하의 먼지)의 농도로 측정

측정 방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한 평균값

2018년 22.8 μ g/m³, 2015년 이후 개선

대기오염은 인체 및 생태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문제이다. 여러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이다. 최근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PM_{2.5})는 입자크기가 작아서 폐포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의 악화,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 시정을 악화시키는 물질로써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으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 심각성과 비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개 대도시의 미세먼지(PM_{2.5}) 농도를 인구 가중평균하여 합산한 값은 2018년 22.8 μ g/m³로 2015년 25.2 μ g/m³보다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24 μ g/m³로 가장 높으며, 대구, 인천, 대전이 22 μ g/m³로 가장 낮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인천의 경우 2015년 29 μ g/m³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 22 μ g/m³로 감소하였고, 대전도 같은 기간 28 μ g/m³에서 22 μ g/m³로 감소하였다. 7개

2015~2018년 미세먼지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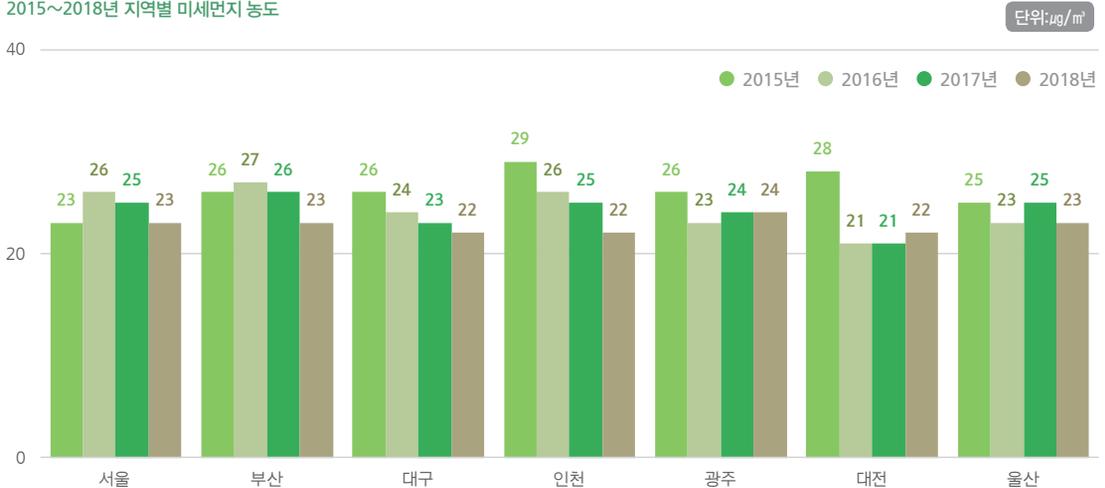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석 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도시 연평균 미세먼지(PM_{2.5})농도의 인구가중 평균값임.

② 인구는 추계인구임.

2015~2018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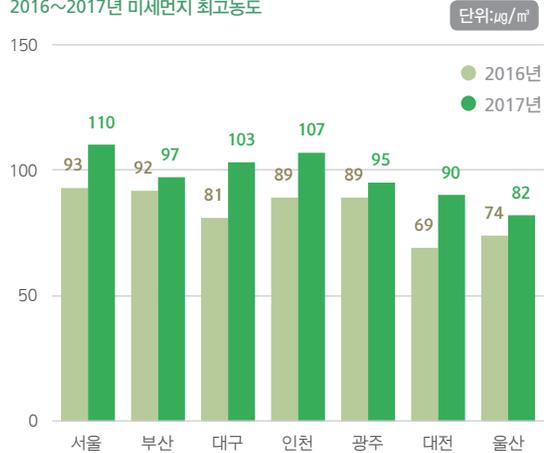
대도시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추세를 보인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개 대도시에서 2015년 이후 감소추세이나, 해당 연도의 최고농도 수치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16년과 2017년의 미세먼지 최고농도를 비교해보면 서울은 93 $\mu\text{g}/\text{m}^3$ 에서 110 $\mu\text{g}/\text{m}^3$ 로 증가하여 7개 대도시 중 2017년 가장 높은 최고농도를 보인다. 대구와 대전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2 $\mu\text{g}/\text{m}^3$, 21 $\mu\text{g}/\text{m}^3$ 증가하여 최고농도의 증가폭이 가장 크며, 부산과 광주, 울산지역에서 최고농도의 증가 정도가 10 $\mu\text{g}/\text{m}^3$ 로 낮은 편이다. 2016년과 비교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최고농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OECD에서는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미세먼지 농도(PM_{2.5})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25.1 $\mu\text{g}/\text{m}^3$ 로 OECD 국가 평균인 12.5 $\mu\text{g}/\text{m}^3$ 인 것과 비교해볼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캐나다의 미세먼지 농도가 7.0 $\mu\text{g}/\text{m}^3$ 이하로 낮은 편이며, 비교국가 중 미세먼지가 높은 나라에 속하는 헝가리나 이탈리아도 16 $\mu\text{g}/\text{m}^3$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는 11.9 $\mu\text{g}/\text{m}^3$ 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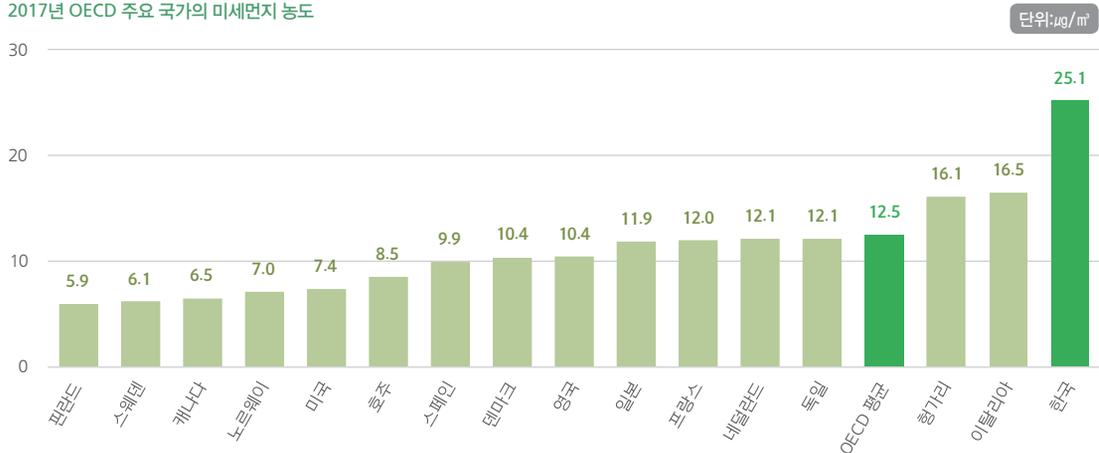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고, 최고농도도 매년 높아지고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체감도는 나쁜 편이다.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커서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미세먼지 저감정책 실시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016~2017년 미세먼지 최고농도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2017년 OECD 주요 국가의 미세먼지 농도



출처 OECD, *Air quality and health*.

주석 국가별 미세먼지(PM_{2.5})농도는 위성관측 자료와 화학수송모형(chemical transport model)을 이용한 추정치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Water supply of rural area

정의 면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 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면 지역 급수인구 ÷ 면 지역 총인구) × 100

2017년 75.6%, 전년대비 2.9%p 증가

상수도는 보건위생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과 소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상수도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편의시설이지만 상수도의 보급수준은 각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주택구조,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지역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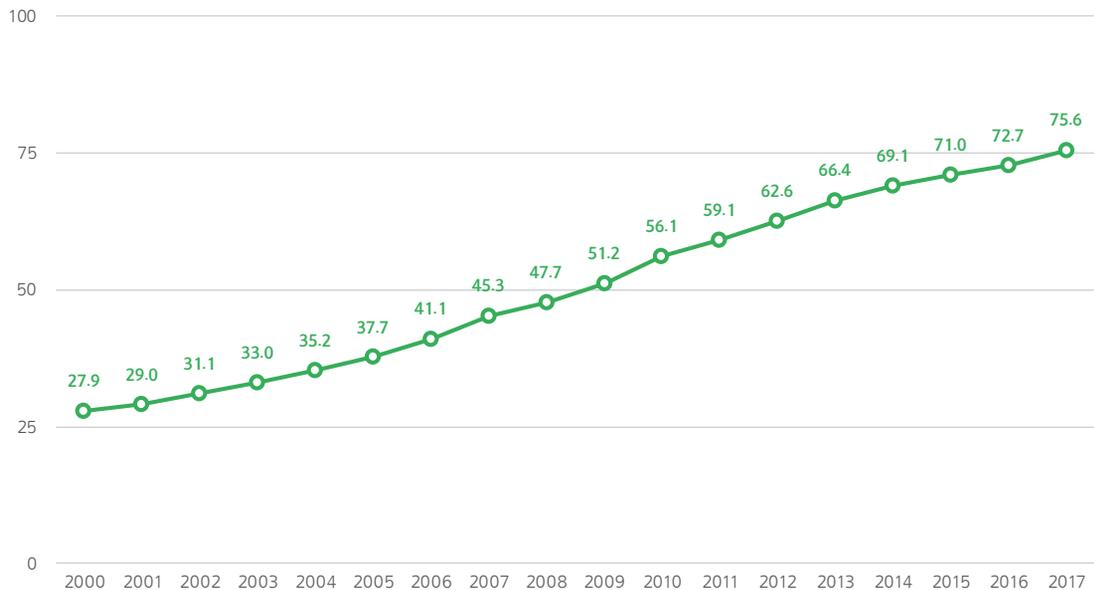
한국은 정부의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 선진국 수준인 95% 이상의 상수도 보급률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지역간 격차는 아직 남아 있다. 도시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에 가깝지만 농어촌 지역은 그렇지 않다.

면지역에 속하는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7년 75.6%로 2016년 72.7%에 비해 2.9%p 증가하였다. 농

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0년 27.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17년간 2000년 수치의 2.5배가 넘었음을 보여준다.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4.9%p가 증가하였고 이는 가장 큰 폭의 증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인 99.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000~2017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단위: %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주석 급수인구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구는 포함하지 않음.

대기질 만족도



Air quality satisfaction

정의 거주지의 대기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합산

2018년 28.6%, 2016년보다 3.1%p 감소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민들의 체감은 낮은 편인데, 이는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28.6%로 2016년 31.7%보다 3.1%p 감소했다.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36.0%에서 2012년 40.1%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2014년보다 4.3%p 감소하였다. 이러한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체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기질 만족도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여 2018년 농촌 지역의 대기질 만족도는 49.5%로 도시지역(24.2%)에 비해 두배 가량 높다. 도시와 농촌간의 2배 가량의 차이는 2010년 이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간의 만족도 차이는 2010년 30.0%p에서 2018년 25.3%p로 만족도가 감소하는 만큼 도시와 농촌간의 만족도 비율의 차이도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생활환경 분야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다. 5개 분야 중 도시와 농촌간 만족도 차이가 다음으로 큰 분야는 소음 만족도로 지역간 차이는 21.7%p로 대기질 만족도의 차이에 비하면 작은 편이고 다른 분야들은 모두 20%p 미만의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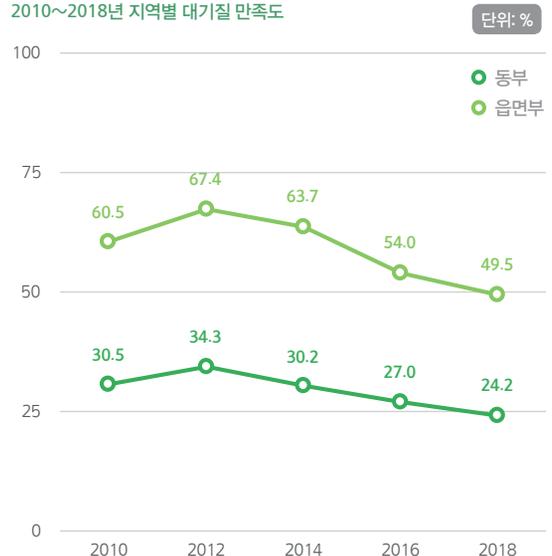
2010~2018년 대기질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0~2018년 지역별 대기질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수질 만족도

Water quality satisfaction



정의 거주지의 수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수질)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18년 29.3%, 2016년보다 3.9%p 감소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수질은 먹는 물과 연관되어 있어 대기환경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체감도도 높아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29.3%로 2016년 33.2%보다 3.9%p 감소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기질 만족도(28.6%)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대기질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33.9%에서 2012년 36.9%로 증가한 이후 2014년 34.9%, 2016년 33.2%, 2018년 29.3%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폭이 대기질 만족도 보다는 낮은 편이다.

수질만족도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에서 차이를 보여 2018년 농촌 지역의 수질 만족도는 45.4%로 도시지역(25.9%)에 비해 19.5%p 높다.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전체 대기질 만족도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 2012년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수질 만족도가 대기질 만족도(24.2%)보다 약간 더 높은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대기질 만족도(49.5%)보다 수질 만족도가 4.1%p 낮게 나타나 환경분야별 만족도의 지역별 차이를 보여 준다.

2010~2018년 수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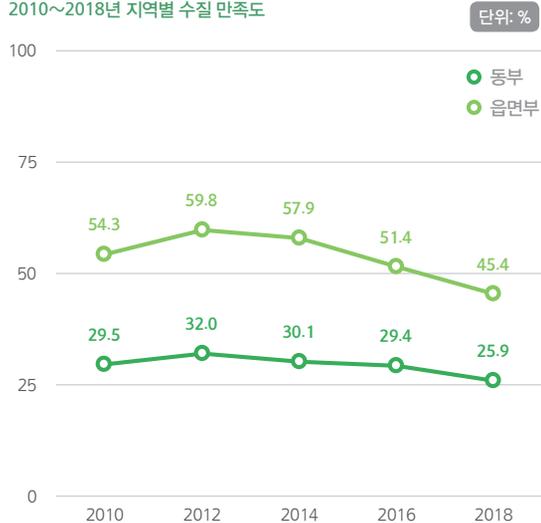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①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② 2010~2016년은 수질, 2018년은 하천으로 조사함.

2010~2018년 지역별 수질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토양환경 만족도



Soil satisfaction

정의 거주지의 토양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18년 29.4%, 2016년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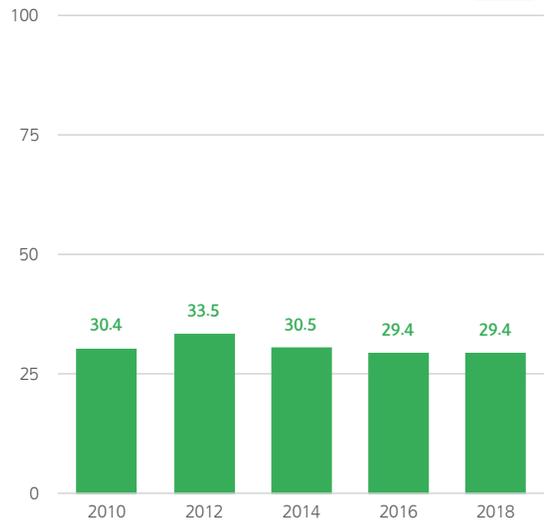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토양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29.4%로 2016년과 동일하여 변화가 없다. 토양환경 만족도는 수질 만족도(29.3%)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대기질 만족도(28.6%)보다는 약간 높다. 토양환경은 대기나 수질에 비해 개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 수준은 비슷하다.

토양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30.4%에서 2012년 33.5%로 증가한 이후, 2014년 30.5%, 2016년 29.4%, 2018년 29.4%로 2014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토양환경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보다 만족도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도시지역의 토양환경 만족도는 2012년 29.1%에서 2018년 26.2%로 2.9%p 감소하여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농촌지역은 같은 기간 54.8%에서 44.7%로 10.1%p 감소하였다.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대기질, 수질, 토양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대기질 만족도가 낮고 토양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이와 반대로 대기질 만족도가 가장 높고, 토양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는 실제 도시지역에서 대기환경이 더 안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농촌지역에서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토양에 대한 체감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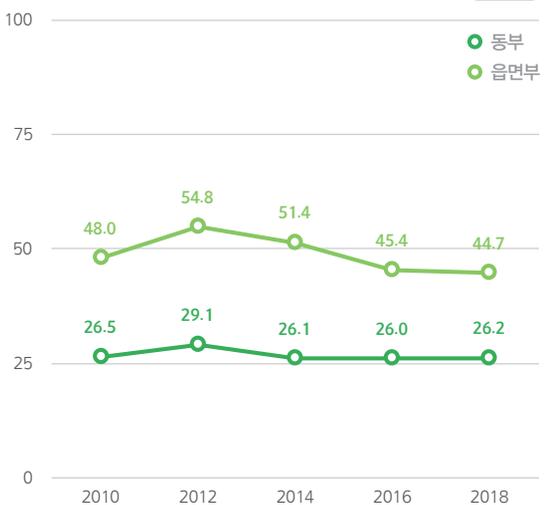
2010~2018년 토양환경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0~2018년 지역별 토양환경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소음 만족도

Noise satisfaction



정의 거주지의 소음공해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소음·진동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18년 29.9%, 2016년보다 2.4%p 증가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소음에 대한 체감도는 최근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이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도로변이나 전동차 등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음 만족도는 2018년 29.9%로 2016년에 비해 2.4%p 증가하였다. 대기질이나 수질에 대한 만족도가 최근 감소한 것과는 상반되며,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나 대기질, 수질, 토양환경보다 만족도도 높다.

소음 만족도는 2010년 27.3%에서 2012년 29.0%로 증가한 이후 2014년 26.9%, 2016년 27.5%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최근 증가하였다.

소음 만족도는 다른 생활환경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23%대에서 2018년 26.1%로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은 2012년 52.8%에서 2018년 47.8%로 감소추세이다. 다른 생활환경 분야에 비해서 체감만족도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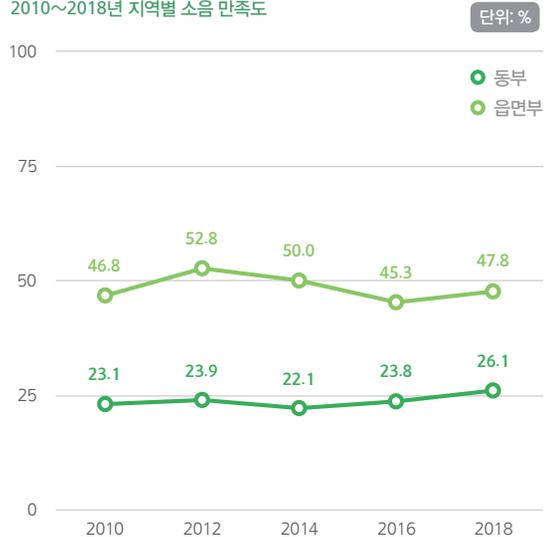
도시지역의 경우 소음 만족도는 대기질이나 수질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은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대기질 만족도보다는 낮지만 토양환경이나 수질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높다.

2010~2018년 소음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0~2018년 지역별 소음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녹지환경 만족도



Green environment satisfaction

정의 거주지의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산, 공원 등)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18년 50.2%, 2016년보다 8.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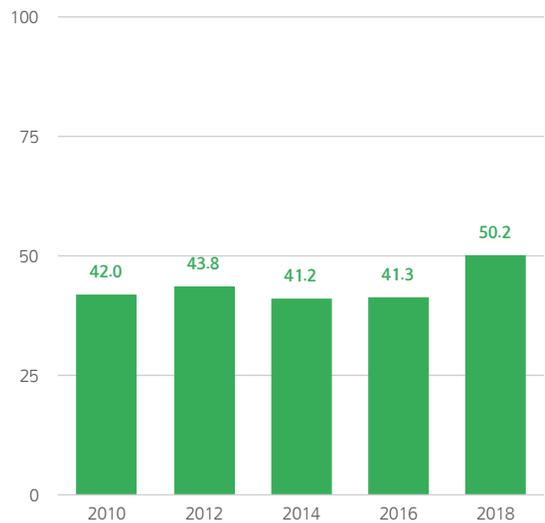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녹지환경은 살고 있는 지역내의 산이나 공원 등 자연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녹지환경은 도시공원과 같이 개인들의 여가생활 향유와도 연관되어 있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50.2%로 2016년 41.3%에서 8.9%p 높아졌다. 2016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변화인지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생활환경 분야들의 만족도가 3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여준다.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 또한 다른 생활환경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8년 기준 농촌 지역의 만족도는 63.6%이고 도시 지역의 만족도는 47.3%이다. 도시지역의 녹지환경 만족도가 2010년 37.8%에서 2016년 39.8%로 큰 변화없이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 2018년 7.5%p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농촌지역의 경우 2010년 60.8%, 2014년 55.2%에서 2016년 48.6%로 크게 감소한 뒤 2018년 63.6%로 15.0%p가 증가하였다.

녹지환경 만족도는 다른 생활환경 분야에 비해 도시와 농촌간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적은 분야로 2018년 도시와 농촌간의 만족도 차이는 16.3%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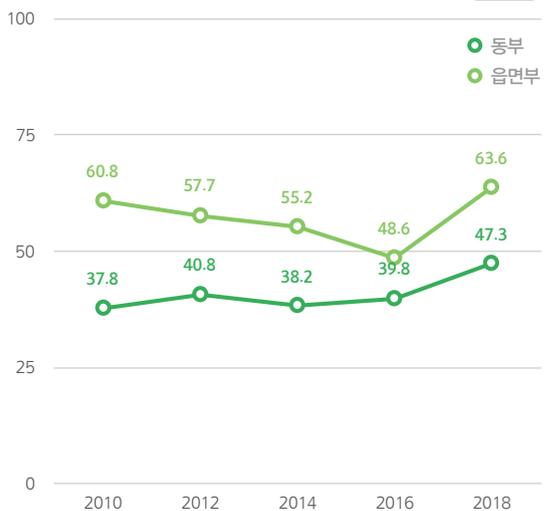
2010~2018년 녹지환경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0~2018년 지역별 녹지환경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기후변화 불안도



Climate change recognition

정의 기후변화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기후변화(폭염, 홍수 등) 문제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 또는 '약간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18년 49.3%, 2016년보다 13.5%p 감소

기후변화는 전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정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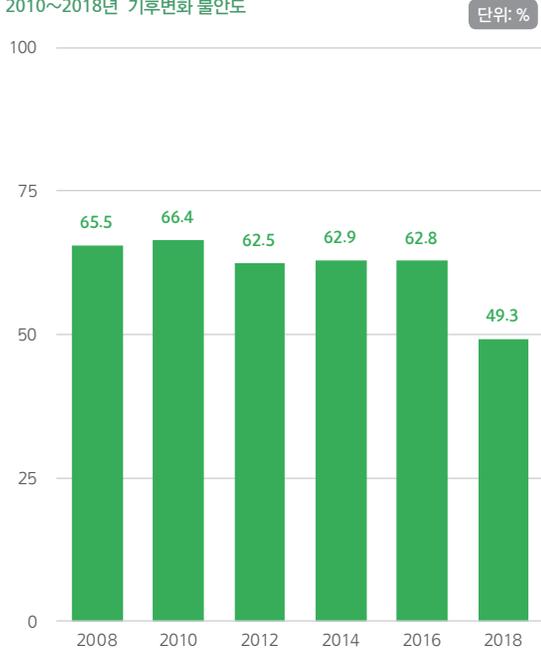
2018년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 정도는 49.3%로 2016년 62.8%에서 13.5%p 감소하였다. 2008년 이후 65.5%에서 2012년 62.5%로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8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도시와 농촌 지역간에 기후변화 불안정도에 대한 큰 차이는 없으나 도시지역이 49.5%, 농촌지역이 48.4%로 도시지역에서 불안도가 약간 높다.

성별로는 남자(45.6%)보다 여자(52.9%)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어, 여자가 7.3%p 높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2012년 이후 약 6~7%p로 여자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50대의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도가 50% 이상으로 높고, 20대 이하와 60세 이상의 경우는 45% 전후이다.

2010~2018년 기후변화 불안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8년 지역, 성, 연령별 기후변화 불안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09

안전

Safety



안전이란?

안전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해 주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반으로 안전을 “각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을 위협에 빠트리는 모든 외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Stiglitz et al., 2009)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전 영역은 대부분 범죄와 사법체계와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교통, 식품 위생, 직장 업무 등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최근 추세

안전 영역에 포함되는 9개 지표 중 개선된 지표는 5개, 악화된 지표는 3개로 개선 지표 비율이 55.6%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안전사고,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범죄피해율 등의 사고 발생은 개선된 반면, 아동학대피해나 산재사망률, 화재 사망자수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들의 주관적인 안전에 대한 평가는 최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측정지표

- ☹ 가해에 의한 사망률
- ☺ 범죄피해율
- ☺ 야간보행 안전도
- ☹ 산재사망률
- ☹ 화재 사망자수
-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해에 의한 사망률



Homicide rate

정의 인구 10만 명당 타살 사망자수

측정 방법 가해에 의한 사망률 = (가해(타살)에 의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인구) × 100,000

2018년 0.8명, 전년과 동일

타인의 가해에 의한 사망, 즉 타살은 범죄피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OECD에서 작성되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의 24개 지표 중 하나로, 안전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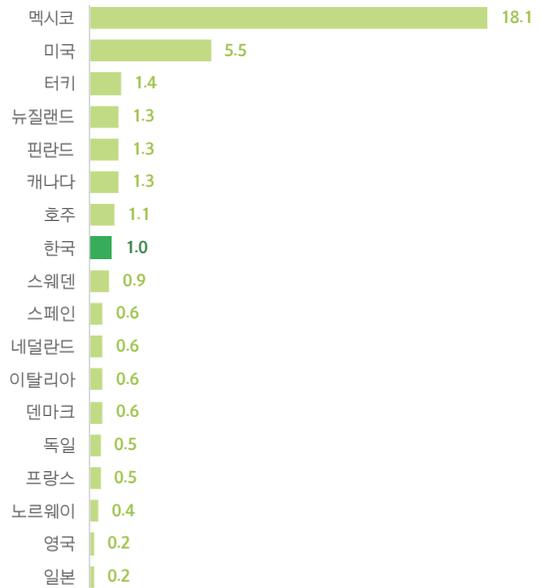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2000년대 초반에는 인구 10만 명당 1.8명 정도에서 2005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0.9명으로 낮아진 이후 2018년 현재는 0.8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00년 1.9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0.8명을 기록하였다. 여자는 2000년 1.6명에서 2005년 1.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점차 감소하여 2018년 0.7명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수치의 감소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2014년 이후로는 성별 간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2019년 발표된 BLI에서는 40개국 중 22위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명이고, 캐나다, 핀란드 뉴질랜드 등이 1.3명으로 우리나라

라 보다 높은 편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멕시코(18.1명) 미국(5.5명)이 매우 높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0.2명으로 가장 낮다.

2015년 OECD 주요국의 가해에 의한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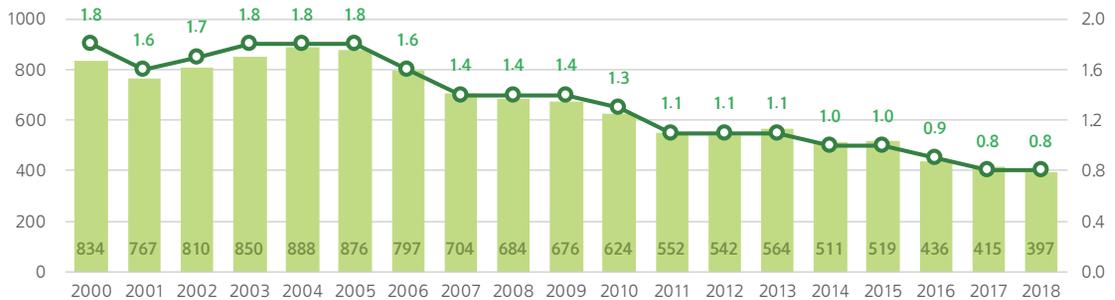
출처 OECD, Better Life Index

주석 호주 · 네덜란드 · 스웨덴(2016년), 프랑스(2014년), 캐나다 · 뉴질랜드(2013년)

2000~2018년 가해에 의한 사망률

단위: 명

단위: 명/10만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사망률 ● 사망자 수

범죄피해율

Crime victimization rate



정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집계된 지난 1년 동안 범죄피해율

측정 방법 지난 1년간 각 유형의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

2016년 3.56%, 2014년 대비 0.18%p 감소

범죄발생은 개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사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이다.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과 검찰이 인지하고 처리한 사건들을 집계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어도 사법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되어도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공식 범죄통계에서 빠지는 이른바 ‘숨은 범죄’의 문제가 생겨난다. 공식 범죄통계는 사법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표본조사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수집되는 개인들의 범죄피해 자료는 ‘숨은 범죄’를 파악함으로써 범죄발생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로 개인들이 직접 응답한 범죄피해율을 추정해 보면, 2012년 4.6%에서 2014년 3.74%로 줄었고 2016년에는 3.56%로 감소하였다. 폭력범죄 피해와 재산범죄 피해로 나누어서 보면, 피해를 자체는 재산범죄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피해율의 감소 추세는 폭력범죄가 가파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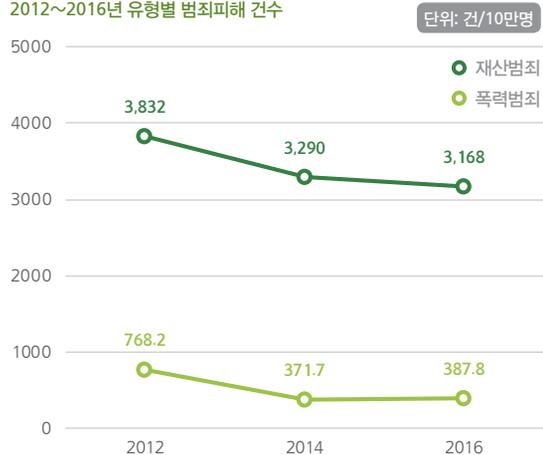
2012~2016년 범죄피해율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석 ① 범죄피해율 = 각 유형의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산출
 ② 전체 피해율은 조사대상자수 기준이고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피해율은 응답자수 기준이므로 유형별 피해율의 합이 전체 피해율과 다를 수 있음.

2012~2016년 유형별 범죄피해 건수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석 전체 피해율은 조사대상자수 기준이고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피해율은 응답자수 기준이므로 유형별 피해율의 합이 전체 피해율과 다를 수 있음.

야간보행 안전도



Feeli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정의 야간보행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18년 63.5%, 2016년보다 4.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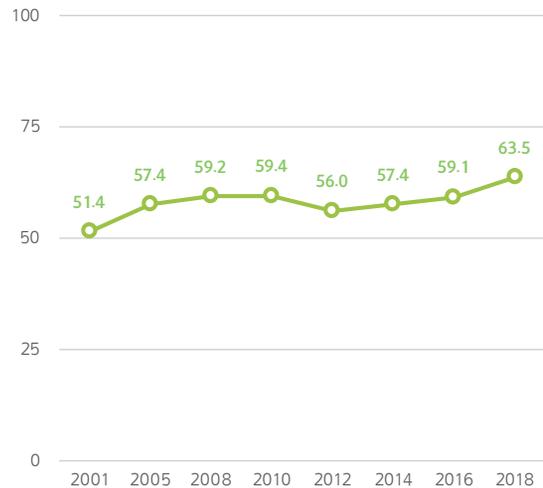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은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인 야간보행 안전도는 집 근처에서 야간 보행시 두려움을 느끼는지로 측정된다. OECD BLI에서도 이 지표를 '가해에 의한 사망률'과 함께 안전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야간에 집 근처 보행 시 두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두려운 곳이 없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1년 51.4%에서 증가추세를 보여 2018년에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보행 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3.5%로 전체 인구의 2/3에도 못 미친다.

야간보행 안전도는 남녀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여자가 53.0%, 남자가 74.3%로 남자보다 여성의 야간보행 안전도가 20%p 이상 낮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일관되게 높지만 그 차이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2001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야간보행 안전도는 각각 49.0%, 60.9%로 10%p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2018년에는 각각 63.0%, 66.0%로 도시지역에서 야간보행 안전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50%대로 낮은 반면, 60세 이상은 75.3%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야간보행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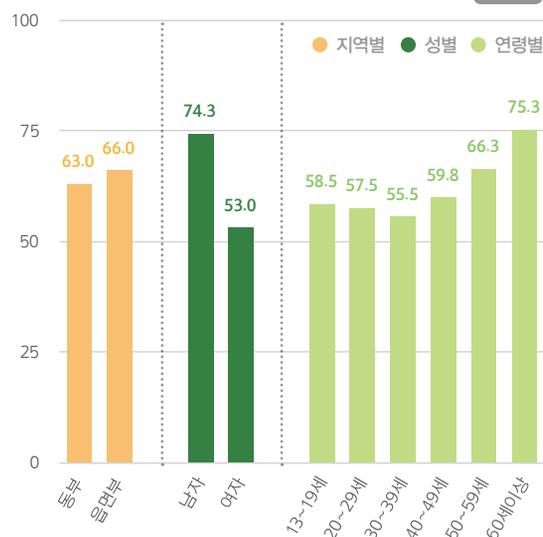
2001~2018년 야간보행 안전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까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8년 지역, 성, 연령별 야간보행 안전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재사망률

Industrial accident mortality



정의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재해 사망자수

측정 방법 산재사망률 = (산재 사망자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00

2018년 1.12명, 전년대비 0.07명 증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근로여건의 안전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지표로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측정함으로써 근무환경의 안전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다. 산업재해의 수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통계에 포착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고가 있고, 누락 정도가 국가 또는 시기마다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표가 바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이다. 산재사망률이란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한 재해 사망자의 비율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로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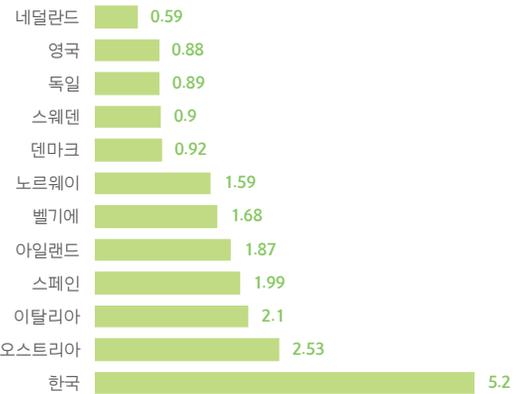
산재사망률은 2003년 근로자 1만 명당 2.55명에서 2010년 1.36명, 2016년 0.9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6년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18년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 명당 1.12명이다. 2018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142명으로 2017년 1,957명보다 증가했으며, 산재사망률도 약간 증가하였다.

유럽의 주요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산재사망

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로 계산된 산재사망률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10만명당 5.2명인 반면, 이탈리아는 2.1명이고,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은 근로자 10만명당 1명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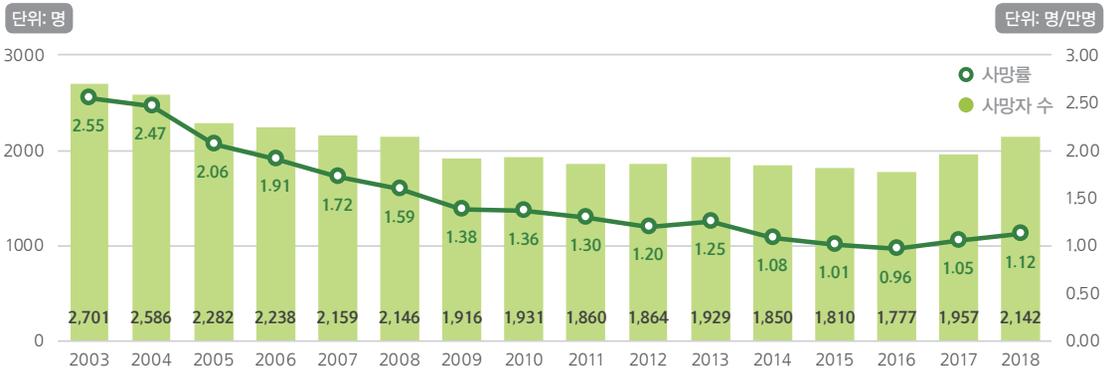
2017년 유럽국가와 한국의 산재사망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재인용)
주석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기준

2003~2018년 산재사망률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주석 ①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

②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 포함)

화재 사망자수



Number of fire fatalities

정의 연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

측정 방법 연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로 산출

2018년 369명, 전년대비 24명 증가

화재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사고발생시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 등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이다. 화재는 예방과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그 사회의 화재안전 수준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8년 369명으로 2017년보다 24명 증가하였고, 화재 발생건수는 2017년 44,178건에서 2018년 42,338건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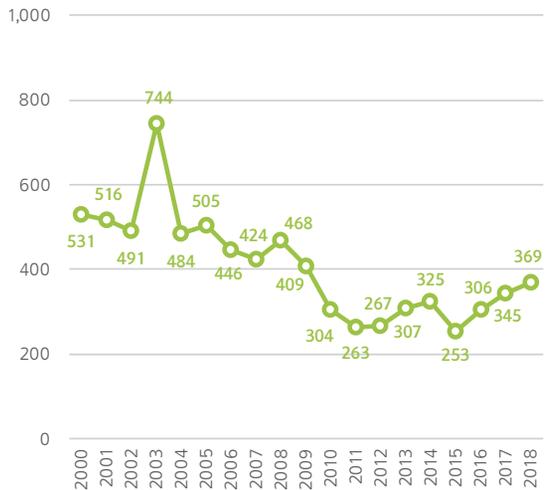
화재 사망자수는 2000년 531명에서 2003년을 제외하고는 감소추세를 보여 2009년까지는 매년 400명 이상 발생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연간 300명 내외로 감소하였다. 2015년 화재 사망자수는 253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추세이다.

화재 발생건수는 2000년 34,844건에서 2003년 31,37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49,631건으로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41,000~44,00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18년까지 화재 사망자수는 162명 감소하였으나, 화재발생건수는 같은 기간 7,494건이 증가하였다. 과거보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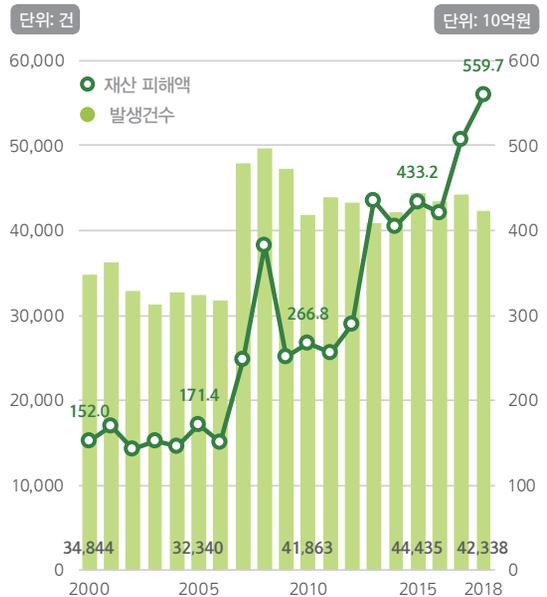
반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화재발생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피해액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준다.

2000~2018년 화재 사망자수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2000~2018년 화재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Road casualty rate

정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측정 방법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 총인구) × 100,000

2018년 7.3명, 전년대비 0.8명 감소

자동차는 통행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사망률이나 보행자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거리 보행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2000년 21.8명에서 2010년 11.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이후부터는 소폭으로 감소추세이다. 2018년에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전년대비 0.8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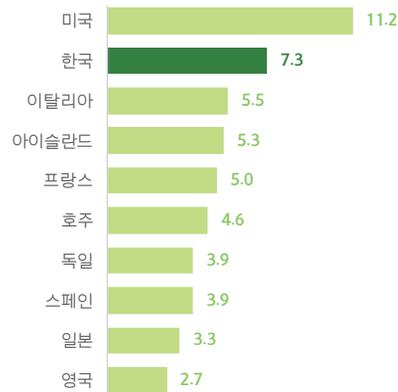
반면 도로교통사고 건수는 2000년 290,481건에서 2018년 217,148건으로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이 사망자수 만큼 크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자수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볼 때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영국이나 일본의 두 배 이상으로 주요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

2018년 OECD 주요국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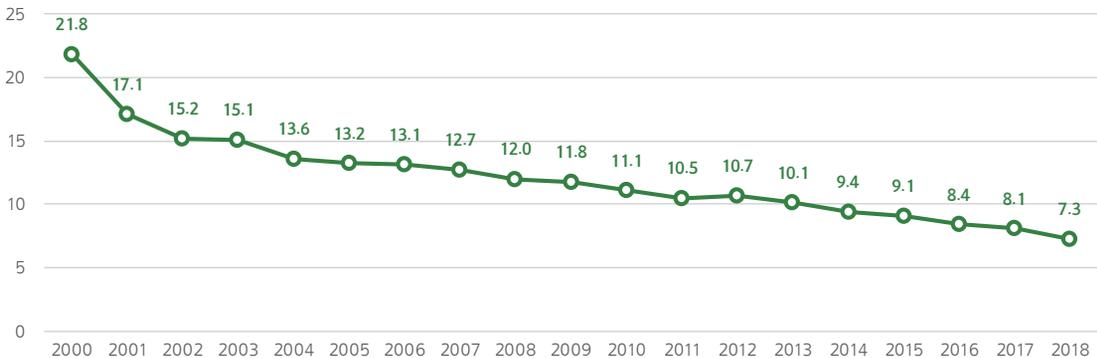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출처 OECD, Transport Safety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0~2018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석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Safety accident-induced child death rate

정의 만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측정 방법 (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자수 ÷ 14세 이하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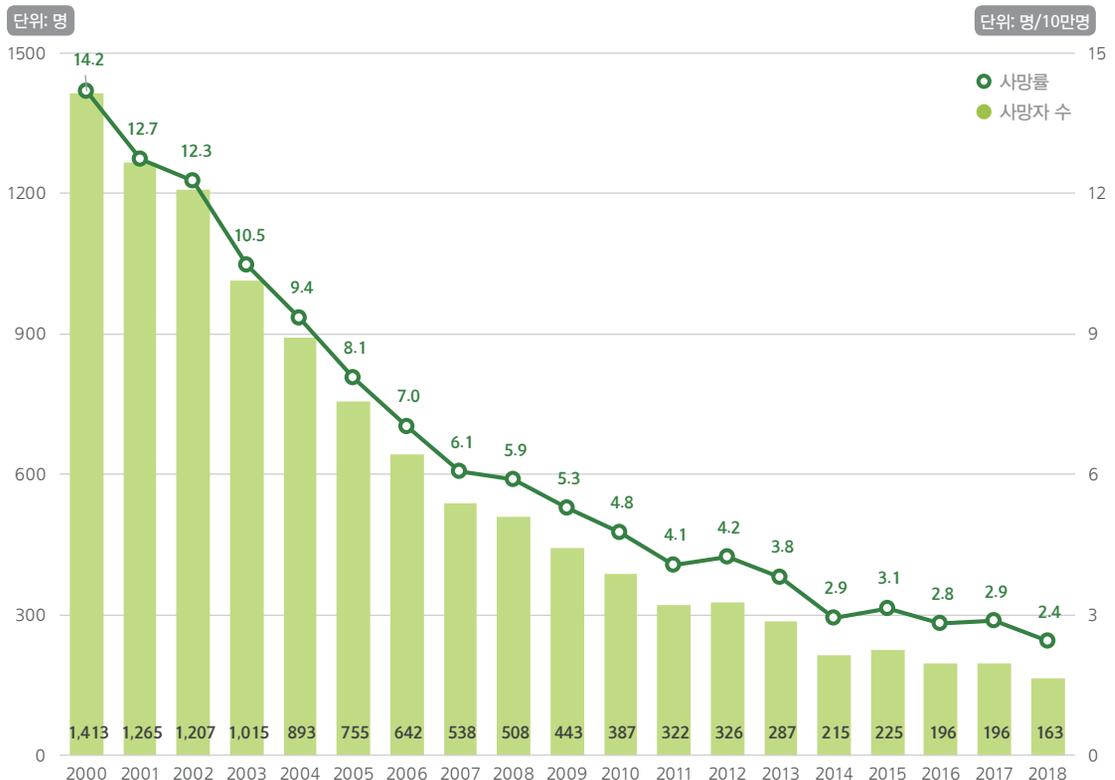
2018년 2.4명, 전년대비 0.5명 감소

아동은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더 쉽다.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사회의 안전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와 함께 아동들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이다.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만 14세 이하 아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8

년 163명으로, 14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아동 인구 10만 명당)은 2000년 14.2명에서 2010년 4.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소폭으로 감소 추세이다.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로 보면 2000년 1,413명에서 2010년 387명으로 1/3 이하로 감소하였고, 2015년 22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2018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석 안전사고 범위 : 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 포함(사망의 외인 중 자살과 타살 제외한 사고사)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Child abuse rate

정의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아동인구(18세 미만) 대비 건수

측정 방법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례 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2018년 301.4건, 전년대비 22.5% 증가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인 어린 시절의 학대경험은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최근에는 가정 내에서의 학대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8년 아동 10만 명당 301.4건으로 2017년 265건에 비해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피해 경

험률은 2001년 아동 10만 명당 17.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실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과거보다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향상과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제정 강화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과거보다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 피해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001~2018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Social safety evaluation

정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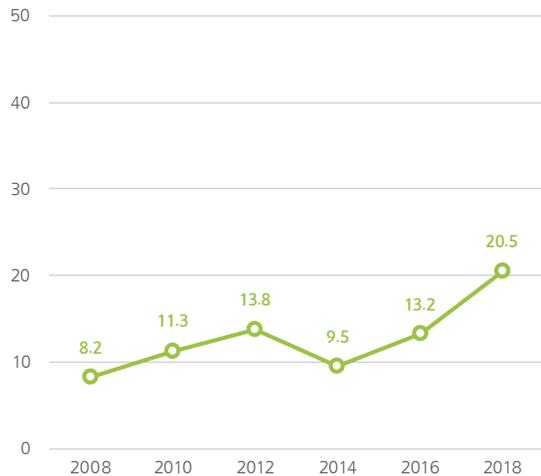
2018년 20.5%, 2016년보다 7.3%p 증가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주관적 지표의 파악이 필요하다. 실제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이 감소하였어도 실제 국민들이 사회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추세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고 안전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20.5%로, 2016년 13.2%보다 7.3%p 증가하였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2008년 8.2%에서 2012년 13.8%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9.5%로 감소하였다. 2014년의 감소는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6년부터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24.5%로 여자보다 7.9%p 높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7.2%로 가장 낮고, 13~19세가 26.8%로 안전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보면 13~19세는 일관되게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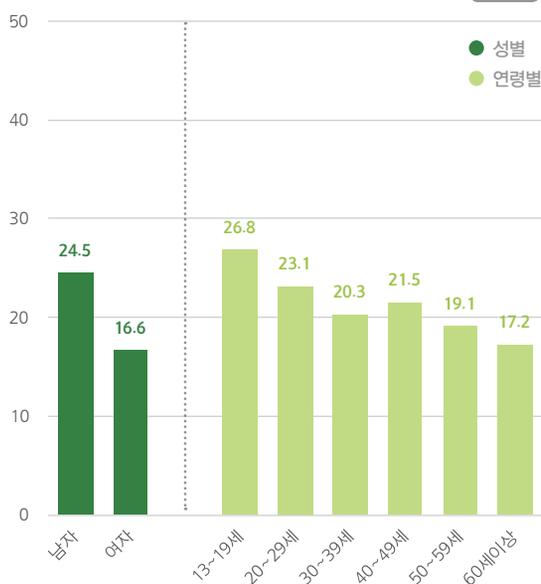
2008~2018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10년까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8년 성, 연령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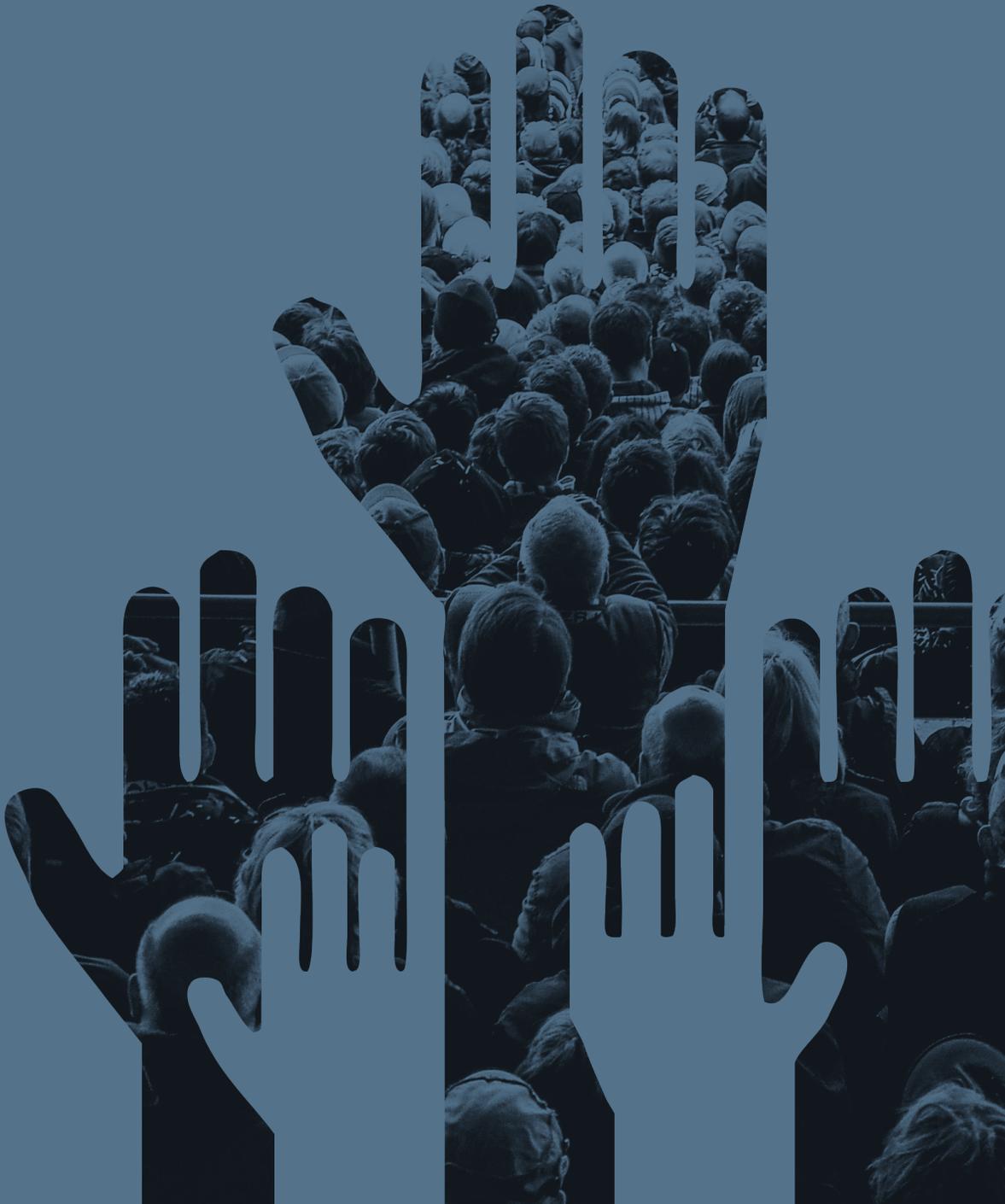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10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란?

집단 간 차이 또는 불평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정부 및 시장의 작동논리와 시민사회의 논리가 균형을 유지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개선된 여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제로써 “시민참여”를 선정하였다. 사회의 전반적 발전과 이에 대한 다수의 향유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집합적 차원의 사회의 질이 개인의 일상적 영역에서 주관적 및 객관적 차원의 삶의 질로 뿌리내리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무와 권리, 정치참여, 신뢰를 포함하였다. 앞의 세 가지는 건 강한 시민사회가 작동하는 구체적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이며, 이것이 적절하게 작동한 결과 신뢰가 이루어진다.

최근 추세

시민참여 영역의 7개 지표 중 개선된 지표는 5개, 악화된 지표는 2개로 개선 지표의 비율은 71.4%이다. 투표율이나 시민의식 등 개인의 정치참여나 시민의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역량감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도 과거보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과거와 비교할 때 사회의 부패정도나 기관신뢰, 대인신뢰 등은 최근 개선되었다.

측정지표

- 🟢 선거투표율
- 🔴 정치적 역량감
- 🟢 부패인식지수
- 🟢 기관신뢰도
- 🟢 시민의식
- 🔴 자원봉사 참여율
- 🟢 대인신뢰도

선거투표율



Voting rate

정의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선거투표율 = (대통령선거 투표자수 ÷ 대통령선거 선거인수) × 100

2017년 77.2%, 5년 전보다 1.4%p 증가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로 대표자의 선출이나 정치적 및 정책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민의의 정치적 반영이다. 정치과정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이다. 따라서 선거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건국 이후 1990년대까지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낮아지기 시작해 2007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63.0%까지 낮아졌다. 최근 들어 대통령선거(2007년 63.0%에서 2017년 77.2%) 투표율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2017년에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74%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60대는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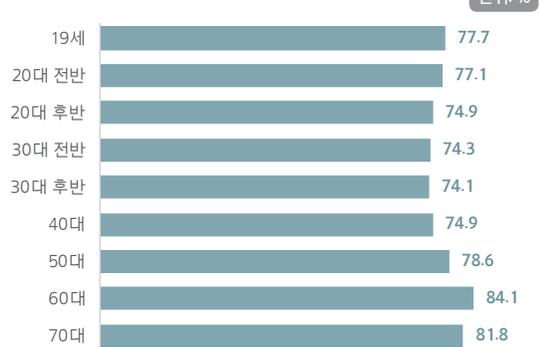
1987~2017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지역별로 투표율은 보면 광주와 세종의 투표율이 80% 이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반면, 충남과 제주 지역에서는 72%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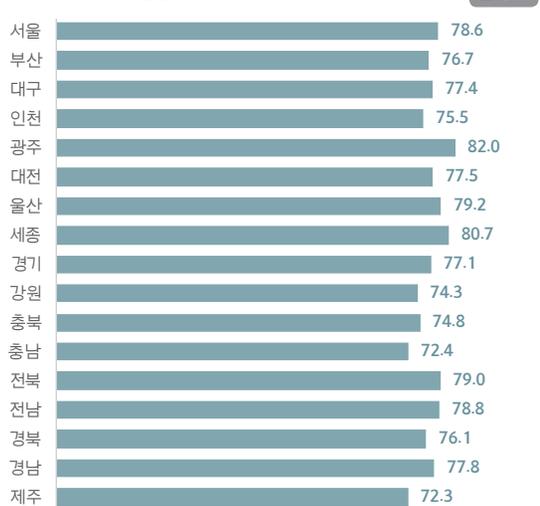
2017년 연령대별 대통령 선거 투표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주석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를 표본조사의 결과임.

2017년 시도별 대통령 선거 투표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정치적 역량감



Perception of political empowerment

정의 스스로 정치적 역량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와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산술평균한 값.

2018년 22.0%, 전년과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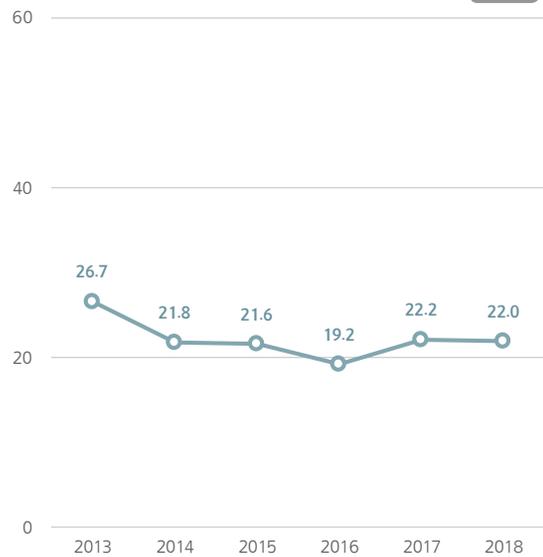
시민이 정치와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정치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 역량감이다. 정치 참여는 시민 스스로 정치적 역량감을 가질 때 높아지며, 정치적 역량감은 시민참여의 잠재적 수준을 보여준다.

정치적 역량감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와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으로 측정된다. 각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 22.0%로 비교적 낮다. 이 비율은 2013년 26.7%에서 감소하여 2016년 19.2%로 낮아졌으며, 22% 전후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각 항목별로 보면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23.1%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는 20.8%이다. 정부가 하는 일에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23.1%로 여자(20.9%)보다 2.2%p 높은 편이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의 정치적 역량감이 상대적으로 높아, 30대는 24.9%, 40대는 23.9%이다. 반면 60대는 18.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정치적 역량감을 보인다.

2013~2018년 정치적 역량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년 성, 연령별 정치적 역량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기관신뢰도



Trust on authorities

정의 주요 기관과 제도에 대해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16개 기관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와 '약간 믿을 수 있다'의 응답비율을 합산

2018년 41.2%, 전년대비 0.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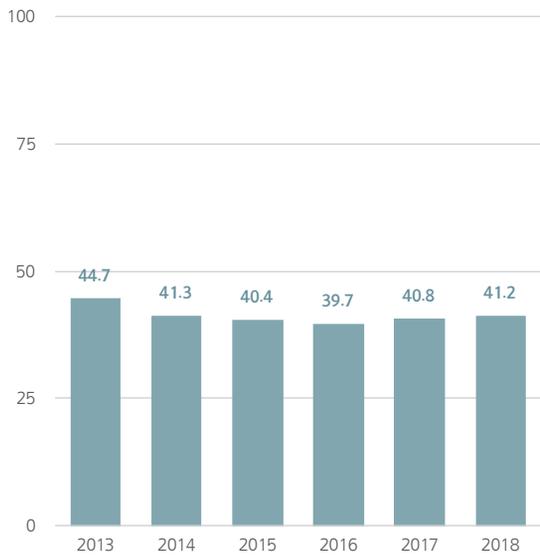
사회의 여러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제도 및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며 또한 국민 전체의 요구나 이해를 잘 대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공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 기관 및 제도의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관신뢰도는 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 방송사, 신문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의 1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로 측정된다.

기관신뢰도는 2018년 41.2%로, 2017년 40.8%에서 증가하였다. 2013년 44.7%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부기관별로 신뢰도를 보면 '의료계'가 54.9%로 신뢰도가 가장 높고, '금융기관'도 52.2%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15.0%로 가장 낮으며 '법원', '검찰', '노동조합', '신문사', '대기업'도 4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 경우 낮게 나타난 다른 기관들보다도 거의 절반이하의 낮은 신뢰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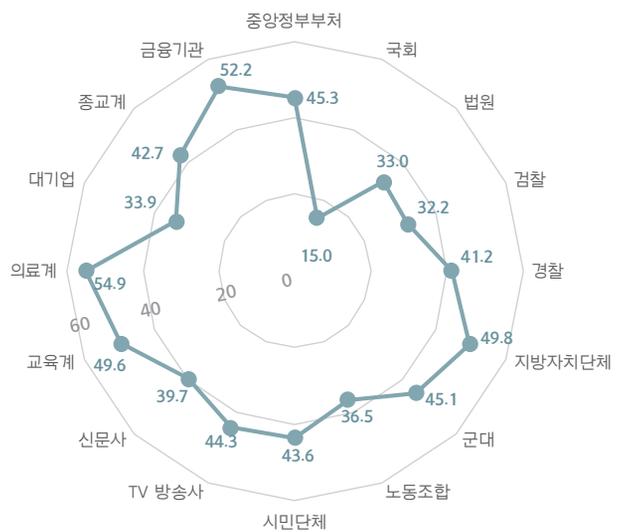
기관신뢰도는 여자가 42.4%로 남자(39.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30대의 기관신뢰도가 39.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2013~2018년 기관신뢰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년 기관별 신뢰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recognition

정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지수

측정 방법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작성한 100점 척도 점수를 10점 만점 척도로 환산한 값

2018년 5.7점, 180개국 중 45위

정부의 부패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을 주로 활용한다.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은 정부가 얼마나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여 공평무사하게 운영되는지를 알려준다. 정부가 청렴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운영과 성과도 좋아진다. UN에서 발간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요인 중 하나로 '부패'가 포함되는 만큼 사회의 부패정도는 삶의 질과 관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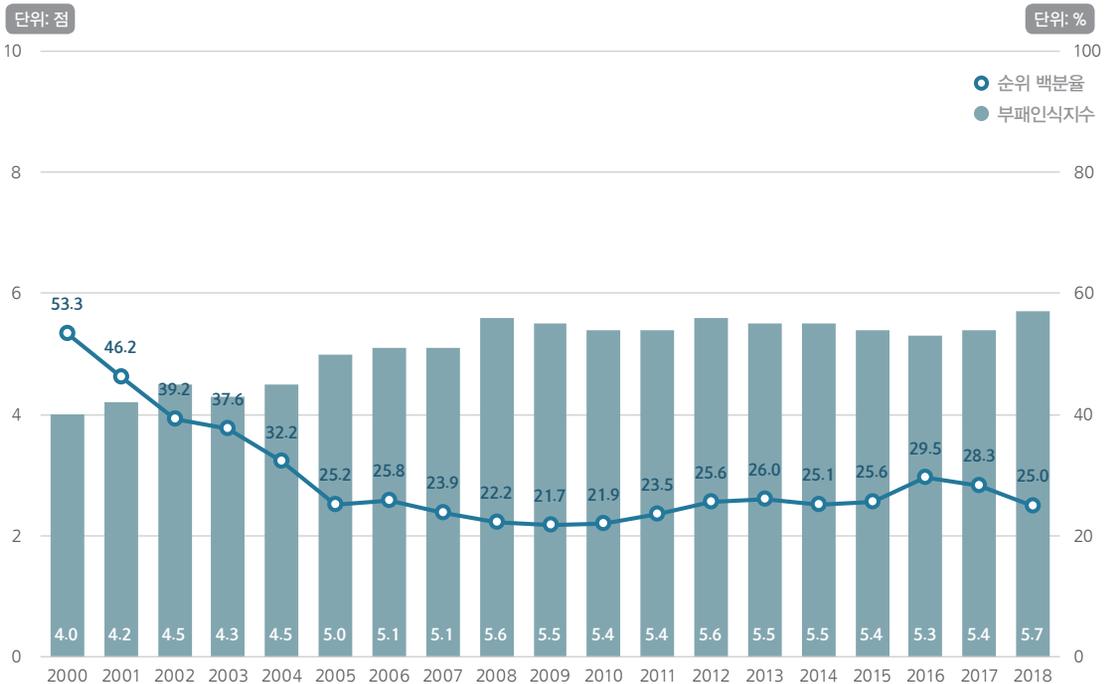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의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여 작성된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즉 청렴도는 2000년 4.0점에서 점차 높아져 2008년 5.6점을 전후로 하여 개선이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는 5.7점으로 전년보다 0.3점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51위/180개국)보다 순위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20개국)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가 7.0점 이

2000~2018년 부패인식지수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주석 ① 2012년 이후 자료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100점 척도 점수를 10점 척도로 환산한 값임.

② 순위 백분율은 조사대상국가를 연도별로 통일했을 때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냄.

상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부패인식지수와 순위 모두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부패인식지수는 2018년 덴마크가 8.8점으로 1위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등이 8.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5.2점), 헝가리(4.6점), 그리스(4.5점) 등 6개 국가만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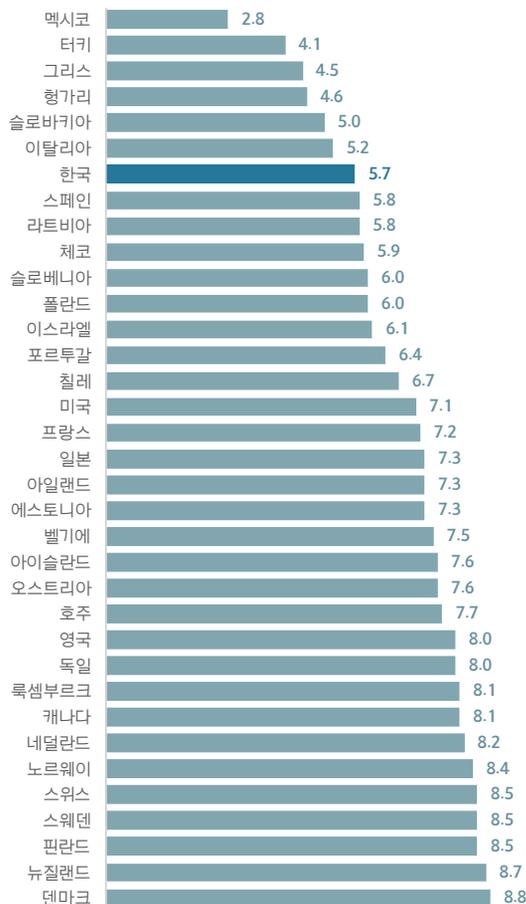
OECD 주요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핀란드, 호주, 영국, 미국 등은 2000년에 비해 낮아졌고 일본과 한국 등은 높아졌다. 핀란드의 경우 2000년에 비해 부

패인식지수가 떨어지기는 하였지만(10점→8.5점) 꾸준히 상위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해마다 조사대상국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계 순위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전체 조사대상국 중 세계 순위의 백분율을 알아보는 것이 유용하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2000년 상위 53.3%에서 2009년 상위 21.7%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된 후 25%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2018년에는 상위 25.0%에 위치해 있어 전년(28.3%)보다는 소폭 개선되었다.

2018년 주요국의 부패인식 지수

단위: 점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

월드뱅크 등 13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전문가들에게 각 국가 별로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해 조사. 주요 질문 내용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정부예산 배정과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설명할 수 없는 특수공무비용이 존재하는가?", "공공재원에 대해 감사하는 독립기구가 존재하는가?", "부정부패에 대해 고발한 내부 고발자, 언론인 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 등임

시민의식

Civic consciousness



정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책무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개인의 의무와 관련된 8개 항목별 중요도 응답점수(7점 만점)의 산술평균

2018년 5.54점, 전년대비 0.03점 증가

시민성은 한편에서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거나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하는 시민권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이나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정도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사회의 질 지표이다.

시민의식은 시민의 의무와 덕목을 보여주는 8개 항목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로 측정되며,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②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③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④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⑤ 사회 또는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⑥ 다른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⑦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⑧ 국가 위기시 기꺼이 군복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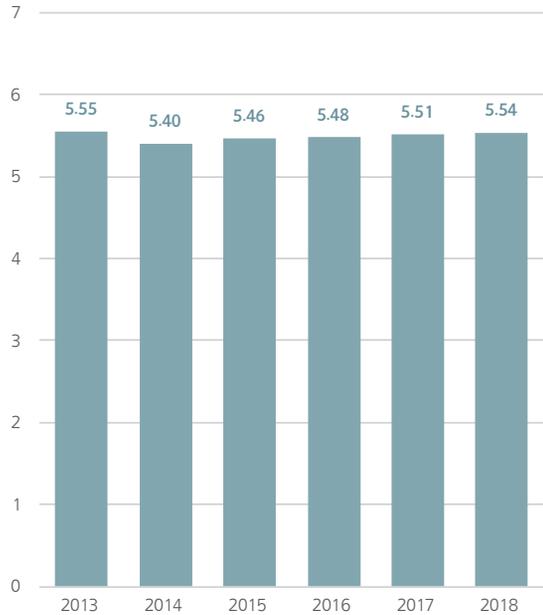
시민의식은 2018년 5.54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2013년 5.55점에서 2014년 5.4점으로 감소한 이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세금 납부'와 '법, 규칙 준수'가 6.1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사회, 정치단체 활동'은 4.6점으로 중요도가 낮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민의식이 높다. 19~29세의 시민의식은 5.4점으로 나타난 반면, 50대는 5.6점, 60대는 5.6점으로 높다.

2013~2018년 시민의식

단위: 점/7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년 항목별 시민의식

단위: 점/7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원봉사 참여율



Voluntary work participation rate

정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19년 16.1%, 2017년보다 1.7%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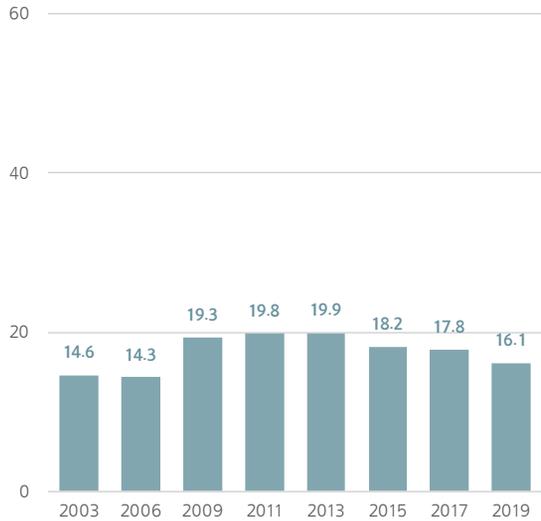
자원봉사는 정부의 강제나 시장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이타주의의 발현이다. 자원봉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을 주어 시민의식과 공공성이 고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 사회적 결속과 유대가 높아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며, 이는 다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낳는다.

자원봉사참여율은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되며, 2003년에서 2006년까지 14% 수준이었다가 2009년 19.3%로 증가한 후 18-19%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감소하였다. 2019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6.1%로 2017년(17.8%)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남자 15.1%, 여자 17.0%로 여자가 약간 높은 수준이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20세 미만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6.1%인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 20% 이하의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 20세 이상의 연령대 중에서는 40대(15.4%), 50대(12.6%)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20세 미만의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0대와 50대도 학령인구의 부모세대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다.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졸업 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활동이 자발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교과과정이나 내신성적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3~2019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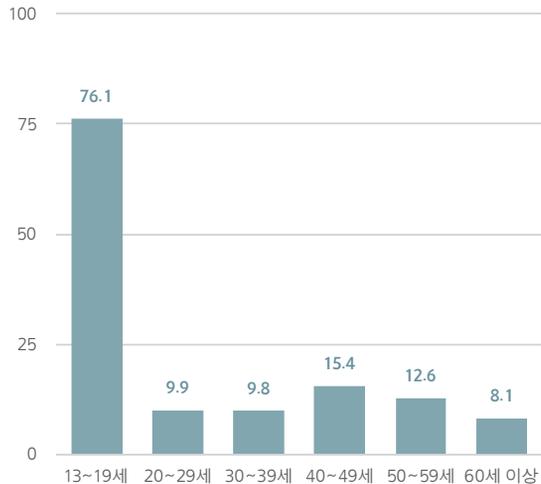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석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19년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대인신뢰도



Interpersonal trust

정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

2018년 69.2%, 전년대비 3.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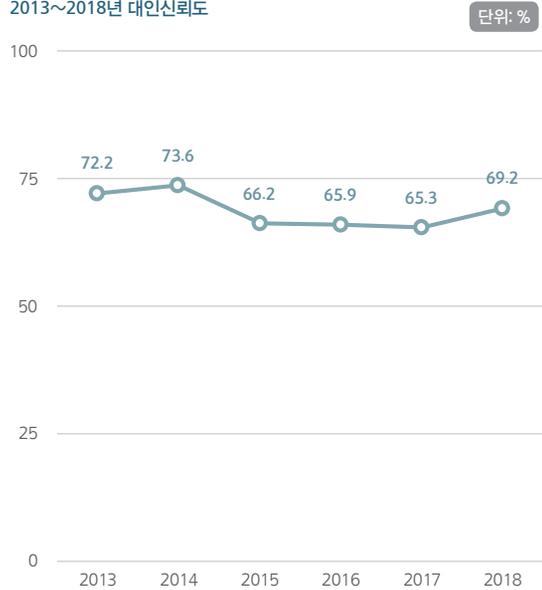
대인신뢰도는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로 측정한다.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범위가 좁아진다. 뿐만 아니라 서로 불신하는 집단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거나 불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본이 증대하며 사회적 유대 또한 돈독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 정도를 보여주는 대인신뢰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대인신뢰도는 2013년 72.2%에서 2017년 65.3%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8년에는 69.2%로 전년보다 3.9%p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대인신뢰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대인신뢰도가 71.7%로 도시지역(68.7%)보다 약간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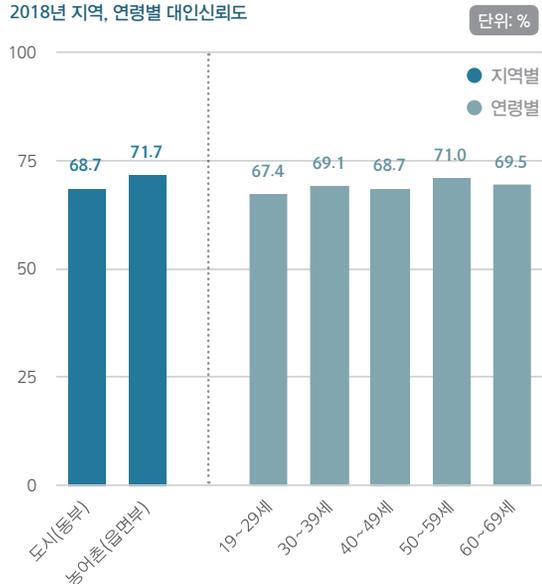
연령별로는 50대의 대인신뢰가 7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9~29세의 대인신뢰도는 67.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3~2018년 대인신뢰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년 지역, 연령별 대인신뢰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1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웰빙이란?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 특히 개인 수준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객관적인 지표들이 삶의 질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조건들의 합은 개인이 느끼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주관적인 지표는 객관적인 측정치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포섭하지 못하는 삶의 측면들을 담아주는 중요한 보완적인 측정 장치이면서 객관적 측정이 주관적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관적 웰빙의 측정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나뉜다. 인지적 요인은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개인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잣대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 전체 혹은 영역별 만족감을 평가한다. 정서적 요인은 일상의 정서적 경험으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로 측정한다.

최근 추세

주관적 웰빙 영역에 포함되는 3개 지표의 전년대비 최근 추세를 보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 부정정서 모두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삶의 만족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다.

측정지표

- ① 삶의 만족도
- ② 긍정정서
- ③ 부정정서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정의 현재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

측정 방법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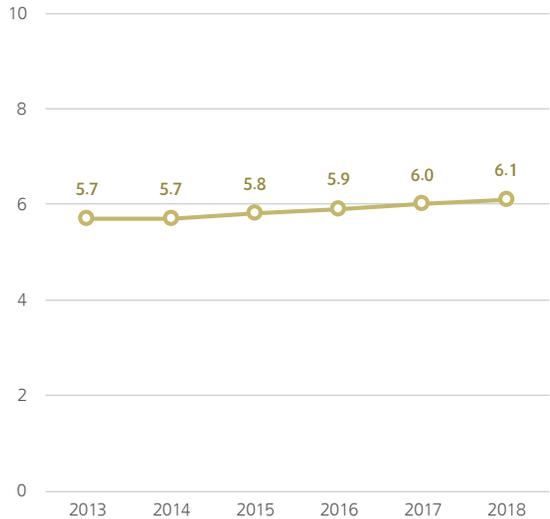
2018년 6.1점, 전년대비 0.1점 증가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인지적 인 측면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삶의 만족도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삶의 질은 다차원적이고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11점 척도로 측정된 삶의 만족도는 2018년 6.1점으로 2017년 6.0점에 비해 0.1점 증가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2013년 5.7점에서 증가추세 보인다. 삶의 만족도는 남자(6.0점)보다 여자가 0.2점 더 높아 성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5.9점으로 가장 낮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13~2018년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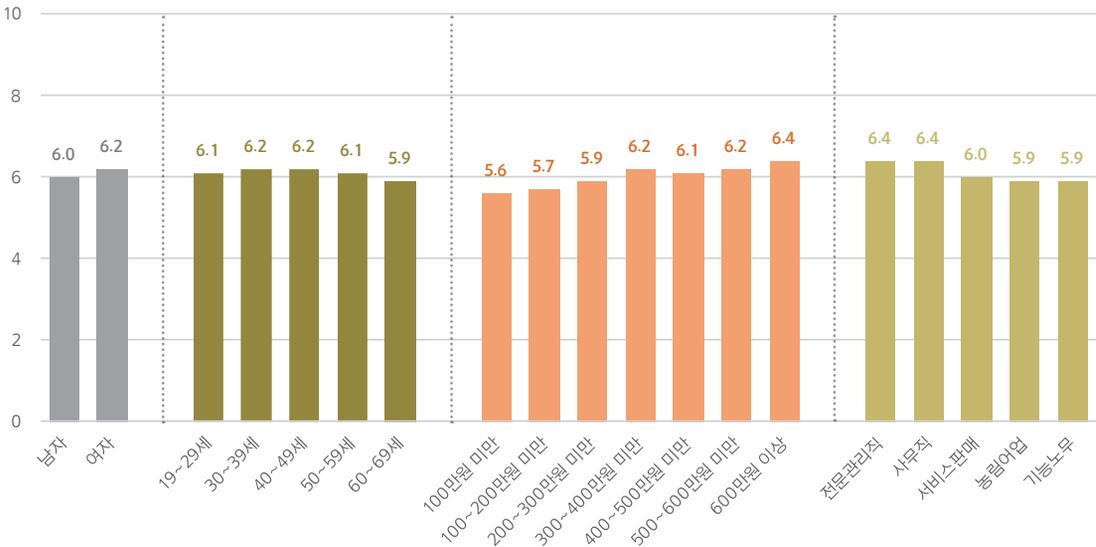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년 성, 연령, 가구소득, 직업별 삶의 만족도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성별 ● 연령별 ● 소득수준별 ● 직업별

소득수준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6점인데 비해,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6.4점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0.8점 높다. 직업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이 둘 다 6.4점으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 판매직은 6.0점, 농림어업과 기능노무직은 5.9점으로 가장 낮다. 소득수준과 직업은 연관성이 높은 변수로 소득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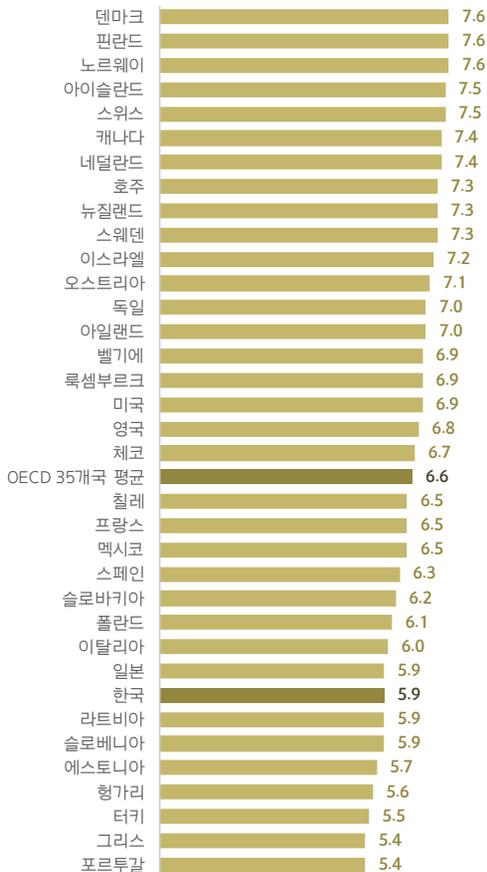
삶의 만족도는 OECD에서 작성되는 ‘더 나은 삶 지수 BLI’의 지표 중 하나이며, UN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활용

되는 지표이다. 두 지표 모두 국가간 비교를 위해 갤럽월드 폴 Gallup World Poll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2015~17년 5.9점으로 2019년 OECD BLI에서는 40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다. OECD 평균(6.6점)보다 0.7점 낮으며, 이탈리아,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북유럽 국가들이 7.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7.3점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OECD 35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헝가리, 에스토니아 5개 국가에 불과하다.

2015~2017년 OECD 국가 삶의 만족도

단위: 점/10점



출처 OECD, Better Life Index

긍정정서



Positive emotions

정의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정서(행복)를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것

측정 방법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평균점수(0~10점)임

2018년 6.6점, 전년대비 0.1점 증가

긍정정서는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이다. 개인들이 경험하는 긍정정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제 얼마나 자주 '행복' 했는지로 측정된다.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긍정정서(11점 척도)는 2018년 6.6점으로 2017년에 비해 0.1점 증가하여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14년 6.2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였다.

긍정정서는 성별 차이는 없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삶의 만족도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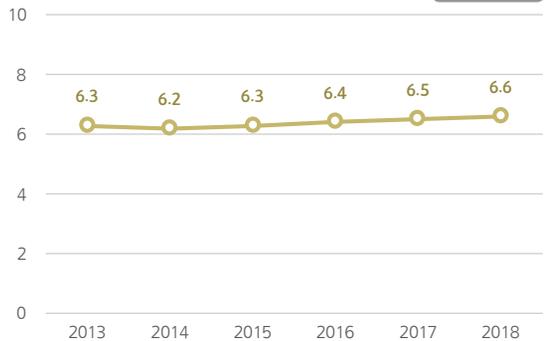
가구소득별로 비교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정서가 더 높아 3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6.6점 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6.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00만원 미만 집단은 6.1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0.5점이 낮다. 이러한 것은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긍정정서가 계속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서 긍정정서가 6.9점으로 높은 반면,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노무직은 6.3~6.5점 사이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013~2018년 긍정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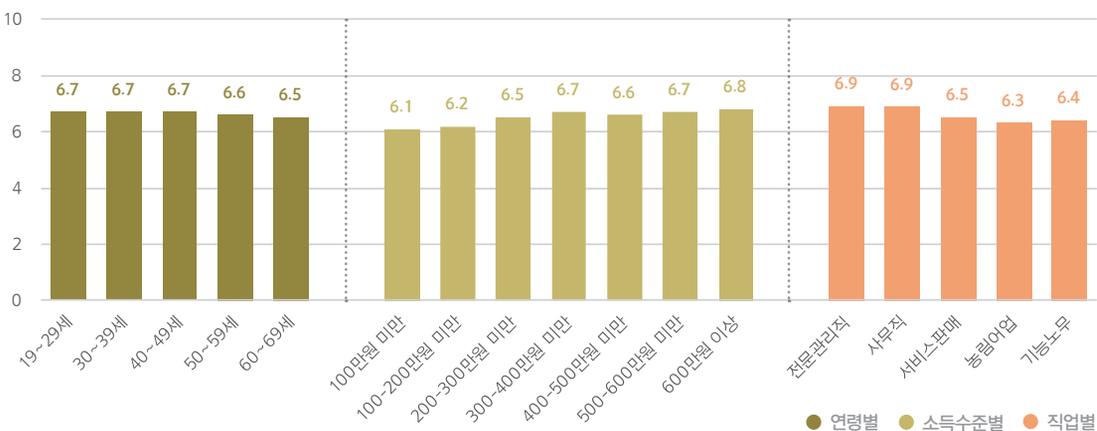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년 연령, 소득수준, 직업별 긍정정서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부정정서

Negative emotions



정의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정서(걱정, 우울감)를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것

측정 방법 어제 경험한 (걱정 평균점수 + 우울감 평균점수) ÷ 2

2018년 3.3점, 전년대비 0.3 감소

부정정서는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긍정정서와 함께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이다. 개인들이 경험하는 부정정서는 어제 얼마나 자주 ‘걱정’ 했는지, ‘우울감’을 느꼈는지로 측정된다.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하나의 수치로 다루지 않고, 각각을 나누어 보는 것은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는 양극단에 위치하는 반대의 개념이 아닌 두 지표가 서로 다른 내용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얼마나 자주 ‘걱정’과 ‘우울감’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부정정서는 2018년 3.3점으로 2017년보다 0.3점 감소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0점, 4.1점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부정정서의 차이는 없어 삶의 만족도나 긍정정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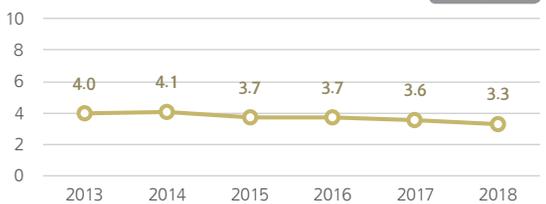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삶의 만족도나 긍정정서와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정정서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30대에서 3.2점으로 가장 낮고, 40~50대에서 3.4점

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수준별로 비교해보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정서가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600만원 이상 집단에서 부정정서가 강화되는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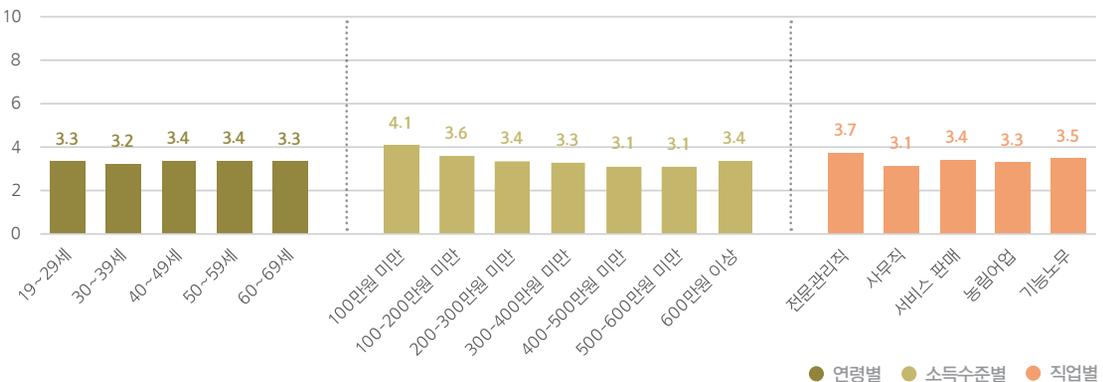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와의 이러한 차이는 직업별로 비교해보면 더 뚜렷이 나타나는데, 부정정서는 전문관리직에서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2013~2018년 부정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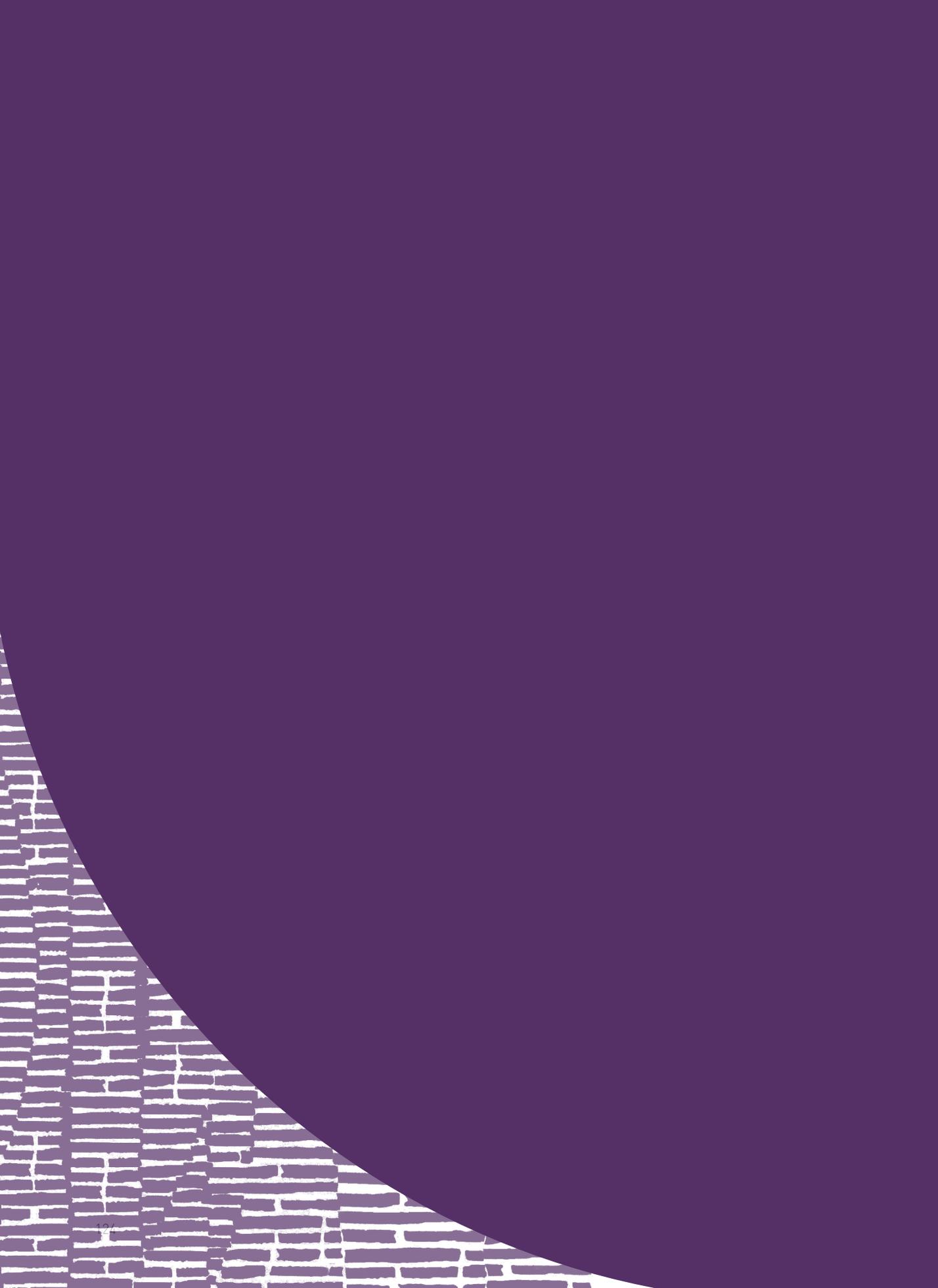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년 연령대별 소득수준, 직업별 부정정서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Appendix

부록

지표 자료출처

통계자료		국민 삶의질 지표
01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02	가계동향조사	가구중위소비, 문화여가 지출률
03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 실업률
04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0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06	국민계정	1인당 국민총소득
07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범죄피해율
08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율
09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시간 충분도, 여가시간
10	국민여행실태조사	1인당 여행일수
11	도시계획현황	1인당 도시공원면적
12	범죄분석통계	가해에 의한 사망률
13	사망원인통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14	사회조사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 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학교교육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비부담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적 고립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야간보행 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토양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기후변화 불안도
15	사회통합실태조사	지역사회소속감, 대인신뢰도, 기관신뢰도, 정치적 역량감, 시민의식,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16	산업재해현황	산재사망률
17	상수도통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18	생명표	기대수명
19	인구총조사	통근시간
20	장래가구추계	독거노인 비율
21	주거실태조사	1인당 주거면적, 주거환경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택임대료 비율(소득대비), 자가점유가구 비율

통계자료	국민 삶의질 지표
22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대학졸업자 취업률
23 화재발생 총괄표	화재사망자수
24 대기오염도 현황	미세먼지농도(PM _{2.5})
25 교육 기본 통계	유아교육취원율
26-1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투표율
26-3 OECD Earnings	저임금근로자 비율
26-4 OECD Education at a Glance	고등교육이수율
26-5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가계부채 비율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26-6 WHO World health statistics	건강수명

01

가계금융복지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조사대상 : 1인이상 일반가구
- 조사규모 : 전국 약 20,000가구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02

가계동향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분기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조사대상 : 전국 거주 일반가구
- 조사규모 : (지출) 연간목표 17,400가구, (소득) 약 8,000가구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가구중위소비, 문화여가지출률

03

경제활동인구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월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대상→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조사대상 : 개인
- 조사규모 : 전국 35,000가구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고용률, 실업률

04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작성기관 : 경찰청
- 작성목적 :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행정통계, 경찰서→지방경찰청→경찰청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도로교통사고사망률

0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작성기관 : 고용노동부
- 작성목적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사회보험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조사대상→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 조사대상 : 사업체(전국)
- 조사규모 : 근로자 1인 이상 33,000개 사업체, 표본사업체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100만명 내외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06

국민계정

- 작성기관 : 국민은행
- 작성목적 :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생산활동 및 경제성장의 추이를 추계하여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경제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분기
- 작성체계 : 가공통계, 일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 → 한국은행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1인당 국민총소득

07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작성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율을 살펴보고 범죄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범죄 현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작성주기 : 2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가구조사(면접원)→수퍼바이저→실시기관 내부검토→KIC연구원 연구팀
- 조사대상 :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조사규모 : 2017년 6,100 가구 및 가구원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범죄피해율

08

국민영양건강조사

- 작성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작성목적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 통계 산출과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 파악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근거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설문, 검진 및 계측)→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조사대상 : 가구(만1세 이상 가구원)
- 조사규모 : 11,520여 가구 및 가구원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비만율

09

국민여가활동조사

- 작성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작성목적 : 국민들이 여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정부의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주)나이스알앤씨→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 조사대상 : 만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규모 : 19,000명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여가시간충분도, 여가시간

10

국민여행실태조사

- 작성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국가 관광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조사전문기관→문화체육관광부
- 조사대상 : 만15세 이상 개인
- 조사규모 : 개인 월 4,000명(48,000명)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1인당 여행일수

11

도시계획현황

- 작성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작성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도시행정, 도시정책, 도시연구, 도시개발,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행정통계, 시·군·구(도시과)→시·도(도시과)→한국토지주택공사(공간정보처)
- 보고단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공표범위 : 시군구
- 활용지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12

범죄분석통계

- 작성기관 : 검찰청
- 작성목적 :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적·질적 변화를 조사 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행정자료, 전국 각 지방 경찰청→경찰청→검찰청
- 보고단위 : 개인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가해에 의한 사망률

13

사망원인통계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가공분석(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과 통계법에 따라 전국 시구 및 읍면동에 신고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아·모성·태아사망 건에 대한 조사자료로 작성)
- 보고단위 : 개인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자살률

14

사회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작성주기 : 1년(10개 영역에 대해 격년 조사)
 짝수년도: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홀수년도: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대상→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조사대상 : 가구의 만13세 이상 가구원
- 조사규모 : 목표가구 18,576가구의 전체 가구원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실천율, 스트레스인지율, 학교교육효과, 학교생활만족도, 교육비부담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적 고립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단체참여율, 자원봉사참여율, 야간보행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대기질만족도, 수질만족도, 토양환경만족도, 소음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 기후변화불안도

15

사회통합실태조사

- 작성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작성목적 : 우리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가치관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제공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전문조사원→전문조사기관→한국행정연구원
- 조사대상 : 만19~69세 이하 가구원
- 조사규모 : 개인 8,000명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지역사회소속감, 대인신뢰도, 기관신뢰도, 정치적역량감, 시민의식,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16

산업재해현황

- 작성기관 : 고용노동부
- 작성목적 : 재해발생 상황과 원인을 파악·분석하여 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월
- 작성체계 : 행정자료, 산업재해조사표 : 사업체→지방고용노동청(지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 보고단위 : 전국 사업체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산재사망률

17

상수도통계

- 작성기관 : 환경부
- 작성목적 : 전국의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상수도시설의 적정 설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행정자료, 구·시·군→시·도→상하수도협회→환경부
- 보고단위 : 전국 162개 수도사업자
- 공표범위 : 시군구
- 활용지표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래의 기대여명을 산출하여 보건·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의 기초자료 및 장래인구 추계작성, 국가간 경제·사회·보건 수준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가공통계, 기초자료 수집→인구동태신고자료 보정→연령별 사망률 산출→연령별 사망확률 산출→연령별 사망자수 및 생존자수 산출→연령별 정지인구 산출→연령별 총 생존년수 산출→연령별 기대여명 산출
- 보고단위 : 전국 및 시도의 성, 연령별 사망자수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기대수명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향조사 표본틀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전수)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표본) 조사원 → 동·읍·면 → 구·시·군 → 시도 → 통계청
- 작성대상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 공표범위 : 동·읍·면
- 활용지표 : 통근시간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가구의 양적, 구성적 변화를 추정하여, 미래의 가족 형성과 해체 양상에 대비하고 노인, 여성, 아동 등 정부의 가족 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주기 : 5년
- 작성체계 : 가공통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에 대한 가구주의 비율인 가구주율을 적용하여 가구를 산출
- 작성대상 : 시도 일반가구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독거노인 비율

- 작성기관 : 국토교통부
- 작성목적 : 지역별, 계층별 주거실태 파악, 주택 소요량 및 선호도 파악을 통해 공급계획 지원, 주거 복지 소요 파악,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가구→조사전문기관→연구기관→국토교통부
- 조사대상 : 전국 가구
- 조사규모 : 표본 60,000가구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1인당 주거면적, 주거환경만족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주택임대료 비율(소득대비), 자가점유가구 비율

22 _____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작성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작성목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진학 등 진로현황 분석을 통해 진로지도 및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가공통계, 조사대상→고등교육기관→한국교육개발원
- 작성대상 : 조사대상연도 전국의 전년도 후기(8월) 졸업자와 당해연도 전기(2월) 졸업자가 있는 대학의 졸업자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대학졸업자 취업률

23 _____

화재발생 총괄표

- 작성기관 : 소방청
- 작성목적 : 전국의 화재현황을 취합, 분석하여 화재발생 추이 및 원인, 장소별로 분석하고 이를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보고자료, 소방서→시도 소방본부→소방청
- 작성대상 :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산불은 산림청에서 파악)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화재사망자수

24 _____

대기오염도 현황

- 작성기관 : 환경부
- 작성목적 : 전국 주요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도 및 산성강화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구온난화 물질의 농도측정,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여 적절한 대기보전정책의 수립, 시행 및 국가간 환경보전 협력방안 관련 대책의 기초자료로 이용
- 작성주기 : 월
- 작성체계 : 보고자료, 시도(자동측정장비)→한국환경공단(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 작성대상 : 전국 대기오염 측정망 510여 개소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미세먼지농도(PM_{2.5})

25 _____

교육기본통계

- 작성기관 : 교육부
- 작성목적 : 국가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자의 교육기초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보고자료, 유초·중등,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학교(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 작성대상 : 전국 유.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유아교육취원율

26

그 외 연보 및 국제통계

- 국제투명성기구 : 부패인식지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투표율
- OECD Earnings : 저임금근로자 비율
- OECD Education at a Glance : 고등교육이수율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가계부채 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 WHO World health statistics : 건강수명

국민 삶의 질 2019

발행인 전영일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발행일 2020년 3월

디자인 동그란북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7층

전화. 042-366-7315

동그란북

eumeumeum20@gmail.com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 2019

